

4년의 변화,
더 밝은 미래로의 도약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제9차 위원회 -

일시 | 2021. 4. 20.(화) 14:00

장소 | 정동 1928 아트센터 2층 이벤트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회의 개요

- 일 시 : '21. 4. 20.(화) 14:00 ~ 16:00
- 장 소 : 정동 1928 아트센터 2층 이벤트홀 (舊 구세군 중앙회관)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30, 주차장 미비로 필요시 S타워에 주차
- 참석대상 : 위원장, 당연직위원(5), 위촉위원(24)
- 내 용 : 임기 만료 위원 공로패 수여식, 주요 안건 보고
- 주요 안건(안)
 - (보고)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안)
 - (보고) 뉴노멀시대 수산·어촌 미래비전 마련(안)
 - (보고)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안)
 - (참고) 제8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 세부 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 개최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14:50 (45')	○ 위원 소개 및 공로패 수여식	사회자
14:50~15:00 (10')	○ 농특위 1기 성과영상 상영	사회자
15:00~15:05 (5')	○ 성원보고 및 제8차 회의 결과보고	사회자
15:05~15:10 (5')	○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5:10~15:25 (15')	○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안)	사무국장
15:25~15:40 (15')	○ 뉴노멀 시대 수산·어촌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안)	농수산식품팀장
15:40~15:55 (15')	○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안)	농어업분과위원장 (축산소분과장)
15:55~16:10 (15')	○ 위원장 마무리말씀 및 폐회	위원장

※ 회의 일정, 방식, 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CONTENTS

○ 1호 보고 안건	1
-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안)	
○ 2호 보고 안건	59
- 뉴노멀 시대 수산·어촌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안)	
○ 3호 보고 안건	97
-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안)	
(참 고)	127
제8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

2021. 4.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목 차

〈요약〉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 ..	5
Ⅰ. 취지와 제안이유	8
Ⅱ. 농어업·농어촌의 위기와 대전환	13
Ⅲ.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목표	18
Ⅳ. 농정틀 전환의 중점 과제와 정책수단	20
Ⅴ. 농정틀 전환의 세부 과제와 정책수단	23
Ⅴ-1. 농정틀 전환의 세부 목표와 과제	23
Ⅴ-2. 농정틀 전환의 정책수단과 추진체계	50
〈총괄표〉 농정틀 전환의 목표와 정책수단별 세부과제	57

〈요약〉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

1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위기 (국가·국민의 위기)

-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재앙이며, 코로나19는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로 다음과 같은 위기 초래
 - ① [기후] 기후위기와 농어업·농어촌 생태환경 악화
 - ② [먹거리] 식량안보·먹거리 불평등 등 국민 먹거리의 위기
 - ③ [지역] 농어촌 과소화 및 도시 과밀화의 위기
 - ④ [안전망] 농수산물 가격불안, 도농소득격차, 재해 등 농어민 안전망 위기

2 과거 농정과 지속가능성의 위기

- 과거 생산주의, 경쟁력주의, 설계주의 농정에 기반한 농어업발전전략은 농어업 양적 성장에 기여
-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한계 발생
 - 환경 악화, 고령화 및 삶의 질 저하, 농수산물 수급·가격불안, 도농소득격차 확대, 국민먹거리 불안과 불평등 심화, 자치농정역량의 위축 등
- 과거 농정으로는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우므로 문재인 정부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대전환’ 추진

3 농어업·농어촌 대전환의 필요성

- ① 농어업·농어촌의 대전환 없이 기후·먹거리 위기 해결이 어려움
- ② 과거 농정의 전환 없이는 농어업·농어촌은 지속가능 하지 않음
- ③ 농어업·농어촌은 국가존립과 국민행복 실현의 필수요소

* (20.11.11) 농업인의 날 기념사 : 우리의 미래가 농업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농촌이 잘사는 나라, 농민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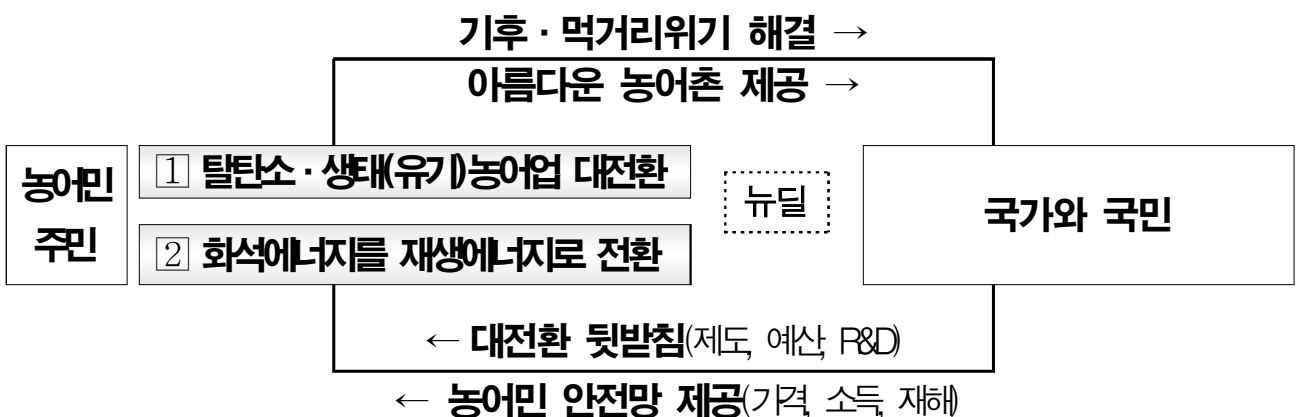
4 농정틀 전환의 주요내용

1 농어민 · 농어촌주민의 약속

- ① 탈탄소·생태(유기)농어업으로 대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 (‘30년) 화학비료·농약·항생제 50% 감축, 친환경농업비중 30%로 확대, 곡물자급률10%p 향상
 - 경축(자원)순환형 축산 전환 및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 숲 탄소흡수력 제고, 국내산 목재로 콘크리트·플라스틱 대체
 - 바다속 탄소흡수원 확충(바다숲·목장 조성) 및 지속가능어업관리체계(TAC)전환
- ② 농어촌 자원 이용하여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 농어민과 주민공동체 주도 이익공유형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 : 태양광, 풍력
 - 농어업부산물(목재, 축분 등) 활용 바이오에너지로 에너지자립 지역·마을확대

2 국가와 국민의 약속

- ① 농어업·농어촌의 대전환 뒷받침(예산, 제도, 연구개발)
 - 공익형직불제 예산(1조원) 증액,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예산 5% 유지
 - 관련 법 제·개정, 연구개발(R&D)
- ②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안전망 제공(가격, 소득, 재해)
 - 농수산물 가격안정 종합체계구축, 농가수입(소득)보장보험도입
 - 재해국가보상체계강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사회보험 전환



〈그림〉 농정틀 전환의 주요내용

5 농정틀 전환의 비전 체계

비전

기후·먹거리·지역·안전망 위기 해결을 주도하여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

목표

- ◆ 온실가스 순제로 및 생태환경복원 선도하는 농어업으로 전환
- ◆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먹거리 주권 확립
- ◆ 농어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산과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 ◆ 농어민 삶의 안전망 구축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중점 과제

탈탄소 생태유기 농어업 전환	① ('30년) 화학비료·농약·항생제 50%감축 ② ('30년) 친환경농업 비중 30%로 확대 ③ 경축순환형 축산 전환,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등 ④ 산림분야 탄소 저감 및 흡수 기능 증진 ⑤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수산업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 먹거리 시스템 구축	⑥ ('30년) 곡물자급률제고(10%p↑) 및 적정농지확보 ⑦ 국가식량계획 수립 및 공공급식 전면화 ⑧ GMO완전표시제 도입 등 먹거리 안전성 강화
농어촌재생에너지 확대 장주여건 개선	⑨ 주민주도형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 ⑩ 바이오에너지(축분, 목재) 활용 에너지자립 지역·마을 확대 ⑪ 농어촌공간계획 수립 및 365생활권 구축
농수산물가격안정 농어가소득안전망 구축	⑫ 공공급식 공급체계 확립(공공수매비축제 등), 디지털통합 플랫폼 구축 등 수급·가격안정 종합체계 완비 ⑬ 농가수입(소득)보장보험 도입, 농어업재해 국가보상체계 강화,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사회보험 전환 ⑭ 미래 농어업·농어촌 주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수단

예산·재정	작불제 예산 1조원 증액 및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5%유지
법·제도	국가먹거리기본법 및 농어촌공간계획법 제정 등
추진 체계	지방분권형·민관협치형 농정 추진체계 확립
추진 역량	국민참여형 사업추진, 국가·시민사회·농어민 사회협약 체결
기술 혁신	스마트 첨단기술 적용, 연구개발 확대로 혁신 뒷받침

I. 취지와 제안이유

1 농정틀 전환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 보완 필요

- (문재인정부 농정)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정틀전환을 추진
- (농정비전 제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 (’19.12.12)를 통해 새로운 농정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농정 틀의 전환 약속
 - *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등 5대 전략과 과제를 제시
- (농정개혁 전략) 농특위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 (’19.12.3)하여 농정틀 전환의 어젠다와 추진전략을 제시
 - 12대 개혁어젠다 : ①공익기여직불 예산제도로 전환 ②농수산물가격과 농어가경영 안정은 국가기본책무 ③농어촌 다양한 자원과 사회적경제 활용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촉진 ④청년·여성 등 농어촌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주체 형성 ⑤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인구 20%확보 ⑥기후변화 대응과 농어촌의 자원보전 및 환경성 강화 ⑦국민건강과 지역순환경제를 강화하는 먹거리체계 확립 ⑧불법 농지소유 근절과 농민의 농지이용권 철저보호 ⑨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협치에 기반한 농정추진체계 개편 ⑩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조합원 중심의 농협·수협·산림조합 개혁 ⑪남북농림수산 협력 강화로 평화경제 초석 마련 ⑫지속가능 농정과 분권 농정 실현을 위한 조직·제도 개혁
 - 3대 중점 추진전략 : ①직불 중심 농정 정착을 위한 재정개혁과 투융자제도 개선 ②자치농정·분권농정 정착을 위한 농정추진체계 개편 ③농어업·농어촌 혁신기반 정비
- (수정·보완) 전국민의 생활방식 변화를 불러온 각종 위기와 그 대응책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를 수정·보완
 - 기존 비전전략을 코로나19 등 변화된 상황과 대응 정책을 반영하여 개선
 -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인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고 문명사적 전환 과제인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을 실현하는 견인차 역할 수행
 - * (’20.11.11) 농업인의 날 기념사 : 국가 식량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이 되도록 할 것

2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7.14)
 - * '25년까지 160.0조원(국비 114.1조원) 투자, 일자리 190.1만개 창출
-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 뉴딜 분야별 세부계획(10대 대표사업*) 발표
 - *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정부, ③스마트의료 인프라, ④그린 스마트 스쿨, ⑤디지털 트윈, ⑥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스마트 그린 산단, ⑧그린 리모델링, ⑨그린 에너지, ⑩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 (국회개원연설, '20.7.17)
-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뉴딜로 진화·확장시켜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선포(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20.10.13)
 - * '20년말 현재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지역균형뉴딜로 구성
-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20.10.28)과 추진전략('20.12.10) 발표
- 기후위기 극복,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
 -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
 -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
 -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
-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 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능동적(Proactive) 대응”
 - 산업구조 저탄소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선도적 대응으로 탄소중립·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 달성
 - (적응)경제구조의 저탄소화, (기회)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과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강화의 3+1전략 추진 발표

□ EU, 「유럽 그린딜」 발표 ('19.12.11)

- 2050년까지 탄소중립(순배출제로), 기후변화 억제·탄소중립경제의 선도자 역할 수행 목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10년간 1조 유로('20.1월발표)
- 사회대통합 지역빅뉴딜 전략으로 ‘차세대 유럽연합’ 발표, EU 출범 이래 최대인 약 1천조원(7,500억 유로)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
 - ‘녹색전환 및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초점, 계획안에 ‘그린딜’ 포함
 - 모든 지원은 녹색전환 방향과 일치시켜 예산의 25%는 기후친화적 지출에 사용
- 농업분야 : 목표(지속가능 식품시스템구축), 전략(‘농장에서 식탁까지’)
 - 농식품 가치사슬 총6개 부문(식품생산, 식량안보, 가공·유통·소매·서비스, 식품소비, 음식물쓰레기, 식품공급망)에서 지속가능 목표와 개혁 방안제시
- * (2030년) 농약 50%감축, 비료 20%감축, 항생제 50%감축, 음식물쓰레기 50%감축, 유기농비율 25%로 확대(현8%), EU로 수출하려면 EU 환경기준 준수, 지속가능 식품소비 등
- CAP 개혁과 연동하고 향후 EU CAP 예산의 40%, 해양어업기금의 30%를 기후행동 목표에 공헌하도록 설계, 집행

□ 미국의 그린뉴딜 : 조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등

- 미 의회 하원 그린뉴딜 결의안 제출('19.2.7)
 - 10년내 온실가스 배출제로,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전력수요 100%충당 등
 - 농업분야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농민과 협력. 이를 위해 가족농업지원,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체계 구축 등
- 조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그린뉴딜 공약
 - '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달성 목표
 - 4년간 2조달러(약 2,400조원) 투자
 - '35까지 발전소 탄소배출 중단, 10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에너지 고효율 공공주택 150만호 공급, 청정 경전철·버스 시스템 투자 등

3 탄소중립 선언의 취지와 의미

- 생태환경 훼손형 산업과 인간 활동방식으로 초래된 위기(대재앙) 극복
 -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세계 유행에 따른 대재앙으로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 발생(봉쇄,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
 - (기후위기)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저지하지 못한다면 대재앙 초래. 코로나19로 위기의 심각성 인식확대
 - (불평등)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에 의해 심화되는 양극화 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협
- 기후·감염병·불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경제시스템 대전환
 - 인류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기반 경제를 탈탄소 경제사회로 전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및 분배체제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
 -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거대한 실험(천문학적 예산 투입)
 - 탄소기반 경제를 탈탄소 경제사회로 전환시키는 전사회적 국가주도 프로젝트로 세계 각국이 추진

4 ‘농산어촌 지역균형 뉴딜’로의 확장 필요성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이전에 ‘농어촌 그린뉴딜’ 제시
 - 코로나19 발생 전 도농격차 심화와 양극화 해소, 침체된 농산어촌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농산어촌 그린뉴딜을 선제 제안
 - * ('19.12.12) 타운홀미팅보고대회 기념사 :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등 전사회적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마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규모 시그니처사업 중심으로 편성, 지역 및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책은 다소 부족

□ 한국판뉴딜은 지속적으로 진화, 지역균형뉴딜로 발전

- 한국판 뉴딜은 지속적인 확장 요구를 받아왔으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임을 천명
 - * ('20.7.21) 21대 국회 개원 연설 : 한국판 뉴딜은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
- '20년 10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
 - 한국판 뉴딜의 절반이 지역에 투자되므로 지역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 및 확산의 핵심 축 중 하나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사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촉매제로 작동하여 지역주민이의 가시적 성과를 체감
 - 지역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돌파구로 작용

□ 위기시대 대전환 프로젝트이자 새로운 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과 이를 확장하여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지역균형 뉴딜은 농산어촌으로 확장 필요

- 한국판 뉴딜의 혁신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민간대기업 주도의 디지털뉴딜 중심, 순배출제로 등 과감한 비전과 로드맵이 설정이 부재하다는 비판 제기
- 지역균형뉴딜의 3대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추진,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추진,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의 추진되지만 여전히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 존재
-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인 그린뉴딜은 '농어촌'에서 '농어민과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야 안착될 수 있음
-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뉴딜로의 확장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진화로 농산어촌 지역균형 뉴딜까지 확장, 사각지대 해소할 필요
- 유럽 그린딜 등에서 생물다양성과 함께 주요한 정책 분야로 채택되는 농식품 영역을 기존 농정틀 전환과 결합하여 추진 할 필요

II. 농어업·농어촌의 위기와 대전환

1 농어업·농어촌과 국가·국민의 위기

① 기후 위기와 생태환경 악화

- 기후위기는 지구에 닥친 대재앙으로 전세계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
 - 인류 생존 위협, 지구온도 상승 1.5도로 저지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18)
- 농어업분야는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피해분야
 - 과거 농정으로 정립된 산업적 농식품체계(생산·가공·유통·소비 등)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중 하나
 - * 전세계 온실가스배출비중(18) : 비먹거리(74%), 먹거리(생산·가공·유통분야, 26%), Poore & Nemesek(2018), OurWorldinData.org
 - 또한 과거 생산주의 농정(생산성증대, 경쟁력제고 중심)으로 생태환경 악화
 - * 화학비료 과다 사용(OECD평균대비 질소3.4배, 인7.7배), 고밀도 축산(OECD평균 대비 가축밀도 3.1배) 및 양식 등으로 한국농어업의 환경부하 세계 최고 수준
 - 기후위기에 따른 농어업 피해 심화 : 병충해·자연재해 피해증가, 작물 생육장애·식량생산감소 및 품질저하·가축질병증가 및 생산성저하 등

② 식량안보·먹거리 불평등 등 국민 먹거리의 위기

- 기후위기는 식량안보를 위협, 코로나19로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취약성 확인
 - * 코로나19이후 (러시아)밀수출 제한, (필리핀)쌀비축 확대, (베트남)쌀 수출계약 일시 중단
- 쌀 이외 주요 곡물 대부분 수입의존, 안전성 논란 GMO수입 세계 상위권
 - * 곡물자급률('18, %): 쌀 82.5, 밀 0.7(연 2,331천톤 수입), 콩 6.3(연 1,338천톤 수입)
- 식생활에 따른 건강비용*, 취약계층 먹거리 불평등** 등 사회문제 증가
 - *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 ('15) 9조1,506억원 → ('16) 11조5,000억원
 - **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 ('10) 10.0% → ('17) 13.1%

③ 농어촌 과소화·도시 과밀화 등 지역의 위기

- 초고령화, 과소화로 농어촌 소멸 위기 심화
 - * 향후 30년 내 226개 시·군·구의 39%(89개)가 소멸 위기(한국고용정보원, '18년)
 - * 농어촌 1,413개 읍·면中 84.2%가 초고령(고령인구 20%이상), 50%가 무출생 및 10인 이하 출생
 - * 지역소멸지수('18년) : (섬) 0.234, (어촌) 0.303, (농촌) 0.341, (도시) 1.208
- 도시과밀화에 따른 주택,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 코로나19이후 과밀화된 도시의 문제 부각

④ 농수산물 가격불안과 도농소득격차·재해 등 농어민 안전망의 위기

-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도농소득격차·재해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위협
- 자급율 22% 불과함에도 채소류 중심 가격폭락 되풀이, 기후위기로 재해심화
- 도농간 소득격차 및 농어가내 양극화 지속
 - *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소득(19), 농가 62.3%, 어가 80%, 임가 55.1%
 - * 소득5분위 배율(18) : (전국) 5.23 (농가)11.1

2 과거 농정과 지속가능성의 위기

* 농특위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19.12.3)에서 발췌

① 과거 농정의 농어업발전전략

- 과거 신자유주의 국가모델에서 채택한 농어업발전전략은 생산주의·경쟁력주의·설계주의에 기반한 농정
 - [생산주의(성장주의) 농정] 농업생산성 향상을 핵심 목표로 추구, 전업농 등 규모화된 농가 위주 농정 추진
 - [경쟁력주의(구조개선) 농정] 시장개방을 전제로 이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지상과제로 추구
 - [설계주의(보조금 위주) 농정] 중앙정부가 기획·예산배분·집행에서 절대적 주도권 행사

② 과거 농정에 의한 지속가능성의 위기

- 국가주도의 생산주의·경쟁력주의·설계주의 농정으로 농어업은 양적 성장과 구조조정을 추진
- 하지만 생태환경 악화, 먹거리 불안과 불평등 등 국민 먹거리의 위기, 농어촌소멸·도시과밀화 등 지역의 위기, 농수산물 가격불안·도농소득 격차 확대 등 농어가 안전망의 위기를 초래
 - 경쟁주의 보조금 지급 방식의 파편화된 세부 단위사업 추진으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
- 과거 농정으로는 당면한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실현 불가능하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농정틀' 전환 지속 필요

3 농어업·농어촌 대전환의 필요성

① 농어업·농어촌의 대전환 없이 기후·먹거리 위기 해결은 불가능

- 화석연료에 기반한 고투입 농업, 산업적 농식품체계는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 중 하나이지만 환경친화적 농어업 및 먹거리체계로 전환하고,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해결의 주도적 역할 가능

② 기존 농정의 전환없이 농어업·농어촌은 지속 불가능

- 과거 농정(생산주의, 경쟁력주의 등)은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성의 위기 및 기후·먹거리·지역·안전망의 위기를 초래
-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위해 농정틀 전환을 추진

③ 농어업·농어촌은 국가존립, 국민행복 실현의 필수요소

- 농어업·농어촌의 붕괴는 국민 행복실현을 위한 다원적기능(먹거리공급, 온실가스방지, 경관보전, 생태자원보호 등)의 상실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협

〈보론〉 기후위기사대와 농어업·농어촌

① 21세기는 기후위기의 시대

○ 국제적 동향

- UN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 2030년까지 CO₂ 배출 1/2로 줄이고 50년까지로 만들지 않으면 인류생존 위협(기후위기 보고서, 18년)
- EU, 그린딜을 제1국정과제로 채택 : 2050년 탄소중립목표, 탄소중립경제 선포, 탄소국경세 추진(21년)
 - * 탄소국경세 : 역내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수입품의 탄소배출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
- 미국, 민주당 바이든 후보(공약) : 2050년 100%청정에너지목표, 탄소국경세도입(25년), 2조달러 투자(약2400조원, 35년)

○ 산업계 동향

- 글로벌 기업 RE100 참여 및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 * 2050년까지 기업 필요전력 100%재생에너지 사용(RE100) 참여 기업 : 애플, 페이스북, 구글, 벤츠, 폭스바겐, 삼성(미국법인) 등 세계 240여개 기업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Black Rock) : 기후변화 투자위험요인 경고
 - * 석탄화력 관련 매출 25%이상 기업 자산 매각 (전세계 투자자 연례서한, '20.1.15)
 -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추진하는 한국전력에 대해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계획임을 경고 (로이터통신, '20.5.28)

② 농어업과 먹거리분야는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피해분야

○ 전세계 온실가스배출 비중 中 먹거리분야 26% (1/4)

- * 비먹거리(74%), 먹거리(생산·가공·유통분야, 26%)
- * 먹거리분야 배출비중(18) : 축산·수산31%, 곡물생산27%, 토지이용24%, 소매3%, 포장5%, 운송6%, 가공4% <출처 : Poore & Nemesek(2018), science게재 논문, OurWorldinData.org>

○ 산업적 농식품체계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중 하나

- 축산·어업(31%) : 반추동물(소·화과정 메탄 생성), 분뇨·목초지관리·어선연료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
- 곡물생산(27%) : 화학비료 등(제조과정 및 토양 온실가스 배출), 벼(생육과정 논에서 메탄배출), 농기계·농자재·난방(화석연료사용) 등

- 토지이용(24%) : 농지 감소(탄소저장↓), 집약농업·단일경작으로 황폐화, 토양침식
- 공급체계(18%) : 가공, 운송, 포장 등 과정, 음식물쓰레기 및 먹거리 손실

○ 기후위기에 따른 농어업 피해

- 농업환경변화(병충해·자연재해 피해증가, 용수량변화, 재배적지 변화 등)
- 작물생육장애로 식량 생산감소 및 품질저하, 가축 질병 증가 및 생산성저하
- 해안침식에 따른 농지면적 감소, 생물다양성 훼손 등
- 해양산성화·저산소화 등 해양생태계에 악영향, 생물다양성·수산자원 감소

③ 농어업·농어촌분야는 기후위기 해결의 핵심 주체

○ 농어업·먹거리 시스템 전환시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 개선가능

- 생태(유기)농업과 경축순환형농업으로 탄소 저장기능 확대(관행농업대비 10.36~89.3% 온실가스 저감)
 - * 친환경농업 온실가스 저감량(김창길외 연구, 2016) : 300평당 벼 121~128kg, 과일류 209~248kg, 채소류 573~1,555kg, 과채류 1,837~5,752kg, 서류30~518kg
- 무경운, 피복작물재배, 직파, 생물학적 방제, 물관리개선 등 탄소순환농법 실천
 - * 논 물관리 개선 : 간단관개(논에 물가두는 시간 감소), 논물 알게 대기
- 난방에너지 절감 및 농기계에너지 전환, 용수관리(빗물재활용 등)
- 산림의 탄소흡수량(45.7백만톤, 17년)은 자동차 연간 온실가스배출량(58.4백만톤) 상쇄가능(소나무1ha=자동차4.5대), 목재로 시멘트·플라스틱 대체
-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등)의 탄소흡수량은 열대우림의 5배 (바다에 녹는 온실가스의 10% 흡수) *연안해조류 : km²당 연간 8.3만톤 탄소흡수(숲은 3만톤)
- 화석연료기반농법과 식품소비패턴 전환으로 농업·먹거리분야 온실가스배출량 50%감축 가능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원, 18.12.17

○ 농어촌은 화석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의 보고 (寶庫)

- 농어촌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생산에 좋은 여건 제공
- 축산분뇨, 목재 등 농어업부산물활용 바이오가스로 열병합 발전 가능. 발효된 퇴비로 화학비료 사용량 줄여 온실가스 감축 (태양광·풍력의 전력간헐성문제 극복하는 백업전원 역할) *간헐성 : 기상여건에 따른 전력생산변동

Ⅲ.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목표

1 농정틀 전환의 비전

「기후·먹거리·지역·안전망」 위기의 해결을 주도하여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

① 「기후·먹거리·지역·안전망」 위기의 해결을 주도하는 농어업·농어촌

- 화석연료에 기반한 고투입 농어업을 탈탄소·생태(유기)농어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구축
- 농어촌지역 자원을 이용하여 기존 화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지역에너지 자립 실현하고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 농어업·농어촌 대전환의 주체인 농어민에게 안전망 제공으로 위기 해결을 추진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

②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대통령직속 농특위,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19.12.3)에서 발췌

- 지속가능성, 포용성, 혁신성, 자치분권 등 미래 농정의 4대 지향 실현
 - 성장·경쟁·효율에서 지속가능성·포용·혁신으로 전환
 - (기본이념) 지속가능성 : 환경-사회-경제의 선순환 발전 추구
 - (핵심가치) 포용과 혁신 : 사회의 포용성 향상과 혁신능력 배양
 - (추진방식) 분권과 협력 : 지방정부와 민간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 추진
- 미래농정의 4대 지향 실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 증진을 추구
- 농어업·농어민 중심에서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로 농정 대상 확대

① [기후위기] 온실가스 순제로 및 생태환경복원 선도하는 농어업으로 전환

-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대재앙으로 농어업과 먹거리 순환체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주요 원인중 하나이므로 농어업 전환 불가피
- 농어업 전환으로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선도
 - 화학비료·농약·항생제 사용량 획기적 감축으로 탄소 저감, 산림 및 해조류 탄소흡수 강화, 생태계 복원, 에너지전환(화석→재생) 등 추진

② [먹거리위기]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으로 먹거리 주권 확립

- 코로나19로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취약성이 확대되고, 기후위기는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주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먹거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먹거리 보장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③ [지역위기] 농어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산과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 에너지 전환의 선도 공간인 농어촌의 주민주도의 분산형 에너지 자립 체계 구축과 더불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
-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으로 농어촌 과소화와 도시 과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균형 해소,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

④ [농어민위기] 농어민 삶의 안전망 구축

-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불안정과 도농소득격차 및 양극화 심화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음
-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경영 불안정성도 높아지며 농어민 안전재해 또한 줄어들지 않아 농어민의 기초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안전망 구축이 절실함

Ⅳ. 농정틀 전환의 중점 과제와 정책수단

1 농정틀 전환의 4대 중점과제

① 탈탄소·생태(유기)농어업 전환

- 온실가스 순제로(net zero)배출 및 생태환경 복원을 선도하는 농어업으로 전환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 ① 화학비료(축분퇴비대체) 및 농약, 항생제 사용량 50% 감축(30년)
- ② 논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및 친환경농업 비중 30% 확대(30년)
- ③ 경축순환형·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 ④ 숲 탄소흡수력 제고, 국내산목재수요 창출 및 활용 강화(콘크리트·플라스틱 대체)
- ⑤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수산업생태계 구축(바다탄소흡수원 확충, TAC지속가능 어업관리체계 전환 등)

②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서 먹거리주권을 확립하여 국민먹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 ① 곡물자급률 제고('30년까지 10%p상향), 주요 곡물의 자급도 향상(밀10%, 콩45%) 및 적정생산농지 확보
- ② 국가 식량계획 수립 및 친환경·로컬푸드로 공공급식 전면화
- ③ GMO완전표시제 도입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③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

- 농어촌은 재생에너지의 寶庫(보고)이므로 농어민이 주도하는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하여 온실가스의 상당부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 전환을 선도
- 삶터·쉼터·일터가 조화되는 살고 싶은 농어촌을 조성하여 농어촌지역소멸과 도시과밀화 위기를 동시에 극복

- ① 농어민과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 * 농어촌태양광 확대, 농어촌 공동시설 에너지 자립모델 확산(RE100), 에너지효율성 강화
- ② 농어업부산물 활용 바이오매스종합전략 마련 및 에너지자립 지역·마을 확대
 - * (30년) 축분바이오에너지 100개(지자체별1개), 산촌에너지자립마을 30개소
- ③ 농어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365생활권 구축
- ④ 청년후계농 육성, 귀농어·귀촌 및 다지역거주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④ 농수산물 수급·가격안정 및 농어민 안전망 강화

- 가격불안정, 도농소득격차, 재해 등 농어민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도입

- ① 공공급식 등에 국내농수산물 공급체계 확립(공공수매비축제 등) 및 디지털통합플랫폼 구축(산지-생산-유통-소비 통계) 등 수급·가격안정 종합체제 완비
- ② 농가수입(소득)보장보험 도입, 농어업재해대책의 국가보상체계 강화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사회보험 전환 및 안전재해 예방 강화

2 농정틀 전환을 위한 5대 정책수단

① 공익형 직불제 예산 대폭 확대 및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예산 확충

- 기후 및 먹거리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다양한 실천활동에 직불금 지급으로 농어업·농어촌 대전환을 지원

- ① 공익형직불제 예산 1조원 증액 및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예산을 전체 정부예산의 5%수준 유지
- ② 투입재 보조형 사업 축소와 신규직불예산 확대로 직불제 중심 농정전환

② 법 제·개정으로 농어업·농어촌의 대전환 제도적 뒷받침

-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전환의 4대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 ① [제정] (가)국가먹거리기본법, (가)농어촌공간계획법, (가)연근해어업혁신특별법 등
- ② [개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수산업·어촌공익증진직불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식품위생법, 농어업인안전보험 등

③ 지방분권형 · 민간협치형 농정으로 농어업 · 농어촌 대전환 추진체계 확립

- 기후 · 감염병위기시대 로컬중심 농어업 · 먹거리시스템은 지방분권형 농정으로 추진 가능
- 농어민 · 농어촌주민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민간협치 농정은 기후 · 감염병 위기 시대를 개척하는 혁신 역량을 강화

- ① 농정분권종합계획 수립 및 중앙-지방정부 계획협약제도 도입
- ②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및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 개혁

④ 사회협약 등 국민참여형 사업추진으로 농어업 · 농어촌의 대전환 추진

- 농어민과 농어촌주민은 국민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실현하고, 국가와 시민사회는 대가를 지불하는 협약체결로 기후 · 먹거리위기 극복하고 지속가능 농어업 · 농어촌 실현

- ① 국민 공감대 형성 및 농어민·농어촌주민·시민사회 추진역량강화(교육·홍보·참여)
- ② 「국가-시민사회-농어민·농어촌주민」 간 사회협약 체결

⑤ 4차산업혁명, 스마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업 · 농어촌 혁신 뒷받침

- 기존 스마트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업 · 농어촌 대전환 위한 혁신 수단 활용
 - 특정품목과 대규모 시설 중심 정책, 에너지집약형 스마트농업의 한계극복
 -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순환체계 마련, 재해대응, 삶의 질 개선, 미래세대 확보 등 대전환을 위한 혁신과제 실현을 뒷받침

- ① 농어업SOC(농지정보, 기반시설 등)디지털화, 농어업 스마트화, 농어촌 스마트화
- ② 연구개발(R&D) 혁신

V. 농정틀 전환의 세부 과제와 정책수단

V-1. 농정틀 전환의 세부 목표와 과제

목표 1 온실가스 순제로 및 생태환경복원 선도 농어업으로 전환 (기후위기 극복)

① 화석연료기반 농업을 탈탄소·생태(유기)농업, 경축순환형 농업으로 전환

1) 현황과 문제점

○ 농업과 먹거리순환체계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감축 필요

- 우리나라 측정방식은 생산 부문 농축산물만 대상이며 식량자급률이 낮아 온실가스배출비중도 상대적으로 적음

* 환경부('19) : 농업생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2,040만 톤, 국가 총배출량의 2.9%)
벼재배(29.5%), 농경지(28.3%), 장내발효(21.4%), 가축분뇨(20.7%)

* 각국 농업생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비중('18, 농경연) : 영국(10%, '15) 호주(13%, '15)

-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하며 수입되는 외국농산물은 측정 제외
- 먹거리순환체계 전과정(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서 배출량 측정 및 감축목표 설정 필요

* 전세계 온실가스배출비중(18) : 비먹거리분야(74%), 먹거리분야(26%)

* 먹거리분야 배출비중(18) : 축산·수산31%, 곡물생산27%, 토지이용24%, 소매3%, 포장5%, 운송6%, 가공4% <출처 : Poore & Nemesek(2018), OurWorldinData.org>

○ 농축산업은 국민영양에 기여했으나 과거 농정으로 기후위기 및 환경 악화

- 화학비료 중심의 고투입 농법으로 토양·용수·경관 등 농업 환경 악화

* ('15년) 질소 수지 OECD 평균의 3.4배(1위), 인 수지 8.6배(2위), 가축집약도 3.1배

- 경축순환농업이 정착되지 못해 가축분뇨가 양분과다 및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 일부 농가의 부적정 분뇨처리로 주민과 갈등 증대

* 제주 양돈농가가 가축분뇨를 지하수 통로인 숨골로에 불법 배출('17.7)

* 축산악취(냄새)민원: ('14)2,838건 → ('15) 4,323 → ('16) 6,398 (↑ 48.0%)

- 친환경농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높지만 인증면적 2014년 감소이후 정체
 - 친환경농업 온실가스 저감효과 : 관행농업대비 10.36~89.3% 온실가스 저감
 - * 김창길 외(2016) 연구 : 친환경농업 온실가스저감량(300평당 벼 121~128kg, 과일류209~248kg, 채소류 573~1,555kg, 과채류 1,837~5,752kg, 서류30~518kg)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4년 크게 감소한 이후 정체
 - * 친환경농가 (13)10만3천호→(18)5만7천호 / 면적 (13)11만9천ha→ (18)7만8천ha
 - * 전체경지면적대비 친환경면적비중 (13) 6.96% → (18) 4.92%
- 공익형직불제 등 제도보완 및 개선으로 전환 뒷받침 필요
 - 공익형직불제(선택형)의 경우 기존 직불제 통합 수준, 탈탄소·생태(유기)농업 전환 지원 미흡
 - * 현행 선택형직불제 :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논이모작직불제 등 3개
 - * ('20.11.11) 농업인의 날 기념사 : '농업이 환경과 생태적 가치에 기여하도록 공익직불제를 발전시킬 것'
 - '지역자원기반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대통령직속 농특위 의결, '19.12)의 실행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2) 추진과제

① 화학비료·농약·항생제 사용량 50% 감축 등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

- ('30년) 화학비료 및 농약, 항생제(가축·수산) 사용량 50%감축
 - 친환경농업 확대(비중 30%)와 연계한 세부감축 계획 수립
 - * 친환경농업재배면적 비중30%(40만ha증가)로 확대시 화학비료·농약사용량 약25% 감소예상
 - 일반농가의 비료·농약 사용량 감축 확대
 - 항생제(가축·수산) 감축계획 등 실행계획 마련 및 추진
-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
 - 병해충종합관리시스템(IPM)구축, 정밀농업 기술 보급, 품종 다양성 확보
 - 생산과정 발생 비닐·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친환경농기자재연구개발
 - * 밀, 쌀 등 농업부산물에서 생분해 성분 추출로 비닐·플라스틱 대체(생분해 비닐, 에코플라스틱 등)
 -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유도 및 친환경 농기계 개발보급 등

② 친환경농업비중 30% 확대 및 논농업 친환경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 ('30년) 친환경농업재배면적 비중 30% 목표 (40만ha 증가 필요)
 - 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21~25)에 반영하여 추진
 - * ('18년) 전체농경지(1,596천ha), 친환경면적(78천ha) → (30년) 친환경재배면적 478ha
- 논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 ('25년) 공공비축미 전면 친환경쌀로 전환
 - * ('19년) 공공비축미물량 35만톤, 친환경농산물(곡류)생산량(15.7만톤, '18년)
 - ('30년) 논 면적의 절반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공공급식으로 판로확보)
 - * ('18년) 논면적 844천ha (친환경재배면적비중 30%확대시 40만ha증가 필요)
 - 친환경벼재배 40만ha증가시 온실가스 약50만톤 감소

③ 경축순환형(자원순환형) ·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 경축순환형(자원순환형) 축산으로 전환
 - 수입곡물사료 의존형 축산에서 국산조사료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사료작물 자급 확대형 축산으로 전환
 - 경 · 축농가-지자체-주민 등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경축순환시범단지 조성
 - * 횡성군(경축순환거버넌스모델 구축 추진중), 홍성군(축산환경거버넌스 시범사업중)
 - 탄소흡수력 뛰어난 에너지 작물 재배 확대 *예)양삼(케냐프, 세계3대 섬유작물) 등
- 가축분뇨자원화 및 이용확대
 - 화학비료 대체 연구, 퇴액비 품질제고 및 표시제(퇴액비 성분표시 등) 개편, 사용편의성 강화(살포장비 지원, 펠릿형 퇴지 지원 등)
- 동물복지형 · 생태형 · 자급형축산 등 대안축산 추진
 - 환경부하 크고 질병 취약한 공장식 축산 지양
 - 동물복지형 · 생태형 축산 등 대안축산 활성화 위한 지원 확대

④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및 적정사육두수 관리

- 토양양분관리제로 과도한 양분 관리 : 화학비료 · 수입유박비료 감축우선
- 기후위기에 대응, 환경 허용 범위내 적정사육두수 추산 및 관리
 - 반추동물 유래 온실가스의 감축과 과도한 토양양분관리 등을 위해 적정사육두수 추산 및 관리 필요

② 산림 분야 탄소 저감 · 흡수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강화**1) 현황과 문제점**

- 국내 산림은 온실가스흡수량이 감소하는 5영급 이상이 26%로 노령화되어 온실가스흡수량 증진 위해 산림갱신 필요 *5영급(41년~50년생)
 - * 산림 탄소흡수량 : (10) 58.8백만톤 → (17) 45.7백만톤 (13.1백만톤 감소)
- 산림의 수확벌채, 숲가꾸기로 생산된 목재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
 - 산림이 울창해짐에 따라 목재수확으로 친환경소재인 국산목재 공급가능
 - * 지난 40년간 산림자원의 양은 14배 증가 : (15년) 146m³/ha(OECD평균 131)
 - 하지만 수집 비용 및 저수익성 등의 이유로 속아베기, 숲가꾸기 산물이 산림에 방치되는 등 자원의 효율적 관리 부족
 - 밀집된 산림형태는 산불 등 재난에도 취약

2) 추진과제

①

조림수종 갱신, 도시숲 조성 등 산림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 조림수종 갱신을 통한 탄소흡수기능 증진
 - 탄소흡수력이 높은 채종원산 종자에서 생산된 묘목 식재
 - 생장이 정체된 불량산림에 생장이 우수한 임목 식재
 - 산림병해충 피해지, 불량 활엽수림 등 탄소흡수기능 저하 산림 갱신
- 다양한 도시숲을 확대하여 신규 탄소흡수원 조성
 - * 미세먼지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 생활밀착형 숲 등

② 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 임도 확대

- 산림기능별 숲가꾸기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으로 산림의 성장 증진
 - * 숲가꾸기 효과 : 단위면적당 목재생산 40%증진, 온실가스흡수 11%증진
- 숲가꾸기사업 확대, 산물 수집 증진 및 부산물의 목제품·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제고
- 간벌 전문인력 양성, 집하장 설치, 숲가꾸기(간벌) 촉진법 등 제정
- 임도는 산림경영의 필수 시설이자 지속가능 산림경영의 기반이므로 임도밀도를 2030년까지 8.5m/ha로, 205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 임도밀도 : 한국(3.5m/ha), 독일(46m), 오스트리아(45), 일본(13)
- 숲을 이용한 면역력 증진프로그램·건강증진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산림생태관광, 국가 테마 숲길 조성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제공

③ 목재수요 창출 및 플라스틱·콘크리트 대체로 탄소저감

- 국산목재로 어린이 이용시설 리모델링 : 어린이집, 학교, 목공교실 등
- 목재 활용한 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 및 수요 창출
- 목재 특화거리(가로수, 쉼터, 공방 등) 등 목재친화형 도시 조성
-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 정착 : 지자체·공공기관 우선 구매
- 공공시설의 설계·시공 등 목조화 지원

③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수산업 생태계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해양환경은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변화
 - 표층수온, 해수면, 해양산성화, 저산소화 등 해양환경변화가 급속도로 진행
 - * 표층 수온은 1968~2015까지 1.11℃상승(전세계 평균 0.43℃)
 - * 해수면 40년간(1975~2016) 연평균 상승률(2.68mm)은 지구 평균(2.0mm) 상회
 - * 해양산성화 :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용해로 해수의 탄산농도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
 - * 저산소화 : 해수온 상승으로 산호 용해도가 낮아지고 육지 유기물 유입량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

- 지구온난화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생물다양성 및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
 - 환경 변화로 암반의 해조류가 사라지고 갯녹음(바다사막화)확대로 수산자원 서식처 및 산란장 소실, 해적생물증가, 양식생물 피해
- 수산자원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지속적으로 감소
 - * 연근해어업 생산량 : '11년 123.5만 톤 → '15년 105.8만 톤 → '19년 91.5만 톤
- 연근해어선의 27%(1만7771척)가 21년 이상되어 노후화 심화, 에너지효율이 낮고, 고유황 선박용 기름 사용으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
- 유실·폐기된 폐어구(그물)로 인한 유령어업으로 피해 확대
 - 유령어업으로 연간 어획량의 약 10%, 약 4천억원 손실 추정(KMI, 17)
-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해양 환경 오염 심화
 - * 연간 해양 쓰레기 발생량 약 14만5천톤. 수거량 8만5천톤 수준(해양수산부추정, 20)
 - * 우리나라 해변 미세플라스틱 밀도(12천개/㎡)는 전세계 평균(0.9천개)의 13배 수준

2) 추진과제

① 바다녹화사업 확대 및 해양환경 보전

- 바다속 탄소흡수원 확충 및 건강성 회복을 위한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 연안생태계 복원, 수산자원 조성, 불법어구 단속 등 자원회복 추진
 - * AI, 빅데이터 등 첨단 혁신기술을 활용한 바다숲 조성·관리기술 개발 등
 - ** 기후변화 대응 천연 해조류 보호·보전구역(가칭 해저국립공원) 설정 및 관리
- 기후변화 대응 및 연근해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산란·서식장 조성
 - * 산란·서식장 : 어린 물고기부터 어미까지의 성장 단계별 서식지 조성
 - ** 기존의 구조물 중심의 산란장 조성에서 대상종 특성을 반영한 산란장 조성으로 변화
- 지속가능한 해양환경보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청정어장 재생, 대국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② 자원관리형 어업 정착

-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로 전환
 -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규제중심형(Input Control)에서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Output Control)으로 재편
 - * 자원량 기준 어획량 제한하는 TAC의 관리비율 확대 : ('19) 31% → ('22) 50% → ('30) 80%
 - 어획강도 감축, 조업구역 조정 등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강화

③ 환경친화적 어업 생산체계 구축

- 청정어장 재생사업, 노후화 어장재배치 등 양식어장관리 체계화
 - 어업인·환경단체·유통업계 참여 책임양식 공동협의체 주도 어장환경 개선
 - 친환경 양식 기자재 인증기준 및 체계 마련 및 어가 보급
 - 연안해역의 수용력을 고려한 양식장 설치,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등 양식어장 환경관리
- 생분해성 어구 도입 및 단계적 의무화
 - 폐어구로 인한 수산피해 저감 및 환경오염방지위한 친환경어구 보급
 - 친환경 생분해성어구 품질개선 마련 및 보급 의무화 추진
 - 어선기자재 그물, 로프 등 어획성능 향상 및 가격저감 기술 개발
- 친환경 어선·어업기술 개발
 - 전기·수소 등 친환경 동력 어선 건조 기술 개발
 - 기존 어선 탄소저감 장치 부착 및 의무화
 - 에너지절감형 어로 장비 개발

목표 2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먹거리주권 확립 (먹거리 위기극복)

① 식량자급 확대 및 적정생산농지 확보

1)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식량안보의 중요성 증대
 -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일부 국가의 농식품 수출제한 및 비축
 - * (러시아)밀수출 제한, (필리핀)쌀 비축 확대, (베트남)쌀 수출계약 일시 중단
- 온실가스 감축 위해 국가와 지역단위 식량자급 확대 필요
 - 장거리운송에 의한 수입 농산물은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 식량자급률 및 자급목표의 지속적인 하락
 - 쌀 제외 주요 곡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 곡물자급률('18, %): 쌀 82.5, 밀 0.7(연 2,331천톤 수입), 콩 6.3(연 1,338천톤 수입)
 - * 국내 식량자급률 : (10)54.1% → (18)46.7% / *곡물자급률 : (10)27.6% → (18)21.7%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8~22) : 22년 식량자급률(식용곡물) 목표55.4% (기존 목표 60%), 곡물자급률(사료용포함) 목표 27.3%(기존 목표 32%)
- 식량 자급 목표에 근거한 적정 생산농지 확보가 필요하지만 농지 전용과 난개발 등으로 식량 공급의 지속가능성 위협
 - 농지 전용이 계속되고 있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임차, 가격상승 문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 * 농지전용면적 : ('05) 1.57만ha → ('10) 1.87만ha → ('19) 1.65만ha
 - * 임차농가 : ('05) 63.0%(802천호) → ('10) 58.6(638) → ('19) 51.4(518)
 - * 임차농지 : ('05) 42.3%(772천ha) → ('10) 47.9(821) → ('19) 47.2(746)

2) 추진과제

① 곡물자급률 목표 제고(30년, 10%p 향상) 및 적정농지 확보

- 2030년 곡물자급률 2020년대비 10%p 증가
 - 자급 상향목표에 근거한 품목별 자급 목표 설정
- 주요 품목 자급률 향상 : 밀(10%), 콩(45%), 사료작물 등
 - 밀·콩, 사료작물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유통·소비 인프라 확충
* ('20.11.11) 농업인의 날 기념사 : '30년까지 밀10%, 콩45% 자급 추진
 - (밀) 품질고급화 및 생산기반 확충(전문단지, 저장시설 확대 등), 정부 비축물량 확대, 대량 소비처 발굴(빵류·라면 등 가공식품업체, 떡볶이 떡·국수류 제조업체), 공공급식 국산밀 사용, 수입밀 혼용 등 가공업체 국산밀사용 장려
 - (콩) 종합처리장·저장시설 등 생산기반 확충, 정부 구매 확대, 장류·두유·두부 등 국산콩 신수요 발굴(공공급식, 일반시장 등), GMO완전표 시제 도입시 수요 확대 전망
- 김치, 장류, 소스류, 주류 등 가공식품의 자급목표 설정
 - 김치, 장류, 주류 등 가공식품은 주요 채소류와 식량작물을 주원료로 사용
 - 현재 대부분 저가 수입농수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하므로 가공식품의 국산화를 확대
- 적정생산농지 확보
 - 자급 목표 달성 위한 적정생산농지면적 산출 및 확보
 - 농지은행을 통한 비축농지 및 위탁임대농지 확대

②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및 농지 소유·이용 실태 전수조사 실시 등

- 상속 및 이농하며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의무를 부과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임대 유도
- 농지 임대차 당사자간 권익 균형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 임대차 기간 및 과도한 임차료 상승 제한 : 기간(현행 3년→5년), 임차료 상승폭(연간 1회 산출소득에서 10% 상한)
- 농지원부·농지이용실태조사·직불금 지급을 연계한 소유·이용 실태 전수조사 및 관련 정보 디지털시스템 구축 검토

②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로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취약성 확인하였으며, 장거리운송에 의한 글로벌 푸드시스템은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 국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먹거리에 대한 불안 지속
- 식생활에 따른 건강비용*, 취약계층 먹거리 불평등** 등 사회문제 대두
 - *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 ('15) 9조1,506억원 → ('16) 11조5,000억원
 - **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 : ('10) 10.0% → ('17) 13.1%
- 안전성논란 있는 GMO수입 세계 상위임에도 GMO농식품에 대한 표시제 미비
 - GMO원재료를 사용했더라도 잔류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만 GMO표시
 - * '18년 사료관리법 개정으로 가축사료는 GMO완전표시제 시행, 식품에는 대부분 미표시
 - non-GMO표시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률이 제로(0)일때만 표시 : 사실상 불가능
 - * 운송과정 및 자연상태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EU는 비의도적혼입률(0.9) 허용

2) 추진과제

① 국가·지자체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및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

- 기후 및 감염병 위기시대, 지역먹거리순환체계 구축은 국가의 주요 과제
- 국가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법적 근거 마련
 - * ('20.11.11) 농업인의 날 기념사 : '국가식량계획 수립', '푸드플랜 참여 지자체수 확대(67→22년 100개)', '지역에서 생산-소비가 이뤄지는 안전한 식량자급자족 체계'
- 먹거리 순환체계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 구축
 - 생산이전 단계에서부터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단계에 이르는 먹거리 순환체계 전 영역에서 온실가스 발생량 측정 및 감축목표 설정
 - * 먹거리분야 배출비중(18) : 축산·수산31%, 곡물생산27%, 토지이용24%, 소매3%, 포장5%, 운송6%, 가공4% <출처 : Poore & Nemesek(2018), OurWorldinData.org>
 - 포장 간소화, 친환경재사용포장재 개발, 보온재 리사이클, 음식물쓰레기 감축 등 유통단계별 온실가스·먹거리 손실 감축 및 재활용 방안 마련
 - * 먹거리손실 및 음식물쓰레기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비중(약6%)<출처 : 위 동일>
 - * EU 그린딜 : 음식물쓰레기 50%감축목표(2030년)
 - 수산부산물 리사이클링 사업 및 먹거리 손실저감 :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손실되는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 마련 등

②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전면화

- 공기업·공단급식 등 전체 공공급식에 친환경·로컬푸드 공급 확대
 - * 공공급식 : 공공기관, 군대, 학교, 어린이집,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노인급식 등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농어민가공센터 설립지원과 공공급식 공급을 위해 생산 및 농어민가공 조직화 확대
- 공공급식에서 비중이 높은 가공식품에 친환경·로컬식재료 사용 지원정책 강화
- 논농업의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라 생산된 친환경쌀 전량을 공공급식 공급

-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플랫폼 구축으로 생산과 소비 연계 및 안전한 식재료 수급 및 급식 지원(산지·생산·유통·소비 정보 디지털통합 플랫폼내 포함)

③ 먹거리 양극화 해소 및 접근성 확대

-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수산물 지원사업, 과일간식, 청소년 아침 간편식 제공 등 먹거리 복지 향상 프로그램 지속 확대
 - * ('20.11.11) 농업인의 날 기념사 : '저소득층, 임산부, 돌봄학생, 어르신들이 신선한 농식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먹거리 지원'
- 미국 농업부(USDA)는 식품조달 및 영양지원제도를 통해 학생·저소득 계층에 대한 국가식품안전망(National Food Safety Net) 구축 및 미국산 농산물 수요창출 통해 농가지원

✓미국 농업부(USDA) 식품조달 및 영양지원 제도

- ① 미국내 생산 농산물 등 식품을 직접 구매 →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 통해 학교 등 공급
 - 2019년 미국산 식품 구매금액 (123억불), 재난·저소득층·학교·어린이·임산부 등에 공급
- ② 상품조달 프로그램(CPP) 활용 지역생산자와 학교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 대상상품(100% 미국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 구입기간(매년 봄에 공고) 등

④ GMO 완전표시제 도입

-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GMO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의무표시
- 식품에 non-GMO표시를 할 경우 GMO의 비의도적혼입률을 현행 0%에서 0.9%로 상향(EU수준)
 - *비의도적혼입률 :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제조과정에 섞이는 비율
 - 운송 및 유통과정이나 자연상태 GMO의 비의도적 혼입은 피할 수 없고, 선의의 생산자와 기업의 인증 취소 등 피해를 막기 위해 non-GMO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명시해 법적으로 허용

목표 3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지역위기 극복)

① 농어촌자원이용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에너지 자립

1)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주민 반대 심화
 -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17.12)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20%달성
 -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 7.0%(16년) → 10.5%(22년) → 20%(30년)
 - 태양광·풍력 추진과정에서 난개발, 주민을 배제한 외지인 중심의 수익 배분 등에 따른 지역주민 수용성 저하로 확대 어려움
- 바이오에너지는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흡
 - 가축분 바이오에너지시설은 2019년 기준 10개 내외에 불과하고 관련법령 미비,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
 - 목재 바이오에너지 활용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은 3개소에 불과함
 - * 정부 재생에너지 3020목표(17.12발표) : 태양광(57%), 풍력(28%), 바이오매스(5%)
 - * EU 재생에너지 중 바이오매스 비중은 65%(16년) (자료:World Energy Balance, OECD, '18년)

2) 추진과제

① 주민공동체 주도 이익공유형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

- 농어민이 주도하는 계획적 태양광 보급 확대
 - * ('20.3월 현재) 3.4GW → (50년) 50GW : 재생에너지 3020계획(목표, 10GW) 개편
 - 염해간척지, 폐염전, 공유수면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농어민 주도형 모델을 다양화하고 한국형 FIT 등 태양광 제도개선 추진
 - * 태양광 100kw당 약400평 소요로 10GW에 약 13천ha 농지 소요, 농촌태양광 10GW 달성 시 이산화탄소 563만톤 배출 저감, 358만 가구 전력 공급, 일자리 3.3만개 창출

○ 주민공동체 주도 이익공유형으로 사업방식 개선

- 농어민과 지역주민 주도형 협동조합, 계획입지방식 도입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체계적인 구조 마련 및 주민인식 개선
- 주민참여형 계획입지 및 농어민 발전협동조합은 계통선로 접속 우선권 부여,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혜택 부여

*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시 주민의 지분비율을 제도화한 국내외 사례 참조

② 농어업부산물 활용 바이오매스 종합전략 마련 및 에너지자립 지역·마을 확대

○ 다양한 농어업부산물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종합전략 마련 및 비중 확대

- 가축분뇨, 목재, 어패류 등 다양한 농림수산업 부산물 및 음식물쓰레기, 에너지 작물 등의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화 하는 종합전략 마련

* 일본, 재생에너지 핵심전략으로 ‘바이오매스 종합전략’ 수립(2002년)

- 소규모시설에 발전차액지원제(FIT) 적용 또는 REC차등지원(가중치 2.0→3.0), 자원순환기여도 지자체평가지표 반영 등으로 바이오에너지 비중 확대

○ (축분 바이오에너지) 기존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하여 시군 지자체별 1개소씩 100개소('30년)

- 온실가스 배출이 큰 메탄을 에너지화함으로써 환경 기여(온실가스저감), 가축 분뇨 소비 확대로 양분과다 해결기여, 바이오가스는 전력공급외에 도시가스로 전환 공급 및 고질화(바이오메탄) 통해 수소생산가능
-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연계 및 축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내 설치, 민간투자(BTO)사업의 확대(저금리 융자지원), 거점지역(도별 1개소) 설치·운영후 단계적 확대

○ (목재 바이오에너지) 산촌에너지자립마을 30개소('30년)

- 탄소중립연료이며 화석연료대체로 탄소저감효과, 산촌마을 에너지자립
- 메탄 발생 야기하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방치시 산림병해충과 산불 위험

- 산촌에너지자립마을 확대 : 산림청계획 상향 (산림청 계획 : 22년 3개마을)
* 산촌마을 : 109개시군구(466개 산촌마을, 산림청지정)
-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활성화 : 수집 및 이용체계 구축, REC가중치 상향 등

③ 농어촌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에너지 절약·효율성 증진

- 농식품 RE100(재생에너지 100%이용) 단계적 도입
 - 마을회관 등 농어촌 공동이용시설의 에너지자립모델 확산
 - 축사, 시설원예, 양식장, 유통가공시설, 식품공장 등 재생에너지 100%이용 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참여 유도
- 농어촌 에너지 효율성 향상
 - 주택, SOC 시설, 농공단지 등 노후 생활 인프라, 에너지 다소비 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등 통해 에너지 효율 증진
*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한 후 농어촌 건물 및 지역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시스템 실증 추진
 - 농기계·농자재 산업의 에너지 효율화 증진 및 전환
* 온실·축사·버섯재배사의 신재생에너지 복합에너지원 최적 이용 모델 제시

② 농어촌 공간계획 수립 및 365생활권 구축으로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난개발로 주민 피해 발생, 농어촌 경관과 생활 환경 악화
 - * 익산 장점마을 주민 압 발생 사례
 - * 폐농자재·어망, 악취, 생활·음식쓰레기, 산업폐기물, 해양쓰레기 관리 미흡
- 농어촌지역내 공장 등 다양한 환경오염원 정비 및 집적화 법적 근거 부족
 -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농촌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 부재
* ‘농림지역’이 감소하고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 계속 증가

- 인구 노동력의 초고령화 및 과소화로 지방소멸 위기 증가
 - * 농가수 매년 2만호씩 감소(조만간 100만호 이하). 경영주 평균연령 67.7세(18)
 - * 농어촌 1,413개 읍·면中 84.2%가 초고령 사회, 50%가 무출생 및 10인 이하 출생
- 저밀도 사회로의 전환 및 농어촌에 대한 관심 증대
 - 팬데믹 이후 분산화된 생활방식 확산, 농촌 거주 수요 증가 예상
 - 매년 인구의 1%(약 50만 명)가 귀농어·귀촌,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의 11.8%가 향후 10년 이내 귀농·귀촌 희망('17년)
 - 숲과 식물 활용한 면역력 증진 요구 증가, 산림치유 기능 부각
- 농어촌지역 열악한 농촌정주여건(의료, 복지, 문화, 주택 등) 개선시급
 -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의료·복지·돌봄·문화·교통·주거 전반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격차로 삶의 질 만족도 저하
 - * 국가 최소서비스 항목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시·군 달성률은 40.5%에 불과('17년)
 - * 농촌주택(392만호)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이 27.4%(도시 13.6%), 빈집 6만동('19년)

2) 추진과제

① 농어촌 공간계획 제도화 : (가)농어촌공간계획법 제정

- 농어촌 환경과 생물종다양성 보전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 * ('20.11.11) 농업인의 날 기념사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농어촌 공간을 적절히 이용·보전하기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농어촌의 난개발 방지하고, 생활권 조성, 농산업 재배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농어촌다움 관리 등 농어촌공간관리 장기 전략 수립
 - 농어촌 주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 및 국민 쉼터·삶터 제공
- 농촌공간계획은 농촌공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의무화하고, '국토계획법'의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보완하는 역할
- 농어촌 체계적 개발 보전,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촌공간계획법 제정(또는 기존 농어촌 정비법 등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어촌·어항의 환경·경관 개선을 위한 바다가꿈 프로젝트 확대 추진
 - 어촌의 생활 및 경관디자인 개념을 적용 환경 및 경관 개선
 - 어항수역 내 침적폐기물 수거 등 청항업무 강화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레저 및 관광·여가 공간을 제공

② 농어촌 365 생활권 구축

- 농어촌 어디서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 SOC 공급을 통해 교육·문화·복지·보건, 주택 등 생활서비스 제공 (쾌적한 국민 쉼터·삶터 제공)
 - * ('20.11.11) 농업인의 날 기념사 : '생활 SOC 복합센터 (700개→25년 1,200개)
 - 행정(읍면사무소), 보건·의료(보건소), 금융(우체국·농수협) 서비스 시설과 생활서비스 거점을 복합 조성하여 이용 편의 극대화
 - 농어촌지역에 공용Wi-Fi 보급, 위성사무실·디지털 창업공간(SOHO), 그린스마트 스쿨, 스마트빌리지 건립 등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 섬, 연안, 도시 등 어촌 입지유형별 생활 SOC 복합화 모델 구축
 - 읍면소재지 등 생활 SOC와 배후마을의 전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365 생활권 구축
 - * 365 : 30분 이내 소매·보건·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 60분 이내 문화·교육·의료 서비스 접근, 5분 내 응급상황에 대응 체계
 - 농어촌의 원격 및 디지털 의료 인프라 구축(보건지소-보건소-의료원),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등 추진
 - 협동조합·사회적기업·주민공동체 등의 역량 강화 및 전달체계 확충으로 삶의 질 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 수산업 중심의 소규모 섬어촌의 경제·생활권 재정비
 - 상호 보완적 기능과 역할에 기초한 50가구 미만 섬지역의 경제·생활권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성 강화

목표 4 농어민 삶의 안전망 구축 (농어가 위기 극복)

①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1) 현황과 문제점

- 농산물 수급 및 가격불안정 지속
 - 마늘, 양파 등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폭락 등 매년 되풀이
 - 곡물자급율 22% 불과함에도 품목별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갈아엎기 반복
- 산지폐기 등 사후 수급대책만으로 대응 한계
 - 농산물 과잉생산 뒤 산지폐기로 생산량 조절, 예산비효율·자원낭비
- 포스트코로나시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필요
 - 가격 불안정 지속시 소비자 피해 뿐만 아니라 농가 안정적 생산공급 불가능
 - 계약재배로 안정적 판로 등 공급체계 확보 필요

2) 추진과제

① 푸드플랜 연계 공적영역 공급체계 확립 (공공수매비축제 도입 등)

- 공공급식 등 공적영역에 로컬푸드 친환경농수산물 공급체계 확립(공공수매비축제 도입)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
 - * 공적영역 : 공공급식(공공기관, 군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노인급식 등), 공단(업체) 및 공기업 등
- 가공·식당용 지역농수산물 공급지원 강화(로컬푸드 저탄소인증제 확대)
 - 가공업체, 식당 등에서 지역농수산물 사용 촉진 위한 지원(외식산업진흥법개정)
 - * 외식산업진흥법 개정(20년) : 외식사업자의 지역농산물 사용촉진 시행 지원가능
 - * 예) 일본 가공업무용 농산물 국산원재료 공급강화지원사업

②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및 자조금조직 자율성 확보

-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품목전문농협 및 품목별연합회 등 확대 및 역량강화와 의무자조금조직의 자율성 확보
- 농축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의 개선 : 소비홍보 위주 사업방식 개선 등
- 수급안정기금 조성으로 가격폭락 등 대비
 - 지자체 · 생산자단체 · 농어업인 거출, 정부지원

③ 디지털정보통합플랫폼 구축 등 수급 및 가격안정 종합체계 완비

- 디지털정보통합플랫폼 구축
 - 국내농수산물의 생산 · 소비통계, 가공식품통계,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공공급식 부문 등 디지털정보통합
 - 정부 수급 · 가격정책 및 생산자조직 수급조절 의사결정의 근간 활용(뒷받침)
- 사전적 수급관리대책 강화 : 수급예측시스템 강화, 적정 재배면적 예고제 등
- 재난대비 수급가격안정시스템 구축 : 대응매뉴얼, 급식농산물안정기금조성 등

② 도농소득격차, 재해 등 위기 해결 위해 농어가소득안전망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 농가소득은 4천만원대로 진입했지만 농업소득은 정체, 도농간 소득격차 및 농가내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 임가소득은 농가소득 대비 91.1%
 - * 농가소득: ('10)32,121천원 → ('19)41,182 / * 농업소득 : ('10) 10,098천원→ ('19) 10,261
 - * 전국/도시근로자가구 대비 소득(19) : 농가 62.3, 어가 80, 임가 55.1
 - * 소득5분위 배율(18) : (전국) 5.23 (농가)11.1로 양극화 심화
- 농가경영안정위해 수입보험제도 시범사업 했지만 본사업 도입 불투명
 - 2015년부터 양파, 포도, 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올해 시범사업 종료)
 - 도입요구 크지만 높은 손해율, 생산량 파악 등 통계 미비로 본사업 불투명
 - 코로나19 계기로 확산되는 사회안전망강화와 연계하여 개선 필요

- 코로나19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
 - 농어촌 소멸 막고 지속가능성, 다원적 가치 증진 위해 필요
 - * 경기도 기본소득사회실험 (농촌대상 2021), 농민수당(전남북, 충남 등) 시행중

2) 추진과제

① 농어가소득 안정 위한 수입보장보험제도 개선

- 농어가별 과거 경영실적에 근거해 일정수준 보장하므로 수입 안정화 가능
- 농가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의 본사업 도입을 위한 개선과제 해결 필요
 - 농가별 생산량 파악을 위한 기장거래 정착, 소득신고체계 등 수입산정체계 마련, 품목별 특성에 따른 도입방안 마련 등
- 시범사업 연장·개선방안 마련
 - 종료 예정인 시범사업을 개편·연장하고, 개선방안 마련
 - 어업분야의 경우 TAC제도 참여 어업인 대상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실시
 -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보상강화 등과 연계하여 적정 보장선 산정

② 기본소득(농어민, 농어촌주민) 도입 추진

- 농어촌 지역의 소멸 막고 지속가능성, 다원적 가치 증진 위해 도입
- 우선 기본소득 관련 실증연구, 제도 설계, 추진방안 등 연구 추진
 - 대상자(농어민, 농어촌주민 등)선정, 지급방안, 예산소요액 등
 - * 경기도 기본소득사회실험 (농촌지역 대상 2021)
-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도입 논의와 연계 추진

③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확대 및 임업분야 도입

-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정착 및 확대
 -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신규 직불제 추가 시행(수산직접지불제 시행 법률안 개정, '20.4.30.)
 - 어촌의 경관보전 기능, 해난구조 및 국경해역 감시 등 국민의 생활과 안전 보호 기능, 어업인 소득안전망 강화 위해 직불제 확대 필요
 - 직불제 도입 위해 어촌 현황 및 개별 어가 대상 ‘어가등록제 시스템’ 구축
- 임업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
 -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221조원에 달하지만 임업인 소득은 농가소득의 91.1%, 어가소득의 77.5% 수준
 - 산림보전을 위한 의무조림, 벌채 및 개발 제한 등의 규제와 직접지불제도 미비로 유사산업인 농수산업에 비해 낮은 소득 수준
 - 온실가스 흡수저장, 수원함양, 경관제공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 제고하고,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위해 도입
 -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에 대해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의무사항 준수 시 직접지불금 지급

③ 농어업재해종합대책·산림재해종합대책 마련 및 농어민 안전재해대책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 심화
 - 최근 10년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성 증가로 이상기후 빈발
 - 농업환경 위협성 증대 : 농작물피해, 병해충, 재배지변동, 식량위기 증가 등
 -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의 대형화 및 산불확산 가속화, 산사태 피해 확대
 - 해양환경 급격한 변화로 태풍 등 자연재해 심화

- 재해 대책 미흡으로 농어가피해 증가
 - 매년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 농어업 피해 증가
 - 농어업재해대책은 구호수준이며, 농어업재해보험은 보상 미흡
- 농어업인 업무상 안전재해 심각
 - 농업인 사망만인율(18년 2.99명)은 전체 산재 사망만인율(1.08명)의 3배
 - 어업인 안전재해(질환 및 사고) 재해자수(19년 14,806명), 재해율(5.5%)
- 농어업인 안전보험
 - 산재보험과 달리 임의가입 방식으로 가입률 낮고 예방 및 보상에 한계
 - 코로나19 계기로 확산되는 사회안전망강화와 연계하여 개선 필요

2) 추진과제

① 농어업재해종합대책 마련 (국가지원체계 강화)

- 기후위기 심화로 자연재해 확대 및 식량안보에 위협이 예상되므로 중기적으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
-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강화
 - * 예) 보상제도(중소농), 보험제도(전업농) 이원화 등 검토 필요
- 어업재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의 한도 상향
 - *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책 강구

② 농어업인 업무상 안전재해 대책 강화

-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가입율 제고
 - 안전보험 피보험자 범위 확대를 통한 농업분야 겸업자 보호
 - * (현행) 산재·어선원보험 가입자 보험 가입제한 → (변경) 작업장 지정 후 가입허용
 - 연금형·장기계약형 보험상품 개발 및 사망보험금 연장 특약 확대 등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개선

- 농업분야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지원하고 의무가입 등 사회보험화 전환을 장기과제로 검토
 - * 산재보험 가입 및 보상 관련 신청업무를 외부기관 위탁방안 검토
 - ** 근로복지공단이 주로 대도시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역농협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 농어업인 업무상 안전재해 예방대책 강화
 - 안전재해 예방교육, 예방기술개발 및 재해 예·경보, 농어업 작업환경 개선 및 현장 안전관리 등
- 농어업인 특수 건강검진제도 도입 및 농업안전보건센터 확대
 - 여성농어업인 특수 건강검진제도를 우선 추진하고 전체 농업인 대상으로 확대 : 시범사업('21) 및 본사업('22) 추진 계획
 - 농업안전보건센터를 도 단위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중심 직업보건서비스 등 제공
 - * 농업안전보건센터: (현재) 5개소 → (확대) 9개소

③ 산림재해대책 강화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대책 강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건조·강풍일수 증가(봄·겨울), 국지성 집중호우 빈도 증가(여름·가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림재해통합관리의 중요성 증대
 - 임목축적량 증가, 높은 비율의 소나무림 분포, 지피물 퇴적 등으로 산불의 대형화 및 산불확산 가속화 대응
 - 집중호우 증가로 산사태 피해 발생 확대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산사태 정보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강화 등

④ 미래 농어업·농어촌의 주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

1) 현황과 문제점

- 청년·후계농 부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협
 - 40세 미만 청년 농가수 18년 8천호까지 감소. 후계자 확보율 9.8%('14)
 - *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가구 : ('10) 33,143호 → ('14) 9,947 → ('18) 7,624
- 여성농업인은 농사와 가사부담 이중고로 어려움 호소
 - * 농가인구 중 여성 비중(51%), 여성경영주(18.7%), 농협여성임원(8.7%, 19)
 - 여성전담부서 설치,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 공동경영주제도 도입(16년) 되었으나 제도미비
 - * 현재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 등록 불가
- 코로나19 이후 도시민 귀농귀촌 의향 증가추세이나 정보 부족
-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돌봄·교육·의료·문화·주거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아울러 민간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 중요
 - 농어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립성장에 어려움
 - * ('18) 농어촌 사회적경제조직 5,826개 : 협동조합(4,207개), 사회적기업(643개), 마을기업(967개), 사회적농장(9개) 등

2) 추진과제

① 청년·후계농어업인 육성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개선 및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활성화
 - 청년 취농인 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농업법인 등 취업자 지원확대, 준비단계 인력육성 및 지원(일본, 기본생활비 지원) 등
 -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 : 18년 도입, 매년 1600명(3년간 월100만원 지급)
 - 청년농업인의 기술, 금융, 회계 등 영농정착 종합지원방안 마련
 -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40명·5천만원 지원)의 수혜 인원 확대 등

- 농어촌 유희공간 및 빈집 리모델링을 활용한 청년 농어업인 주거 지원
- 예비 농어업인력 확보 및 영농어 기반 없이도 청년세대가 다양하게 농어업분야에 유입되도록 경로를 활성화는 농업분야 진입 유도
- 후계자 없는 고령농의 제3자 영농승계 등의 효과적 추진
- 학과개편 및 입학 정원 확대 등 한국농수산대학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창농어 단계(예비기, 준비기, 창농어 초기, 정착기)를 세분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원
- 공유경제 기반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의 어업인프라(어선, 어장 등) 확보 위해 공유경제 방식의 지원(5년, 임대료)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사회 정착 지원
 - * 예) 신안군(청년 어선임대 사업), 고흥군(청년 양식어장 공모사업) 추진
- 지자체 청년농어업인 육성계획 수립 내실화, 지자체별 청년농어업인 통합지원조직 운영 등 지역단위 생태계를 통해 청년 애로사항 해소
- 반농반X의 새로운 정착모델 지원 및 청년세대가 농어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원적 농어촌 발전의 새로운 주체로서 청년층 지원 및 육성방안 수립

② 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 인식 개선

-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주체화
 -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 가능하도록 하여 법적 지위 보장
- 여성농어업인 인력 육성
 - 농어촌 환경변화 선도하는 여성농어업인력 육성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 여성농어업인 후계 인력 확보를 위한 여학생 대상 농어업체험 프로그램 추진
 - 결혼 이민여성 농어업인력 양성 지원

○ 농어촌지역 성평등 인식 개선

- 전체 농어업인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등
- 농어업생산 의사결정과정의 성평등 실천을 위한 ‘가족경영협약’ 확산

③ 귀농어·귀촌 및 다지역 거주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정보를 DB화하고, 분산된 정보를 연계시키는 통합 플랫폼 구축

- 중앙부처 귀농어·귀촌종합센터와 지자체 귀농어·귀촌지원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용자 중심 시스템 개선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귀농어·귀촌 희망자의 사전 준비부터 정착까지의 전체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제공

○ 다양한 유형의 주거형태 지원, 농어촌 체류 지원 등 농어촌 생활 기회 제공

- 귀농인의 집, 청년보금자리 조성 등 안정적 주거 지원 확대
- 농지은행과 연계한 빈집은행을 구축하여 귀농어·귀촌 정책에 활용
- 폐교 등을 활용한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확대, 농어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도입 등 농어촌지역 적응 지원 강화

④ 사회적경제 연계로 농어촌 소득·일자리 생태계 활성화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을 통한 혁신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여 농어촌 일자리 창출

○ 로컬푸드·공공급식, 재생에너지, 디지털정보화, 산림경영 등 농어업·농어촌 대전환으로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 창출

- 로컬푸드·공공급식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 전체 공공급식(식재료시장 7.1조원)에 로컬푸드 공급(70%까지) 한다면 9천여개 일자리 창출 및 6만6천여 농가에 안정적 판로보장 가능추정(농식품부 TF, 18)

-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 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추진시 일자리 창출
- 숲가꾸기 및 간벌 통한 목재 공급 등 산림순환경제구축시 일자리 창출
- 농지정보·농업생산현황 정보화 등 각종 디지털 정보화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마련, 농어촌 삶의 질 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 * (사회적경제 생태계) 리더 및 인력 육성, 창업 및 경영 지원, 금융 및 판로 지원 등
 - * (사회서비스) 사회적 경제 연계 농어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사회적 농장, 교통모델 등
- 어촌사회를 지탱해 온 어업공동체(지구별수협, 어촌계 등)를 경제사업 중심에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 * 어업공동체 : 지구별수협(79개소), 어촌계(2,029개소), 자율관리공동체(1,112개소)
- 수산업·어촌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시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 등

V-2. 농정틀 전환의 정책수단과 추진체계

① [예산·재정] 직불 중심 농정과 재원 확충으로 대전환 유도

① 공익형직불제 대폭 확대(1조원 증액) 등 직불중심 농정으로 대전환 지원

- 공익형직불제(선택형) 예산 대폭 확대로 농어업농어촌 대전환 지원
 -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생태(유기)농업 실천활동*에 직불금 지급

- * 화학비료·농약·항생제 사용 감축 및 가축분퇴비사용, 친환경농업 실천
- * 식량자급 확대 위한 사료작물재배, 밀재배 등 실천
- * 농업농촌·임업산촌·어업어촌의 환경개선 등 공익적 가치 증진 실천
- * 그 밖에 무경운, 윤작, 휴경, 생물다양성 등 저탄소농업 실천

- 기후위기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1조원 증액(문재인정부 임기내) 추진하되, 2030년까지의 예산증액 계획은 추가 연구 통해 로드맵 수립
 - *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18년) : 2.2조원('19) → 5.2조원('22) 증액(매년 1조원씩 3년간)
 - * 대통령직속농특위연구(농식품재정구조개편, '20년) : 2.8조원('20) → 5조원('23) → 7조원 또는 10조원('28) 증액(직불제+경제다각화+주체형성+환경및경관보전 등)

①-1 투입재 보조형 지원 축소 및 신규예산 확대로 재원 확보

- 투입재 보조형 사업 감축(5천억원), 신규예산(5천억원)으로 재원확충
- 어업자원 지속성 및 어업경영 안전성 위해 (가)연근해어업혁신기금 신설
 - * 노후화, 에너지저효율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 원인이 되는 어선감척·현대화 위한 기금

②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전체 정부 예산의 5%이상 수준으로 유지

-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의 5% 이상 수준으로 유지
 - * 농림수산식품 예산비중 : 5.9%('10) → 5.1%('15) → 4.9%('17) → 4.3%('19) → 4.1%('20안)
- 농정예산에서 직불금 차지 비중 확대 : 30%(25년), 50%(30년)
 - * '18년 농정예산 중 직불금의 비중 : 한국 16.8%, 스위스 82.3%('16년), 일본 31.4%

② [법·제도] 법 제·개정으로 농어업·농어촌 대전환 제도화

-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5대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 제·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① [제정] 국가먹거리기본법, 농어촌공간계획법 등

- 식량자급 확대 및 지속가능 먹거리시스템 구축
 - (가)국가먹거리기본법 제정, (가)연근해어업혁신특별법
- 탈탄소·생태(유기)농어업 전환 : 임업산촌공익직불법
- 농어가소득안전망 구축
 - 농어민·농어촌주민 기본소득관련 법, 농가수입보장보험제도 관련 법 제정
- 농어촌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및 미래주체 육성
 - 농어촌공간계획법, 사회적농업육성법 등 제정
- 민관협치형 농정추진체계 확립
 - 농어업회의소법률 제정

② [개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 탈탄소·생태(유기)농어업으로 전환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 가축분뇨법·축산법·비료관리법 등 개정
- 식량자급 확대 및 지속가능 먹거리시스템 구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자조금법, 식품위생법 등 개정
-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로 지역에너지 분산·자립 추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하위규정 개정
- 농수산물 수급·가격안정 및 농어가소득안전망 구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재해대책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등 개정

③ [추진 체계] 지방분권형 · 민관협치형 농정추진체계의 확립

- 기후 · 감염병위기 시대 로컬중심 농업 · 먹거리시스템은 지방분권형 농정으로 추진 가능
- 민간협치 농정은 기후 · 감염병 위기 시대를 개척하는 혁신 역량을 강화

① 농정분권종합계획 수립

- 국가의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농정분권종합계획 수립
 -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18), 재정분권 추진방안(18년)에 따라 3.5조원 규모 지방이양(농식품부 사업규모 1.2조원, 20년)

② 중앙-지방정부 계획협약제도 도입

- 중앙정부는 어젠다를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은 자치단체가 발굴하는 중기계획 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지방정부 계획협약제도를 도입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재조정하며,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농정수행역량을 강화

③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으로 지역농정거버넌스 구축

- 농어민 · 농어촌주민의 농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간협치조직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으로 지역농정거버넌스 체제를 구축
-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계 권익 대변 민간자율 대의기구
 - 지역 · 단체 · 품목 등 농어업계 대변. 법과 제도로 대표성과 파트너십 보장
 - 국가와 지자체 농정 자문건의, 조사연구, 교육 · 훈련 · 홍보 등

④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및 중앙회 개혁 / 농촌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에 있어 생산자 대표조직인 농협을 상향식 조직체제로 전환, 지역 협동사회경제체제를 선도
 - 품목별조직화 · 유통체계 강화로 조합원 생산 농산물 생산 · 가공 · 유통 책임
- 농어민과 주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를 실현할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④ [추진 역량] 사회협약 등 국민참여형 사업추진으로 농어업·농어촌 대전환

① 국민 공감대 형성 및 농어민·농어촌주민·시민사회 추진역량 강화

- 기후·먹거리·지역·안전망 등 농어업·농어촌을 둘러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환은 국민적 공감대와 교육·참여 없이는 불가능
 - 생산과정에서 농어업인의 다양한 실천 활동과 가공·유통·판매 단계에서의 전환, 음식물폐기물 감축·친환경농산물 구매 등 소비자의 참여가 결합된 먹거리 시스템 전체의 순환과정이 함께 바뀌어야 함
- 대전환을 추진하며 수반되는 한정된 국가예산의 우선 사용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매우 중요함
- 생산자·소비자 교육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과정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함

② 국가-시민사회-농어민·농어촌주민간 사회협약

-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정틀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 및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협약 추진
 - * 사회협약은 국가의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에 대해 경제·사회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합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행을 추진하는 사회적 약속
- (국가·시민사회의 약속)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소득안정망 구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가 지불
- (농어민·농어촌주민의 약속) 국민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생태(유기)농업 구현,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행복에 기여

⑤ [기술혁신]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첨단기술 활용하여 농어업농어촌 혁신 뒷받침

- 기존 스마트 농어업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업농어촌 혁신 수단으로 활용
 - 특정품목과 대규모 시설 중심 정책, 에너지집약형 스마트농업의 한계극복
 - 기후위기 대응, 노동력절감, 먹거리 순환체계, 재해대응, 질병예방, 농촌 환경 및 삶의 질 개선 등 대전환의 기술적 뒷받침
- 농어업 가치사슬 전 영역에 걸쳐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농정 실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

① 농어업 SOC(농지, 기반시설 등) 디지털화

- 포스트코로나시대 사회기반시설(SOC)의 디지털화 필요성 대두
- 농지정보는 농업정책수립의 근간이므로 디지털화 시급
 - 농지 소유 및 이용정보 수집 및 DB구축(공익형직불제 등 농정 추진 근간)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DB 등 기존 자료와 소유관계 확인을 위한 등기정보를 연계
- 농수로, 저수지 등 농어업기반시설의 디지털화
 -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효율성 향상 및 재해위험 완화 위해 디지털 농촌용수관리 등
- 스마트 어촌어항 관리체계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어항관리 원격지원 및 실시간 어항시설 관리
 - 어항 기초자료조사와 공간정보 기반으로 어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어촌어항 정보 디지털화 및 통합 플랫폼으로 어민·소비자 네트워크 구축

② 농림어업의 스마트화

- 농업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의 스마트·데이터화 추진
 - 생산수단인 농지에서부터 생산, 가공, 유통, 물류, 판매 영역에서 관측, 예측, 활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데이터 확보, 저장, 분석, 활용)

- 시설원예 중심에서 노지·축산 등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혁신적 농업 모델의 확산 추진
- 중소농·가족농 위한 공동체지원농업(CSA) 기반 구축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추진 *예) 미국 CSA기반 구축 온라인 플랫폼 : 농민은 농장정보와 생산 및 경영 계획을 공개, 소비자는 농장 펀드에 투자한 뒤 생산된 농수산물을 정기적으로 배송 받아 수령
- 어업 가치사슬 전반의 스마트·데이터화 추진
 - 생산(어선·양식장 등 생산지도, 어황정보, 양식 생육데이터 등), 자원(자원관리, 불법어업단속, 유해생물 출현 등), 유통가공(냉동창고 자동 입출고 시스템, 어선·냉동창고 등 전자경매시스템 개발 등) 등 디지털화
 - 스마트 수산물저온유통관리체계 확립, 빅데이터 기반 수산물 공급망 구축
 - 양식품목별 AI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 : 아쿠아팜4.0기술개발, 양식질병 사전예방시스템, 양식수산물 수급·이력 관리를 위한 디지털 맵핑 사업화
- 임업의 스마트화
 -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 정밀 산림데이터 수집분석관리 체계 구축
 - 스마트 산림복지시설·산림헬스케어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
 -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AI기술접목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사태 예측 정확도 향상, 산림병해충 예찰·관리 스마트화 등 안전망 구축

③ 농산어촌의 스마트화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ICT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 인공지능,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5G 등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 의료, 교육, 교통, 재난안전 등 농어촌의 생활환경 문제 해결 뒷받침
 - 도시와 농어촌간 생활 환경 격차 해소에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 어디서나 생활에 불편 없는 365생활권 구축과 연계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농어촌 스마트화
 - 농어촌 특성에 따른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예·경보시스템, 도시와 농촌 연계 인프라구축,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및 거버넌스 구축 등

✓농촌 지역의 더 나은 삶 추구하는 유럽연합의 스마트빌리지 정책

- ☐ 방향: ①인구감소·인구구조변화 대응 ②공공서비스 예산절감 등 지역해결책 모색 ③작은마을·도시간 연계성 개발 ④저탄소 순환경제 전환시 농촌지역 역할 확대 ⑤농촌지역 디지털 전환 촉진
- ☐ 목표: 농촌주민들 간의 유대와 이를 도와줄수 있는 기술의 도입

- 농업인 안전 보건 서비스 확대

④ R&D 혁신

- 화학비료·농약·항생제 감축 및 생태(유기)농업 전환을 위한 생물학적 방제기술, 고품질 유기질퇴비 제조기술, 온실가스저감기술, 탄소농업 등 농어업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기술 개발
- 정부 주도 R&D-지도보급 체계를 정부-민간 협력에 의한 지식생산, 성과확산(실용화), 교육을 연계하는 지식통합체계로 혁신
- 융복합연구 강화, 민간-공공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성과확산체계 다원화, 인재 양성 등 지식통합체계로 혁신
- 연구대상 확대, 연구방법 전환, 연구주체 다양화로 국민체감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성장형·미래지향형, 민간·지역 주도형 R&D 강화
-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립농업생명과학고교와 수해양과학고교 육성,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수해양대학의 창업과정 내실화·현대화, 현장 연구·지도 인력의 전문성 확충

〈총괄표〉 농정틀 전환의 목표와 정책수단별 세부과제

분야	목표	중점 과제 (4개)	세부과제 (34개)
농 어 업	온실가스 순제로 및 생태환경복원 선도 농어업으로 전환 (기후위기극복)	1 1 2	1 2 3 4 1 2 3 1 2 3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으로 먹거리주권 확립 (먹거리위기극복)		1 2 3 4 1 2 3 1 2 3
농 어 촌	농어민주도 재생에너지 확산과 살고싶은 농어촌 조성 (지역위기극복)	3	1 2 3 1 2

분야	목표	중점 과제 (4개)	세부과제 (34개)
농 어 민	농어민 삶의 안전망 구축 (농어가 위기극복)	④ 농수산물 수급·가격안정 및 농어민 안전망 강화	① 푸드플랜 연계 공적영역 공급체계 확립 (공공수매비·촉제 도입)
			② 생산자 지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및 자조금조직 자율성 확보
			③ 디지털통합플랫폼 구축 등 수급 및 가격안정 종합체제 완비
			① 농어기소득 안정 위한 수입보장보합제도 개선 ② 기본소득(농어민, 농어촌주민) 도입 추진 ③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확대 및 임업분야 도입 ① 농어업제한종합대책 마련 (국가지원체계 강화) ② 농어업인 업무상 안전제해 대책 강화 ③ 산림재해대책 강화 ① 청년·후계농어업인 육성 ② 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 인식 개선 ③ 귀농어·귀촌 및 다지역 거주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④ 사회적경제 연계로 농어촌 소득·일자리 생태계 활성화
정 책 수 단	예산·재정	① 예산확충	① 공익형직불제(선택형) 예산 1조원 증액 및 농림수산물분야 예산 5%유지
	법·제도	② 직불제 중심 전환	② 투입제 보조형 지원 축소 및 신규직불예산 확대로 직불제 중심 농정 전환
		① 제정	① (가)국가먹거리기본법, (가)농어촌공간계획법 등
	추진 체계	② 개정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식품위생법, 농업인전보합법 등
		① 지방분권형	① 농정분권종합계획 수립 ② 중앙·지방정부 계획협약제도
	추진 역량	② 민관협력형	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②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 개혁
		① 농어·민·주민·시민사회 추진역량 강화	①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② 교육·홍보·참여 강화
	기술 혁신	② 국가-시민사회-농어민·주민간 사회협약	① 국가·시민사회의 약속 ② 농어민·주민의 약속 ① 농어업SOC디지털화 ② 농어업 스마트화 ③ 농어촌 스마트화 ① R&D연구개발 혁신

뉴노멀 시대 수산·어촌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안)

2021. 4.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목 차

〈요 약〉 뉴노멀시대 수산·어촌 미래비전 마련(안) ..	63
Ⅰ. 추진 배경	66
Ⅱ.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미래 산업구조 전망	67
Ⅲ. 기존 정책 현황 및 한계	71
Ⅳ. 수산어촌 현황 및 전망	74
Ⅴ.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78
1. 기본방향	78
2. 추진전략	79
Ⅵ. 수산·어촌 부문별 핵심과제	80
1. 탄소중립시대 수산업 대응	80
2. 지방소멸시대 어촌사회 유지	85
3. 디지털혁명시대 수산업 전환	91

〈요 약〉 뉴노멀시대 수산·어촌 미래비전 마련(안)

1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한국형뉴딜정책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산업구조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어촌 부문도 변화의 방향성 모색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미래 산업구조 재편을 고려한 한국형뉴딜 정책방안(디지털, 그린, 휴먼뉴딜)을 마련·추진
 - 코로나19로 미래 산업구조의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수산·어촌부문의 대응 방향과 속도의 재정립 필요
 - 지난 해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된 수산분야 7대 이행계획을 포함한 신규 사업발굴, 기존사업의 방향성 재설정 필요
 - 미래 수산·어촌의 정책대상인 국민(소비자), 어업인, 공간(어촌), 산업(수산업), 환경자원(생태계) 등의 역할과 위상을 점점, 방향성 제시
 - 한편, 한국형뉴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미래 수산업 구조를 예측한 근본적인 변화 유도에는 한계가 있음
- 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산정책의 틀 전환을 위한 비전 재설정 필요
 - 미래 트렌드 변화, 사회구조 변화, 경제시스템 변화에 따른 수산정책의 틀 전환을 위한 비전 재설정
 - 코로나19 이후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위한 정책방향과 비전 설정에 맞는 수산·어촌 미래비전 및 정책방향 도출
 - 포스트 코로나19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딜 사업의 디지털, 그린 뉴딜 사업과 수산·어촌 미래비전과의 연결고리 마련

2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

2.1 기본 방향

- 탄소 중립, 지방 소멸, 디지털 혁명시대 대비, 수산업의 발전방향 설정
 - 수산업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이행,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혁명 등에 영향을 받을 것
 - 탄소중립, 지방소멸, 디지털혁명 등의 영향은 뉴노멀 형성의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 우리 수산업도 이에 맞는 중장기 대응방향 마련 필요
- 탄소중립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그린뉴딜사업 확대
 - 탄소중립시대 수산업 부문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수산부문 탄소중립 관련 과학적 연구 및 홍보 강화, 세부 이행계획 수립
 - 수산부문은 기존 사업으로 추진되던 탄소흡수원 확충사업을 확대, 친환경 에너지선박 등의 건조 및 감척 필요, 이를 위한 연근해어업 발전기금 신설이 요구됨
- 어촌복합발전모델이 적용된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의 추진 확대
 - 어촌사회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확대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어촌 신활력 실증사업 등 추진
 -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생활안정을 위한 어촌복합발전모델 개발
 - 어촌의 어항 및 위판장 등을 ESG(환경, 사회, 그린) 투자 거점화하여 투자, 인재 유치 등 확대
- 디지털혁명시대 전통적인 수산업의 이미지를 탈피한 지식산업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객가치’ 지향 수산업, 첨단기술의 수산부문 융합 확대, 수산업의 지식산업화 등 추진

2.2 세부 전략

3대 목표	7대 전략	24대과제
탄소중립시대 수산업 대응	수산부문 탄소중립 대응체계 마련	① 수산부문 탄소중립 대응 거버넌스 구축 ② 수산부문 탄소중립 과학적 연구 확대 ③ 수산부문 탄소중립 이행계획 마련
	수산부문 그린뉴딜 확대	① 수산부문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확대 ② 수산부문 친환경에너지 활용 확대 ③ 그린뉴딜 어항개발 정책방향 설정 ④ 연근해어업 발전기금 신설·운영
지방소멸시대 어촌사회 유지	인구소멸 위기지역 대응강화	① 어촌사회 지역소멸 조사·연구 확대 ② 어촌공동체 지역네트워크 구축 ③ 어촌 신활력 실증사업 추진
	포스트 어촌뉴딜사업 마련	① 어촌복합발전모델(경제+생활) 개발 ② ESG투자 거점화 ③ 스마트어촌 및 에너지자립마을 실증 및 보급 ④ 청년어업 인프라 공유경제 지원 ⑤ 청년·어업인후계자 평생계좌 신설
디지털혁명시대 수산업 전환	‘고객가치’ 지향 수산업으로 전환	① 전주기 비대면 사업화 ② 수산물유통지도 작성 및 활용 ③ 수산물 시장 효율화 및 수급안정화
	첨단기술의 수산부문 융합 확대	① 어업·자원관리 스마트화 ②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활성화 ③ 스마트 유통·가공기술 도입·확대
	수산업의 지식산업화	① 소비자 지향적 R&D 추진 ② 수요예측기반 수산물 생산·마케팅·추천 ③ 씨푸드테크 기술 개발

I.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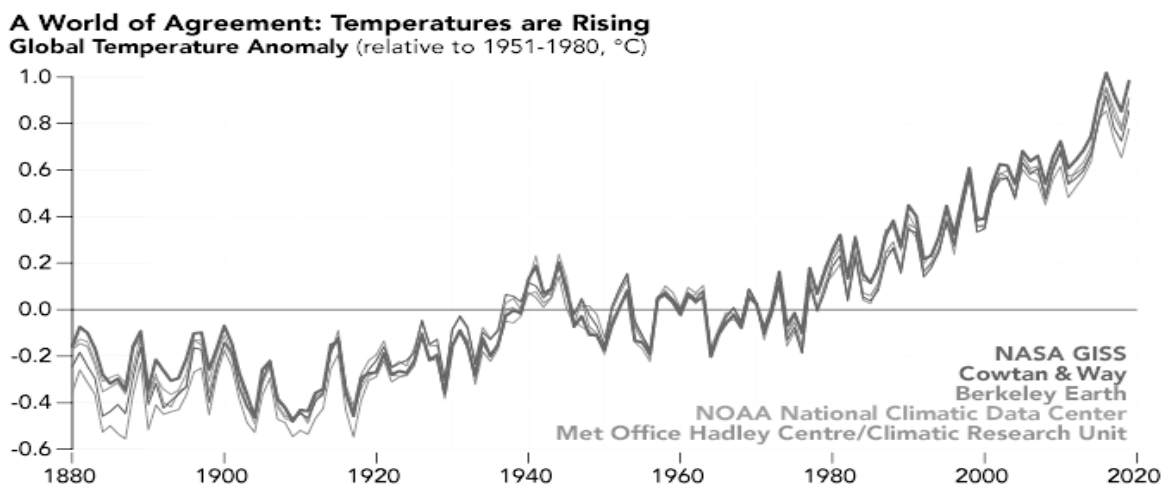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촉발된 산업구조 재편의 가속화에 대응한 수산어촌의 변화방향 모색 필요
 -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미래 산업구조 재편을 고려한 한국형뉴딜 방안(디지털, 그린, 휴먼뉴딜) 마련 및 추진 중
 - 한국형뉴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미래 수산업 구조를 예측한 근본적인 변화 유도에는 역부족
 - 지난 해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된 수산분야 7대 이행계획을 포함한 신규 사업발굴과 기존사업의 방향성 재설정 필요
 - 미래 수산어촌의 정책대상인 국민(소비자), 어업인, 공간(어촌), 산업(수산업), 환경자원(생태계) 등 역할과 위상을 점검하고 방향 제시 필요
 - 코로나19로 미래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어촌분야 대응의 방향과 속도의 재정립 필요
- 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산정책의 틀 전환을 위한 비전 재설정
 - 미래 트렌드 변화, 사회구조 변화, 경제시스템 변화에 따른 수산정책의 틀 전환을 위한 비전 재설정
 - 코로나19 이후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맞는 수산어촌 미래비전과 정책방향 도출
 - 포스트 코로나19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딜 사업의 디지털, 그린 뉴딜 사업과 수산어촌 미래비전과의 연결고리 마련

II.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미래 산업구조 전망

□ (기후·환경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한 탄소중립 이슈화로 환경규제 강화 및 미래 핵심 산업의 변화 전망

- '19년 기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1.05℃ -1.18℃ 상승, '93년 고정밀 관측 이후 해수면은 $3.24 \pm 0.3\text{mm}$ 상승으로 최고치 기록
 - 폭염 및 한파, 폭우 및 폭설, 홍수, 열대성 사이클론, 가뭄, 산불 등 기상이변 발생, 영구동토층의 해빙으로 고대 바이러스 노출 위험
- 21세기 후반 지구 평균기온 0.3~4.8℃, 평균 해수면 0.26~0.82m 상승 전망

〈주요 기관별 지구 상승 기온 관측 현황, 1880~2020〉



자료 : NASA, The Earth Observatory, 2020

- 각 국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청정에너지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중
 - 세계 주요 선진국 Net-zero(탄소 순 배출 “0”) 선언 및 그린뉴딜 제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선언
 - 미국 파리협정 재가입, EU의 대규모 그린본드 발행 등 기후변화 대응 적극 추진
 - 청정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논의 확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규제 강화 및 에너지 산업구조 변화**
 - 친환경 산업 구조가 새로운 경쟁우위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제조설비의 에너지효율이 증대되는 **친환경 공정 구조로 전환**
 - 친환경 제품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복합재 및 경량비철금속 등 전통적 주력 소재의 **전환이 가속화**

□ (기술진보) 4차 산업혁명은 금융, 유통·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

-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등으로 촉발되는 지능화 혁명 시대 도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정보 기술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 결정**

<기술진보 변천사>

산업혁명	기술
1차 (18세기)	(기계화) 증기기관
2차 (19~20세기 초)	(대량생산) 전기·내연기관
3차 (20세기 후반)	(디지털) 컴퓨터·인터넷
4차 (21세기~)	(융합) IoT, 빅데이터, AI

<4차산업혁명의 10대 기술 트렌드>

10대 기술 트렌드
1.AI 및 기계학습 2.IoT 3.빅데이터 4.블록체인 5.클라우드 및 에지 컴퓨팅 6.로봇 7.자율 주행 8.5G 네트워크 9. 게노믹스 및 유전자 편집 10. 퀀텀 컴퓨팅

자료: Forbes, The Top 10 Technology Trend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20

- 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 진전은 미래 산업구조에 지대한 영향
 - 융합부문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IT 와 수송기계·디바이스 산업 간 공급 질서를 변화
 - 최종 생산품 비중이 약화되고 산업 내에서 첨단 중간재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고정밀, 고용량, 초미세 소재·부품·장비 수요가 확대
 - 지능형 생산체계 확산으로 대량맞춤형·대량개인화 된 제품 비중이 확대
-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수산업 자원관리, 어획·양식, 유통가공, 소비부문 대대적 구조변화 촉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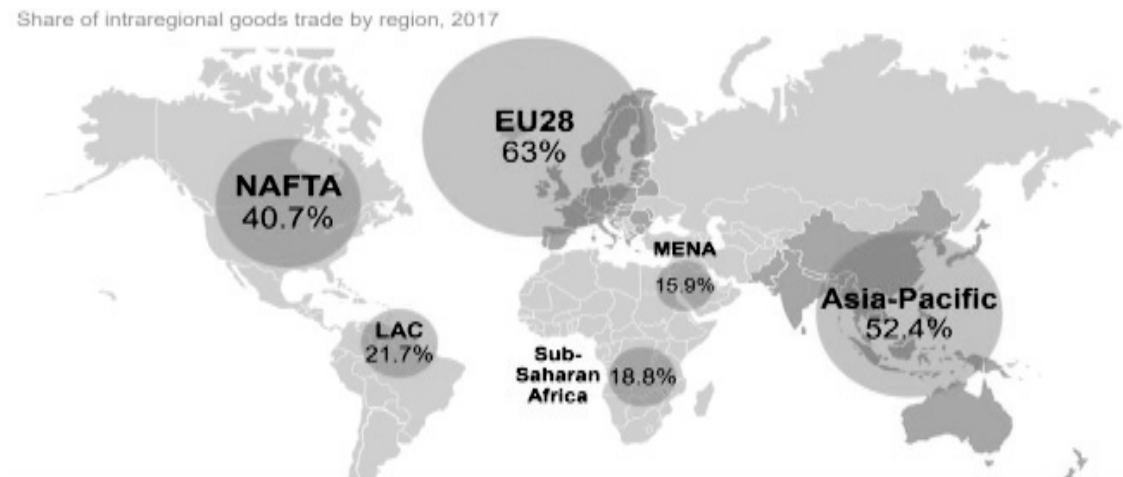
□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세계적으로 GVC 확산 둔화 및 지역화, 지식집약적 상품중심 가치사슬 확산 전망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저하, 지역화(Regionalization) 가속화

- 전세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가치사슬이 대륙 간 지역 내 허브를 중심으로 연계가 강화 되면서 재편

- * '08년 유럽(독일), 북미(미국), 동아시아 3개의 가치사슬 -> '17년 이후 3개 지역 사이 교류 감소
- * 중동, 남미, 남아프리카 주요 허브를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지역화 -> 코로나19 이후 지역화 가속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



- 글로벌 가치사슬은 향후 대소비지 인근을 중심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존재, 소비활동 증가가 예상되는 중국과 아시아가 갖는 중요성 대두

○ 글로벌 가치사슬은 점차 지식중심으로 그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저임금에 기반을 둔 상품생산의 가치사슬이 축소

- * 섬유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저임금 국가에서 고임금 국가로의 수출 : '07년 수출의 55% -> '17년 수출의 43%

○ 세계 무역이 인건비 보다 전문화, 자원접근성, 시장접근성, 기초 인프라의 우수성 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

- * R&D와 브랜드, S/W,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 자산에 대한 지출이 총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 '00년 5.1% -> '16년 13.1%

- 중국의 질적 성장에 따라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환경이 심화되고, 동시에 질적 고도화에 수반되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수입 수요도 증가
- 공급망의 안정성과 가시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므로 공급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밸류체인 내 기업 간 혁신 기반 연계활동 확대
- 밸류체인 위험 분산을 위해 Reshoring, Nearshoring, Offshoring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핵심 중간재를 중심으로 밸류체인 구조가 재편

□ (인구변화) 세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 및 이슈 발생,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부하 발생
 - * 전 세계 인구 '21년 77억 명에서 '50년에서 94억~101억 명 전망
 - 평균 기대수명 증가와 더불어 출산율의 현저한 감소, 1인 독거노인 증가
 - * '50년 65세 이상 고령층, 세계 인구 6명 중 1명 전망(선진국은 4명중 1명)
 - 선진국 중심으로 고령층 1명당 경제활동인구 2명 이하가 부양 전망
 - * '50년까지 경제활동인구(25~64세) 대비 고령층(65세 이상) 비중 꾸준히 감소
- 한국, 저출산 및 고령화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전망
 - '19년 합계출산율 0.92(201개국 중 201위), '20년부터 인구자연감소 시작,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 선진국 중심의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산업 발전
 - 바이오-IT 융합형 산업 성장으로 인체 친화적 바이오신소재 중요성이 증가되어 초소형, 인체친화적, 친환경적 IT 디바이스를 위한 IT부품산업 성장
 - 생산성 유지 강화를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능형 스마트 제조 체계가 확산되어 기계·로봇 및 관련 부품 산업이 성장

Ⅲ. 기존 정책 현황 및 한계

□ (기후변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에 기여 및 기후·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 국가 계획〉

구분	비전/목표	주요 전략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9-’23)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	1.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2. 혁신적인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 경제 3.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20-’40)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1.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2.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3.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6-’35)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1. 건강한 국토 환경, 2. 통합된 안심 사회 3. 포용적 혁신 경제, 4. 글로벌 책임 국가 5.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제3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21-’25)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	1.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2.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3. 적응 주류화 실현

□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기반 양질 일자리 창출, 지능정보 사회 실현 등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심으로 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 계획〉

구분	비전/목표	주요 전략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19)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1. 사회혁신 : 일자리, 교육, 사회보장 2. 산업혁신 :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모빌리티/물류, 스마트시티, 농수산물식품 3. 지능화 혁신 기반 : AI/DATA, 사이버 보안,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
4차 산업 대응계획 I-Korea 4.0 (‘17)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	1.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2.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3.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4. 미래사회 변화 대응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16)	인간 중심 지능정보사회 실현	1. 기업·국민 주도의 지능정보사회 조성 2. 기술·산업·사회를 포괄하는 균형있는 정책 추진 3.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원 4.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개편 및 역기능 대응체계 구축

□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의 다양한 전략 추진 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국가 계획〉

구분	비전/목표	주요 전략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20)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1. 경제활동 참여 확대 2. 지역공동화 선제대응 3. 노동생산성 제고 4.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1~'25)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수산업)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어촌소멸 대응, 기술 진보 활용 등을 위한 다수의 계획 수립

구분	비전/목표	주요 전략
수산업 혁신 2030 ('19)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	1.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2.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 체계 구축 3. 어촌뉴딜 300 사업 등을 통한 어촌재생 본격화 4. 창업·투자 확대를 위한 우수 강소기업 육성 5. 수산유통 혁신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16~'20)	꿈이 있는 어촌, 미래를 여는 수산업	1.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2.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3.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4. 어촌·활력 제고 5.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 수산 분야 ('19)	스마트 해양수산 선도국가 도약	1.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 정착을 위한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보급 2.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기르는 스마트양식 개발·확산 3. 유통과정 최적화·투명화 등 소비자가 안심하는 스마트 유통·가공 체계 구축

□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한 경기침체 및 현안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한국판 뉴딜 등 추진

- 코로나19 극복 및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추진
 -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수시 개최
 - 「코로나19 경제 비상대책」으로 실물 피해대책, 금융안정 및 고용안정, 경기보장 등을 위해 2020년 총 4차에 걸쳐 총액 약 67조원의 추경 편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이 추진
 - 본 미래경제전략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강력 추진되고, 안전망 강화(휴먼뉴딜)로 뒷받침
 - 2025년까지 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해 총190.1만 개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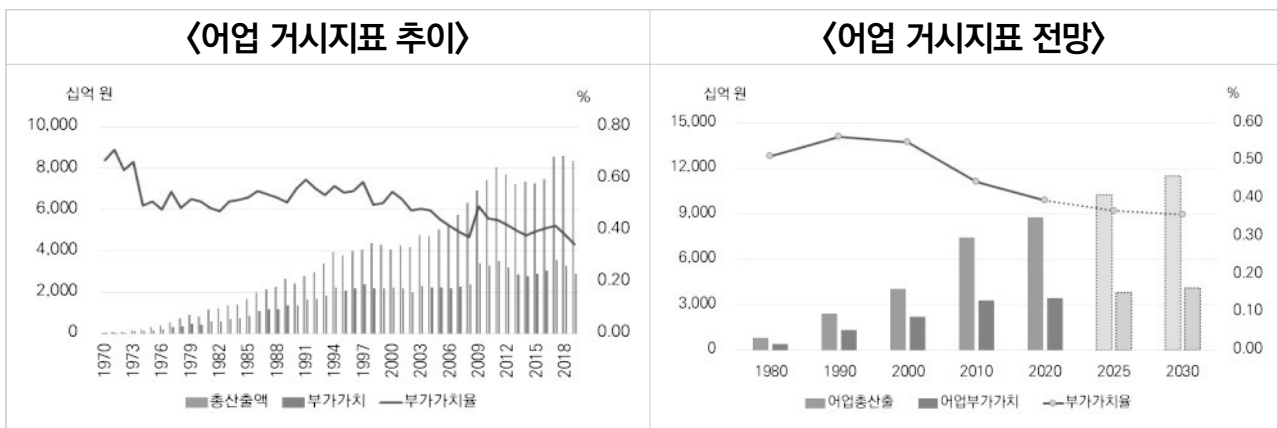
□ (한계) 최근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수산업과 어촌의 수용성 및 실질적 이행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및 제도 마련 미흡

- 수산업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규범의 틀 내에서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고 국내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가 오랜 기간 정착됨
-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범에 포함되는 정책은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 보조금, 탄소중립 등 이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 국제 거버넌스 틀 안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
- 현재 탄소중립, 어촌소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 등의 이슈들이 수산업과 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다수의 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
- 특히, 글로벌 이슈와 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어업인의 입장에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의 계획은 미흡함

IV. 수산업 현황 및 전망

□ 어업총산출 및 어업부가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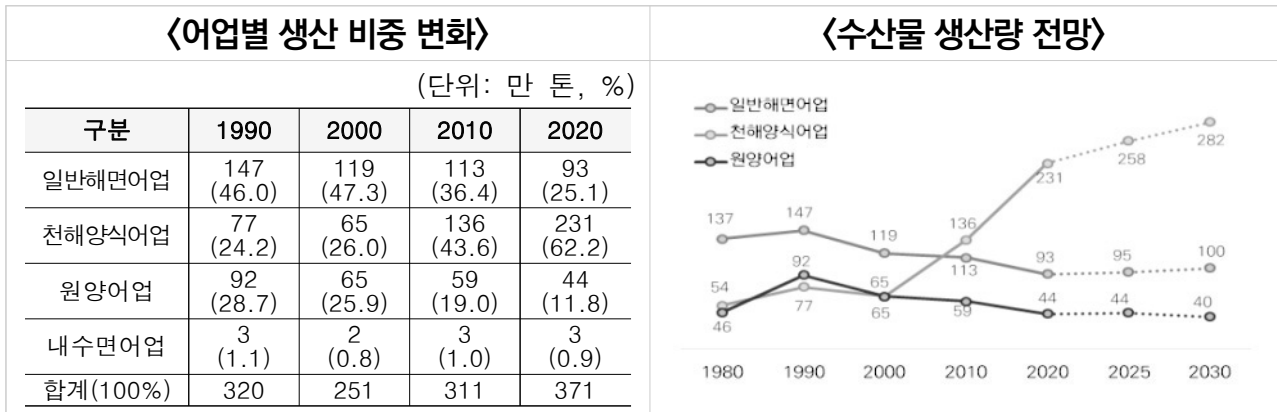
- 어업은 성장 추세이나 국민경제에서의 산업적 위상은 계속 축소, 어업 부가가치율도 각종 원자재 및 서비스 가격 상승 영향으로 하락 추세
 - '00년 어업총산출은 4.1조 원에서 '20년 8.8조 원으로 연평균 3.9%씩 증가, 반면 어업부가가치는 연평균 2.2%씩 증가하여 채산성이 계속 악화 추세
- '30년 어업총산출은 11조 5천억 원, 부가가치는 4조 1천억 원으로 '20년 대비 각각 31.4%, 19.4% 증가, 부가가치율은 약 36% 수준으로 전망



□ 수산물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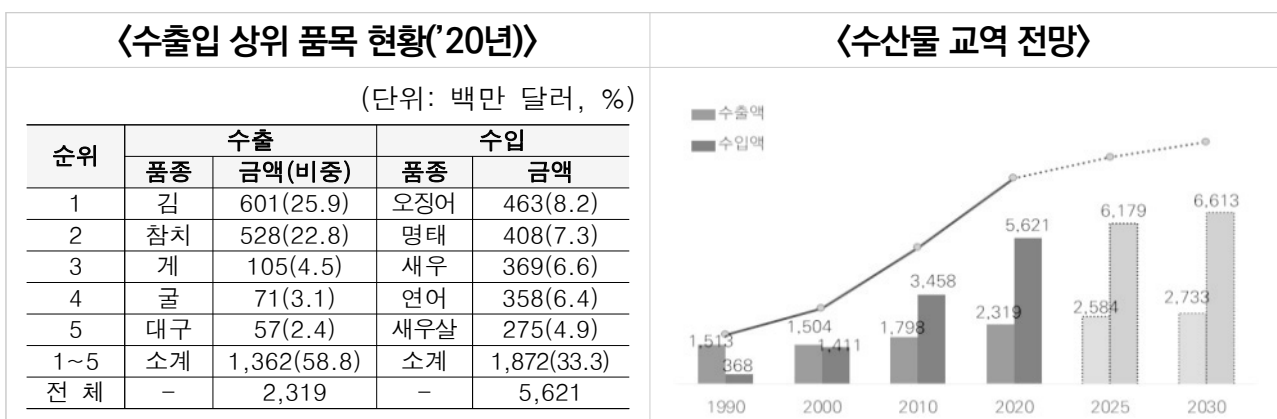
- 수산물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양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증가 추세, 일반해면어업 생산은 2016년 이후 100만 톤 이하 추세가 고착화
 - '00년 생산비중은 일반해면 47.3%, 양식 26.0%, 원양 25.9%에서 '20년 일반해면 25.1%, 양식 62.2%, 원양 11.8%로 20년 동안 급격한 생산구조 변화
- 지난 20년 동안 어업생산량은 연평균 2.0% 증가했는데, 이는 양식어업 해조류 생산이 7.9%씩 증가한 것에 기인
 -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어류와 연체동물은 각각 연평균 0.5%, 6.0%씩 감소, 갑각류 및 패류 생산은 각각 2.1%, 2.6%씩 증가
 - * 어류: ('00)128만 톤→('00)115만 톤 / 연체동물: ('00)43만 톤→('00)13만 톤

- 어업별 생산량 추세를 고려할 때 '30년 수산물 총생산량은 '20년 대비 연평균 1.4%씩 증가, 일반해면 0.7%, 양식 2.0% 증가 전망
 - 이는 지난 20년간의 추세만을 고려한 전망으로서 수산자원 변동, 해어황의 불확실성, 출어경비 변화 등이 고려되지 않아 전망치가 바뀔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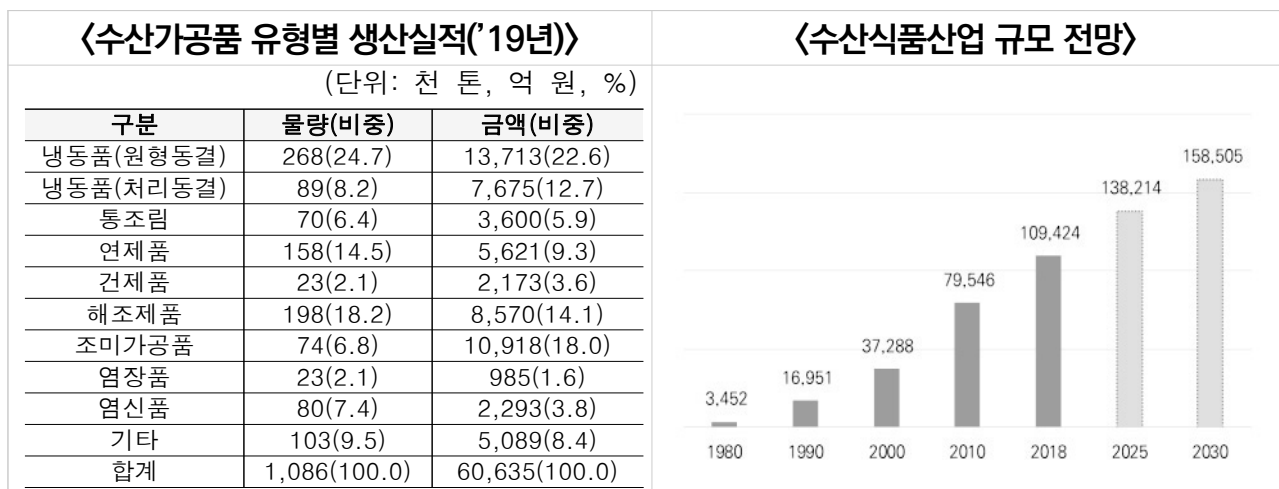
□ 수산물 수출입

- 수산물 무역은 '10년 53억 달러에서 '20년 79억 달러로 연평균 4.2%씩 성장,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전 세계적인 수산물 교역 위축
 - 최근 비대면 소비 확대로 가공품 무역이 소폭 증가, 그러나 여전히 원물 수출 비중이 높고, 수출국·품목의 편중 현상도 심화되면서 다변화 시급
 - * '20년 원물 수출비중 54.5%(활어, 신선냉장, 냉동), 수출 상위 3개국 비중 61%
 - '20년 수출은 김, 참치, 게, 굴, 대구 순으로 5개 품종이 전체 수출의 59%, 수입은 오징어, 명태, 새우, 연어, 새우살 순으로 전체 수입의 33.3% 차지
- '30년 수산물 교역규모는 '20년 대비 17.7% 증가한 약 93.5억 달러로 전망, 수출과 수입 모두 연평균 1.6 ~ 1.7% 수준에서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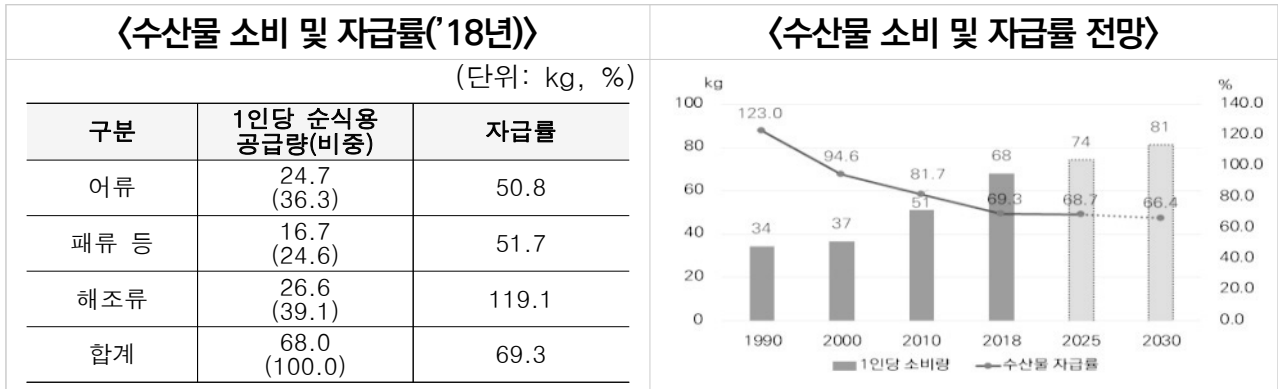
□ 수산식품산업

- 국내 수산가공품 생산은 '14년 234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연근해 어획량이 줄며 계속 감소하여 '19년 109만 톤으로 최저치 기록
- 냉동품, 건제품, 해조제품, 염장품, 염신품 등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가공품 생산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
- 수산물 가공업과 처리·저장업을 포함한 국내 수산식품산업 규모는 '18년 10.9조 원이며, 추세 전망 시 '30년에는 15.8조 원 수준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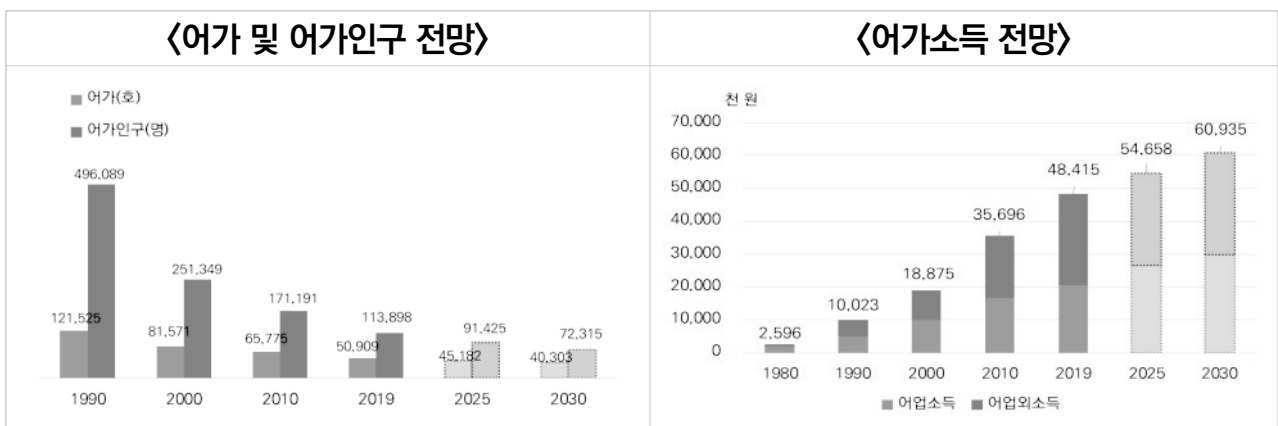
□ 수산물 소비 및 자급률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산물 순식용 공급량은 '18년 기준 68.0kg 수준으로 어류 24.7kg, 패류 16.7kg, 해조류 26.6kg임
- 현행 수산물 공급량 집계에는 비식용(사료용) 수산물 포함, 해조류도 원물 기준 집계로 국민들이 실제 섭취하는 소비량에 비해 과대 추정되고 있음
- 국내 생산이 소비에 대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급률은 '18년 기준 어류 50.8%, 패류 51.7%, 해조류 119.1%로 수산물 전체는 69.3% 수준임
- 수산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의 정체 및 수입 증가 영향으로 자급률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30년 국민 1인당 수산물 순식용 공급량은 80kg를 넘을 것으로, 그리고 수산물 자급률은 정책적 노력에 따라 66.4% 수준으로 전망됨



□ 어촌어가경제

- 어가, 어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직면, 어촌사회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19년 어가 및 어가인구는 20년 전인 '00년 대비 연평균 2.5%, 4.1%씩 감소하여 농가(1.7%) 및 농가인구(3.0%) 감소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 어가 및 어가인구: ('00)8.2만 호/25.1만 명→('19)5.1만 호, 11.4만 명
 - * 농가 및 농가인구: ('00)138만 호/403만 명→('19)101만 호, 224만 명
- '19년 기준 어가소득은 4,842만 원으로 지난 20년간 연평균 5.1%씩 상승하였는데 어업소득(3.9%)보다 어업외소득(6.2%) 증가가 더 컸음
 - '19년 농가소득 4,118만 원에 비해서는 약 1.2배 많지만, 도시근로자가 구소득 6,666 만원의 73% 수준임
- 한편, '30년 우리나라 어가는 약 4만 호, 어가인구는 7.2만 명, 어가소득은 6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V.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방향

- 탄소중립, 지방소멸, 디지털혁명 등 대응을 위한 수산어촌의 발전방향 설정
 - 우리 수산어촌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이행,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예견되는 지방소멸,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혁명에 영향
 - 탄소중립, 지방소멸, 디지털혁명 등의 영향은 뉴노멀 형성의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수산어촌도 이에 맞는 중장기 대응방향 설정 필요
- 탄소중립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그린뉴딜사업 확대
 - 탄소중립시대 수산업 대응을 위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수산부문 탄소중립 관련 과학적 연구 확대 및 이행계획 마련
 - 수산부문은 기존 사업으로 추진되던 탄소흡수원 확충사업을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선박 등 건조 및 감척 필요, 이를 위한 연근해어업 발전기금 신설·운영
- 어촌사회 유지를 위한 어촌복합발전모델을 적용한 포스트 어촌뉴딜사업 등 추진 확대
 - 어촌사회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조사연구를 확대하고,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어촌 신활력 실증사업 추진
 -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은 경제활성화와 생활안정을 위한 어촌복합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어촌의 어항, 위판장 등을 ESG투자 거점화하여 투자, 인재 유치 등 확대
- 디지털혁명시대 전통적인 수산업의 이미지를 탈피한 지식산업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객가치’ 지향 수산업, 첨단기술의 수산부문 융합 확대, 수산업의 지식산업화 등 추진

3대 목표	7대 전략	24대과제
탄소중립시대 수산업 대응	수산부문 탄소중립 대응체계 마련	① 수산부문 탄소중립 대응 거버넌스 구축 ② 수산부문 탄소중립 과학적 연구 확대 ③ 수산부문 탄소중립 이행계획 마련
	수산부문 그린뉴딜 확대	① 수산부문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확대 ② 수산부문 친환경에너지 활용 확대 ③ 그린뉴딜 어항개발 정책방향 설정 ④ 연근해어업 발전기금 신설·운영
지방소멸시대 어촌사회 유지	인구소멸 위기지역 대응강화	① 어촌사회 지역소멸 조사·연구 확대 ② 어촌공동체 지역네트워크 구축 ③ 어촌 신활력 실증사업 추진
	포스트 어촌뉴딜사업 마련	① 어촌복합발전모델(경제+생활) 개발 ② ESG투자 거점화 ③ 스마트어촌 및 에너지자립마을 실증 및 보급 ④ 청년어업 인프라 공유경제 지원 ⑤ 청년·어업인후계자 평생계좌 신설
디지털혁명시대 수산업 전환	‘고객가치’ 지향 수산업으로 전환	① 전주기 비대면 사업화 ② 수산물유통지도 작성 및 활용 ③ 수산물 시장 효율화 및 수급안정화
	첨단기술의 수산부문 융합 확대	① 어업·자원관리 스마트화 ②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활성화 ③ 스마트 유통·가공기술 도입·확대
	수산업의 지식산업화	① 소비자 지향적 R&D 추진 ② 수요예측기반 수산물 생산·마케팅·추천 ③ 씨푸드테크 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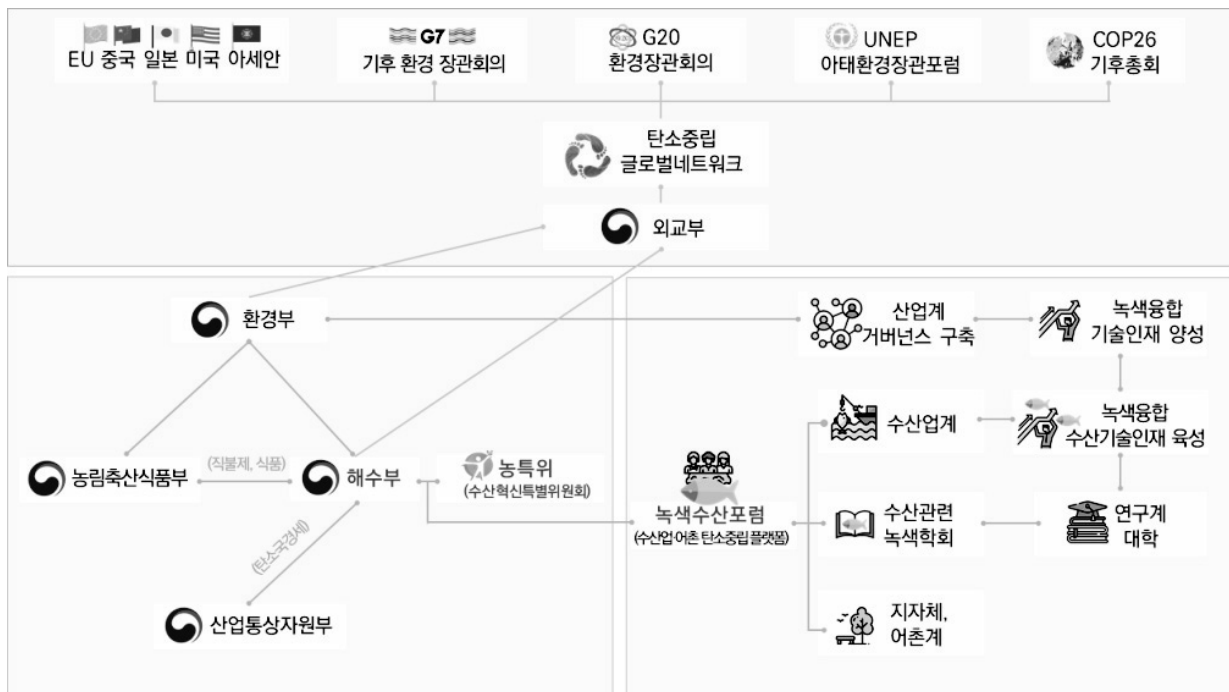
IV. 수산·어촌 부문별 핵심과제

1 탄소중립시대 수산업 대응

가. 수산부문 탄소중립 대응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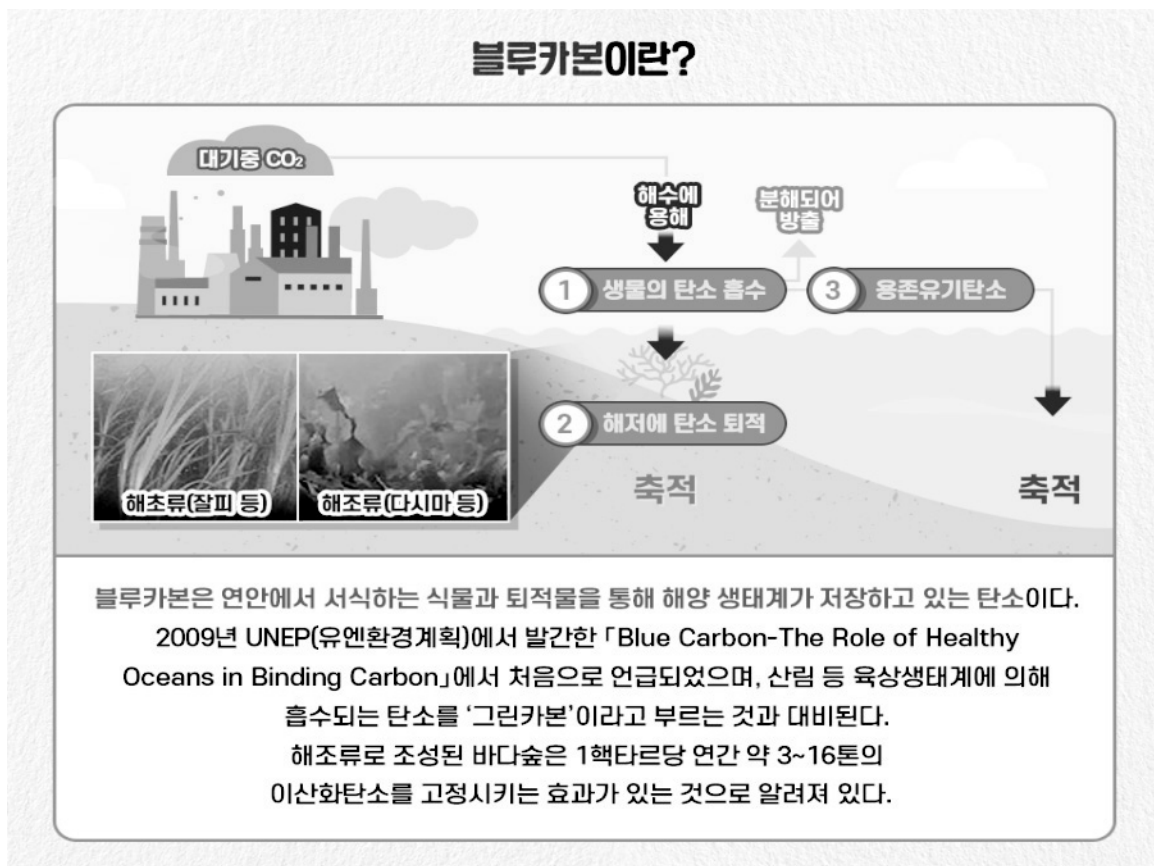
□ 수산부문 탄소중립 대응 거버넌스 구축

- 환경부 주도의 협업체계에서 해수부의 관련 이슈별 협력체계 구축
 - 환경부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에서 해수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탄소중립 관련 직불제, 식품관련 정책 협업, 산업통상자원부와는 도입가능성이 높은 탄소국경세 등 협력, 외교부와는 주요국과의 수산부문 협력체계구축과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 시 수산부문의 입장 교환
 - * EU 등 탄소국경세 대응 고탄소 제품 수입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탄소국경세 추진(CMAM, Carbon Border Adjust Mechanism) EU '23년 시행목표
- 수산업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수산업계, 수산관련 녹색학회, 지자체 및 어촌계가 포함된 녹색수산포럼 창립 및 수산업어촌 탄소중립 플랫폼 마련



□ 수산부문 탄소중립 대응 과학적 연구 확대

- 수산부문 탄소중립 관련 과학적 연구기반 확대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기관,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학회 및 관련 포럼에 대한 연구 지원
 - 국내 연안 바다숲의 온실가스 고정효과에 대해 과학적 연구 확대 및 국제사회 인증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분석 결과 축적
 - 대기중 해수로 녹아 들어간 이산화탄소의 측정, 해조류에 의해 흡수된 생체, 퇴적물, 해수 중 유기탄소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분석¹⁾
 - 바다숲 조성과 관련해 ‘트론톤 어초’를 생산하는 포스코-포항공과 대학교가 블루 카본에 대한 연구 진행 중인 과제의 확대 추진
- * 연안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통해 해양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임. 산림 등 육상생태계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인 ‘그린카본’과 대비되는 개념임



1) 포스코뉴스룸(<https://newsroom.posco.com/kr/영일만-친구는-바다가-고향이란다-바다숲-조성/>)(검색일자: 2021.2.27.)

□ 수산부문 탄소중립 이행계획 마련

- 우리나라 탄소중립 관련 이행계획은 환경부 주도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도출 및 부처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추진 중
 -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경제성장 달성, 포용사회 구현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를 비전으로 추진
 - 3대 정책방향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에너지 전환, 탈탄소 산업구조,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도시·건물, 흡수원 관리,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농축산·식품부문 관리), 신유망 저탄소산업·기술 생태계 조성(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생태계 저변, 녹색기술 혁신),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전환(기후위기 적응, 취약산업·계층보호, 지역공동체 중심 기후탄력성 강화)임
- 수산부문 탄소중립 이행계획에 앞서 수산물의 업종별, 생산에서 유통, 가공, 소비단계별 탄소배출 현황 분석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단계별 이행계획 마련
 - 수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수산관련 기술 생태계 조성, 기후위기 적응 및 취약산업 및 계층 보호, 어촌·섬 지역 등 지역공동체의 기후탄력성 강화 등 추진 필요
 - 화석원료 사용이 가장 많은 어선어업의 에너지 전환을 우선하고,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이행, 바다를 중심으로 한 바다숲 조성, 갯벌 복원사업 등을 통한 흡수원 관리, 해조류 양식 등의 탄소흡수원 인증 등 필요
 -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이행, 수산관련 녹색기술 혁신 등 추진
- 수산부문 중 취약산업 및 계층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형 공익적 직불제 신설
 - 수산업분야 고유의 1차 생산(어패류생산, 해조류생산)부문 뿐만 아니라 대기정화, 생물다양성보전 등 ‘친환경적 공익적 가치 공동 개발’을 통한 2050년 탄소중립 정책에 선제적 대응
 - 내수면, 바다 등 탄소정화 순기능 정밀 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 연구 선행 필수
 - 추후 수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임업의 대기정화 요소를 정밀 분석하여 ‘(가칭)농·임·수산업 분야 공동 친환경 직불제’ 신설

나. 수산부문 그린뉴딜 확대

□ 수산부문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확대

- 갯녹음 발생해역에 해중림초, 수중저연승, 모조주머니, 부착기질 개선, 조식동물 구제, 기술개발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바다숲 조성 및 관리
- 해양생태계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갯벌 복원사업 확대로 해수소통로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

□ 수산부문 친환경에너지 활용 확대

- 친환경 에너지 시설·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및 중장기 계획 마련
 - 수산업 분야별 친환경 에너지 기반 시설·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지원 체계 수립
 - 친환경 에너지 시설·장비 관련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연구 실시
 - 수산분야 친환경 에너지 유망 연구개발 사업의 발굴·지원 및 업계 기술 수요 조사 실시
-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어선기관 개발·보급
 - 수산업의 부문별 활용유형별, 조업형태별 등 각 특성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어선기관 개발
 - 개발된 친환경 에너지 어선기관의 기술 표준화, 성능 검증 및 기술 보급

□ 그린뉴딜 어항개발 정책방향 설정

- 탄소중립 2050,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ESG(환경, 사회, 그린) 등 국내외의 정책동향 분석 및 중장기 어항정책 방향성 설정
 - 국가어항의 탄소배출 현황 및 어항구역(육역/수역) 내 친환경 산·재생에너지 도입여건에 대한 기초조사
- 국가어항의 입지환경과 규모 특성을 고려하여 그린뉴딜 어항개발의 전략모델 개발과 도입시설 등을 마련

□ 연근해어업 발전기금 신설

- 어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이용자 부담 원칙의 연근해어업 발전기금 신설
 - 연근해어업 발전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법·제도적 검토 및 법적 근거 마련
 - 연근해어업 발전기금의 재원, 운용·관리, 용도 등에 대한 세부 내용 마련, 어업인 의견 수렴 후 발전기금 신설
- 신설된 기금의 재원·운영 등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방안 필요
 - 연근해어업 발전기금이 신설될 경우,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마련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체계적인 방안 마련
-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방안 마련 및 효율적 운영 계획 수립
 -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기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 자동화 어로장비·스마트어선 개발 및 신조 지원, 연근해어업 관련 인프라 투자 등의 기금 활용 방안 발굴과 효율적인 기금 운영 시스템 구축
- 연근해어업 발전기금이 연근해어업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되고 이는 다시 어업인의 이익이 되는 등 기금의 선순환성에 대한 어업인 설명회 개최

가. 인구소멸 위기지역 대응 강화

□ 어촌사회 지역소멸 조사연구 확대

- 어촌공동체 동질성과 생활·경제권을 기반으로 ‘어촌지구’로 정의하는 최소공간단위 구획, 장기적으로 소규모 어촌지역의 사회경제변화를 추적 조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방소멸의 위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력지수’ 개발

□ 어촌공동체 지역네트워크 구축

-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농·산·어촌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을 위한 도전과제 공유와 문제인식 공유로 공동의 대응방안 마련
 - 어촌사회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전문가, 공동체가 어촌현장에서 현안 진단과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어촌현장포럼 운영
- 자체, 유관기관, 대학, 지역공동체가 농산어촌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11 시·도를 5대 권역별 지역네트워크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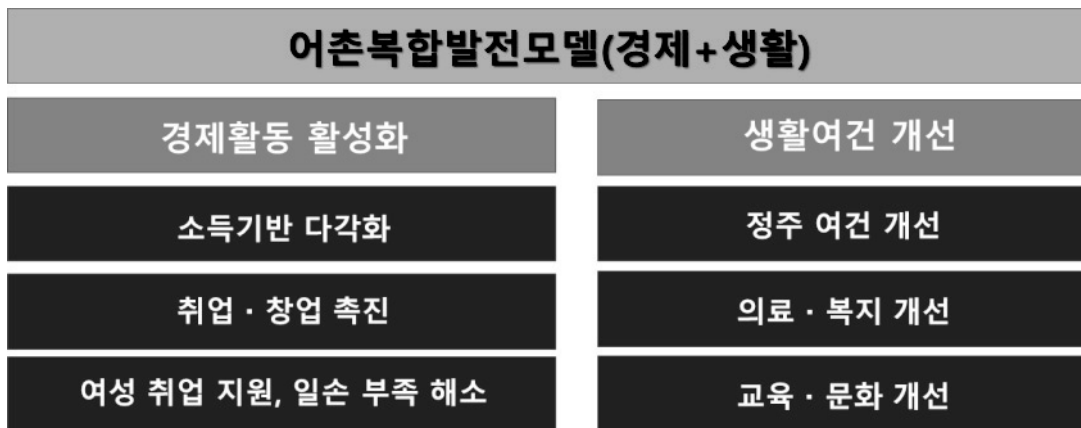
□ 어촌 신활력 실증사업 추진

- 어촌사회 지역소멸 위기에 대함 심층적인 홍보영상 제작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어촌문제를 부각
- 어촌사회 지역소멸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유입, 이탈방지 등 특단의 사회혁신을 위해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기반을 마련
- 국내외 동향분석을 통한 어촌소멸 조기 감지 및 대응 역량 강화
 - 전문가 인터뷰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어촌소멸 위험요소, 대응 성공사례, 정책동향 등 소개
 - 어촌 지역소멸 지역별·요인별 미래전략 정보 수집 및 온라인 정보 제공

나. 포스트 어촌뉴딜사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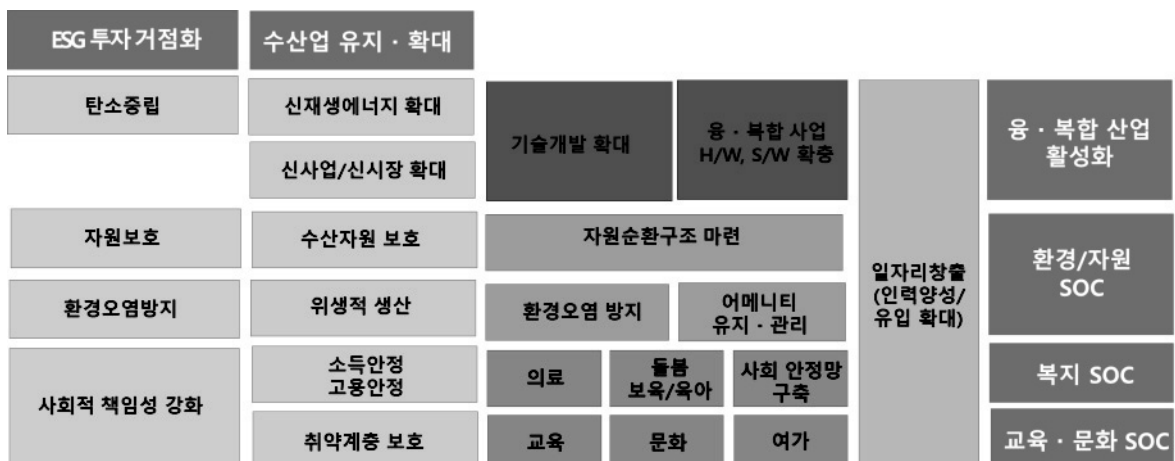
□ 어촌복합발전모델(경제+생활) 개발

- 어촌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수산업·어촌유지를 위한 융·복합 산업, 환경자원, 교육·문화, 복지 등 관련 SOC와 관련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
- 수산업 유지·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신사업·신시장 확대, 수산자원보호, 위생적 생산, 고용안정, 취약계층 보호 등 강화
- 저밀도·비대면 사회 수요증가에 대비한 미래형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융·복합산업 활성화, 환경/자원, 교육·문화, 복지 SOC 등 추진



□ ESG투자 거점화

- 미래 지속가능 사업(탄소중립, 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인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투자의 핵심거점 지역으로 어촌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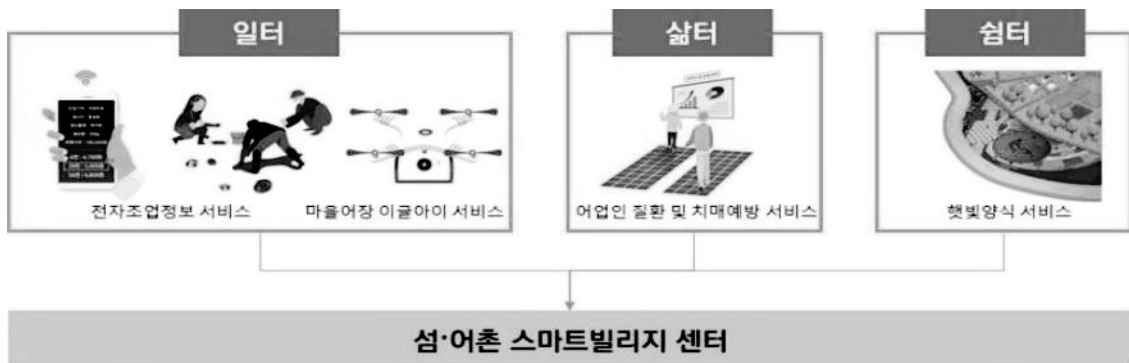
〈포스트어촌 뉴딜 사업을 위한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 재분류〉

구분		사업명
수산업 유지·확대	신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양식장 개발
		에너지 절감형 콜드체인 구축
	신사업/ 신시장 확대	비대면 유통·소비 대응
		수산물의 HMR, 밀키트 제품 확대
		수산분야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
		낚시학교 건립 및 체험시설 확충
		종자산업, 관상업 산업 육성
		산지·소비지 수산물 풀필먼트 시스템 지원
	수산자원보호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 운영
		내수면 자원조성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스마트 불법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ITQ 제도 도입
	위생적 생산	생산해역 안전성 조사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수산생물 양식장 질병관리 등급제
		산지위판장 품질유통관리 전담인력 배치
		수산물 품질인증제 개편 및 소비자 인식제고
	소득안정/ 고용안정	수산공익직불제
		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
		어선연금제도
	취약계층 보호	수산식품 바우처 제공
		공공급식 확대
융·복합 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확대	수산식품 기술 그로업(R&D)
		미래수산식품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양식 기자재 규격화 및 제품화
		수산물 표준·등급규격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씨푸드테크(대체육, 3D프린터, 곤충사료 등) 개발
	융복합사업 H/W, S/W 확충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FPC 활성화 지원
		공유 수산가공시설 운영
		양식장 디지털 수질측정·기록 장비 보급
		디지털경제 대응 수산업 데이터 댐 구축 사업
		수산물 품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ESG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 마련

구분		사업명
투자 거점화		연근해어선 감척 자원 확보
		그린뉴딜 어항정책 개발
		신재생에너지원 확충
	자원보호	수산자원보호 펀드 마련
	환경오염방지	청정어항 및 양식장 재생사업
	사회적 책임성 강화	MSC, ASC 등 지원 확대 취약어가,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 자금 조성
환경/자원 SOC	자원순환구조 마련	양식 폐자재 리사이클센터 운영
		친환경 어구 보급
	환경오염 방지	선박 소각설비 지원·설치 사업
	어메니티 유지·관리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직불제 연계) 지역 환경자원 활용성 제고
복지 SOC	의료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 취약지역 지원 확대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돌봄 보육/육아	통합돌봄 인프라 조성
		통합돌봄 모델 개발 및 확산
	사회안전망 구축	주민주도의 어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스마트 어촌 조성
		작업 안전 보장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교육·문화 SOC	교육	학생 교육복지 증진
		ICT 기반 교육서비스 제공
		지역 평생교육 강화
	문화 여가	문화 공동체 활성화 향토문화자원 활용 생활문화 육성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청년어업인 개인개발계좌제도 신설
		양식창업 생애주기 정책 시행
		공동 창어 사업 활성화 지원
	인력유입	삶의 질 등 서비스업에 청년 어업인 참여 보장
		청년어촌취업지원
		어선 청년임대 시범사업
		청년 어촌계 정착지원 사업 추진
		어업법인 취업사업 활성화 지원
		어가 경영승계 지원

□ 스마트어촌 및 에너지자립마을 실증 및 보급

- 어촌사회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어촌 선도모델 발굴 및 실증사업
 - (작업환경 개선) 어업현장은 고령화와 인력부족, 열악한 작업환경에 따른 질환·사고가 높아 누구에게나 쉽고 안전한 작업여건 구축하는 사업모델
 - (환경대응) 기후·해양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환경관리, 에너지 자립 등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 (삶의 질 개선) 입지·환경적 특성(국토 외곽 입지, 해상교통)과 부족한 생활 SOC 여건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 사업모델
 - (해양레저 수요) 주52시간 정착과 국민의 레저·여가 수요증가, 어촌의 관광인프라와 활동은 국민의 니즈에 부합하는 사업모델



- 어촌의 입지·환경적 특수성과 축적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주민주도 에너지 자립을 통한 사회혁신
 - (에너지 자립) 어촌사회의 유헴공간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주민주도로 기획하여 에너지 발전, 절전, ESS(저장) 등을 추진
 - (경제적 자립) 잉여전력 판매,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청년층 에너지산업, 고령층 소일거리) 등 통해 어촌계 마을연금제도 도입 추진

어가(개별주택) 활용형



유헴어항 활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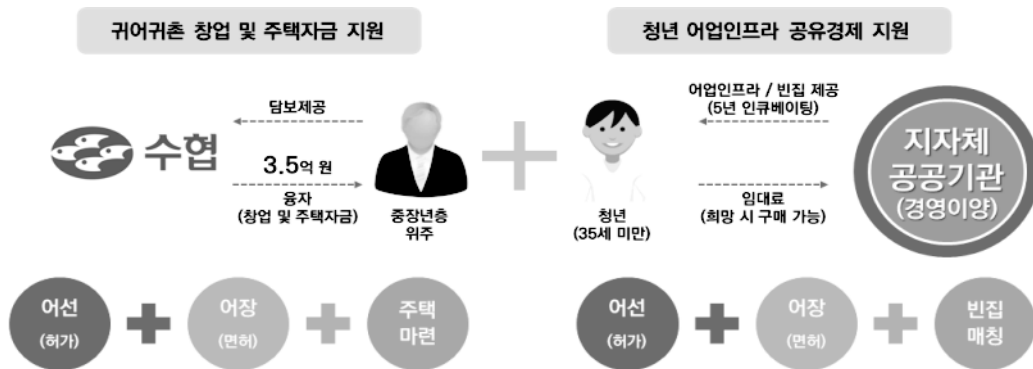


폐염전 활용형



□ 청년 어업인프라 공유경제 지원

- 어업인프라 및 주거지 문제 등 정착자금 마련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촌사회의 높은 진입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 모델 활성화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어업인프라(어선, 어장 등)와 유희자원 수급 파악을 통해 ‘수산분야 인프라 공유경제 거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청년·어업인후계자 평생계좌 신설

- 청년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의 지속적인 수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직업 교육을 위해 각각의 청년어업인과 어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개인개발 계좌제도를 마련
- 첫 계좌 발급 이후 수산업 관련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초기 자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위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수산업을 하지 않고 쉬는 기간, 수산업 관련 창업, 사업에 실패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평생에 걸쳐 지급
 - 단, 수산업 종사 또는 어촌 거주를 포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좌를 폐기

가. '고객가치' 지향 수산업으로 전환

□ 전주기 비대면 사업화

- 수산업 및 어촌 분야의 전주기 디지털 데이터화 기술 개발
 -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어촌 분야의 비정형 데이터 수집, 분야별 데이터의 표준화, 환경·에너지·금융 등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 기술 개발
- 전주기 디지털 데이터화 및 공통 플랫폼 개발
 - 귀어·귀촌, 창업·투자, 마케팅, 국내외 및 지역, 생산자 및 기업의 연계 등 수산업·어촌을 위한 대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수산물 생산-유통-소비의 투명성 확보, 전국 단위 수산물 수급·가격 분석 및 예측서비스, 수산물 유통효율화 서비스 등의 기술 개발
- 생산자 대상 온라인 유통역량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연령별,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여 온·오프라인 교육 시행,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각종 인증 획득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지역 소재 기업의 R&D 참여를 통한 공공 플랫폼 구축, 지역 내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통한 온라인 유통 활성화 전략 마련
- 수산물의 직거래 등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
 - 「수산물 유통법」에 수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지역 수산물의 이용 촉진, 온라인 유통 확대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구체화하는 개정 추진
- 최근 확대되고 있는 풀필먼트(Fulfillment) 시장의 수산물 활용
 - 수산물은 부패성으로 유통과정에서 상품관리가 어려움. 또한 상품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시설(냉동창고, 활어용 수조 등)이 필요함에 따라 풀필먼트 시장에서 선호되지 않지만, 향후 안정적 신선식품 공급을 위해 활용 확대

□ 수산물 유통지도 작성 및 활용

- (유통실태조사 개발) 수산물 유통단계별, 거래당사자별 표준화된 항목을 개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조사 진행
 - 산·학·정·연 수산물 유통 전문가 TF를 구성, 표준화된 항목 개발 필수
- (QR코드 생성 및 부착) 유통단계별 이력 정보 확인용 QR코드 자동 생성기계 개발 및 보급, QR코드 부착 의무화로 이력정보관리 일원화를 통한 수산물이력시스템구축
- (유통이력시스템과의 연계) 수산물 유통업계가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유통플랫폼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이력제, 수입수산물유통이력시스템등과 연계하여 관리효율성 확보
 - 수산물이력제, 수입수산물유통이력시스템등에서 공동 적용 항목 발굴 및 유통업자별 플랫폼 항목 확인을 통한 필수 공동항목의 연계
 - 업계의 개별플랫폼 인터페이스와 국립수산물품질원 데이터베이스에 공동항목이 없는 경우 항목 추가를 통한 시스템 일원화
- (수산물 유통지도 작성 및 활용) 일원화된 유통이력시스템을 통한 수산물 유통지도 작성 진행 및 수산물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 수산물 유통 효율화 및 수급안정화

- 산지 직송 벨류 체인 구축, 풀필먼트 기업 활용, 수산물 온라인 플랫폼 (수산물 온라인커머스 기업) 활용 등을 활용한 유통 단계 단축
- 위생적인 경매방식, 산지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의 저온 유통시스템 구축, 수산물 규격화 거래,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수산물 유통 효율화
-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급측면의 입식·양성물량 관리와 수요측면의 품목별 수요채널 다변화

나. 첨단기술의 수산부문 융합 확대

□ 어업·자원관리 스마트화

- 어획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보고하고 점검하는 AI 오피서버 개발 및 도입
 - 어구 사용량, 어획 위치, 어획물의 종류·길이·무게, 어획 어업인, 불법어업 등의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보고하는 선상 AI 오피서버와 이를 육상에서 점검하는 육상 AI 오피서버 개발
 - 선상의 어획 보고와 양륙지의 어획 신고 교차 확인 시스템 개발 및 도입, 유통 단계의 이력 정보와 연계
- 어업·자원 관련 빅데이터 DB 구축 및 분석·예측 시스템 도입
 - 어업·자원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 운영
 -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빅데이터 분석 정보 제공을 통한 자원 증감 등 변동성 대응 및 어업·자원 관리 대책 수립 지원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활성화

- 지역별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연계하는 국가 단위 협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성과 확산 및 국내 스마트 양식 저변 확대 추진
 - 사업 참여 SPC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 개발된 신품종, 양식 기술, 첨단 기자재의 공동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 스마트 양식 SPC를 지역내 스마트 양식 거점으로 활용하고 품종별 특화 기술에 대한 민간 보급 추진하여 스마트 양식 기술의 전국 확산 도모
- 스마트 양식에 대한 관심이 기존 양식 어가까지 확산됨에 따라 사업추진방법 전환
 - 기존 사업 추진 방식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와 신규 배후부지를 고려한 사업이었으나 이는 기존 양식 단지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 초래

- 지역 여건상 원거리에 배후부지를 설정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추진 유형 다양화를 통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도출 필요
-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와 배후부지 사업의 탄력적 분리 추진
 - 기존 양식 밀집 지역의 경우 스마트 양식 신기술을 개발 보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지역 내 보급하는 기술 전파형 사업 추진
 - 전국 규모 양식 확대가 가능한 대중시장형 품종의 경우 지역적 배후부지 연계와 별도로 품종 기술 개발에 특화된 R&BD형 사업 추진

□ 스마트 유통·가공기술 도입·확대

- 신선식품의 단계별 안전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유통 시스템 구축
 - 친환경 상변화 물질적용 멀티 보냉팩 및 친환경 포장용기 개발
 - 수산물 신선도 변화 측정을 위한 스마트 품질 표지기술 개발
 - 신선수산물 배송용 용기 및 저비용 수산물 전용 보관 쇼케이스 개발
- 수산물 가공시 안전성 담보를 위한 불순물 제거기술과 식감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기술개발
 - 원료 선별·해체, 가공육 수출을 위한 자동화 설비 개발 및 생산라인 개선
 - HMR 전용 포장시설 개발, 고속공정 영상인식 기술개발, 제품별 최적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품질검사 플랫폼 개발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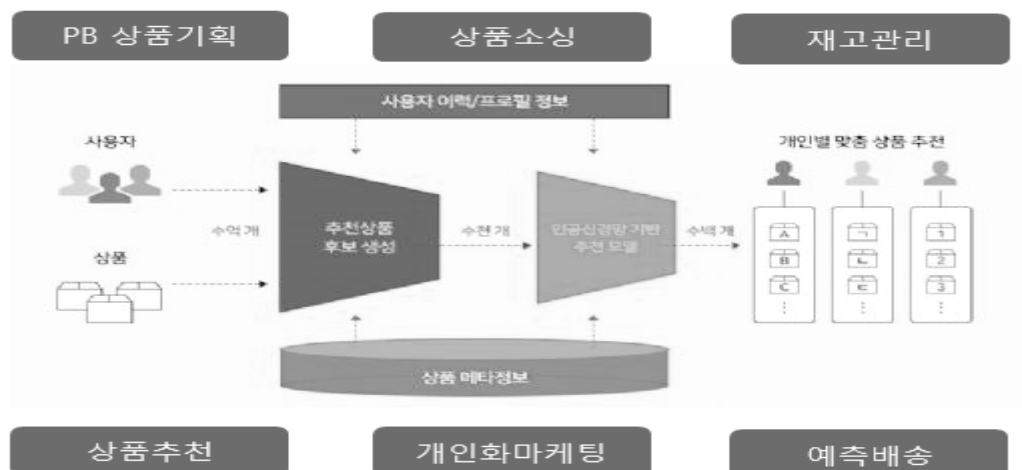
다. 수산업의 지식산업화

□ 소비자 지향적 R&D 추진

- 신선식품의 단계별 안전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유통 시스템 구축
 - 친환경 상변화 물질적용 멀티 보냉팩 및 친환경 포장용기 개발
 - 수산물 신선도 변화 측정을 위한 스마트 품질 표지기술 개발
- 수산물 가공시 안전성 담보를 위한 불순물 제거기술과 식감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 원료 선별·해체, 가공육 수출을 위한 자동화 설비 개발 및 생산라인 개선
 - HMR 전용 포장시설 개발, 고속공정 영상인식 기술개발, 제품별 최적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품질검사 플랫폼 개발 등 추진

□ 수요예측기반 수산물 생산마케팅·추천

- 소비자 데이터를 보유한 유통, 금융산업(핀테크)과 연계하여 수산물 소비선호 데이터 확보 및 이를 분석한 수요예측 서비스 개발
- 수산물 재고관리, 상품소싱, 마케팅, 상품추천 등 온오프라인 수산물 유통과 양식업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서비스 개발
- 예측기반 수산물 유통 서비스를 중소수산물 유통, 수산업 종사자 및 양식어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씨푸드테크 기술 개발

- 씨푸드테크 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동 기술이 사업화 단계까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컨설팅·제품생산 등 전주기 지원
 - 대체식품 원료로 해조류 단백질이 주목, 해조류를 활용한 제품 개발 R&D 확대, 어패류를 활용한 배양육 원천기술 개발
 -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포장재 개발 필요하며, 친환경 포장재로 해조류(알긴산, 카라기난)를 이용한 식용포장재 기술 개발
 - 원천기술 개발이 사업화 단계까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컨설팅·제품생산 등 전주기 지원으로 성공사례 확산 및 효과 극대화
-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 등 씨푸드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

사료 수급 · 이용 실태 및 자금률 제고 방안

2021. 4.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목 차

〈요약〉 사료 수급·이용 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	101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104
Ⅱ. 현황 및 문제점	106
Ⅲ. 기본 방향	111
Ⅳ.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112
1. 사료작물 재배 확대	112
2. 사료작물 이용 확대	117
3. 관련 법령 개선	120
4. 관련 제도 개선	122

〈요약〉 사료 수급·이용 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 소득증가로 축산물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 축산물 수요에 따른 축산물 공급을 위해 가축사육 증가
 - 가축사육 증가에 따른 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지속 증대
- 농업과 축산,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으로 전환 요구 증대
 - 21세기 농축산업이 국민과 함께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환경과의 공존이 필수적
 - 정부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정으로의 전환을 추진
- 농특위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4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
 - 추진과제 중 ‘경종농업 생산작물 축산업 활용을 통한 상생방안’의 세부 과제로 ‘국내산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 농가 수익확보’ 목적으로 추진
-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경지의 효율적 활용, 가축분뇨 사료포 환원을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축산-경종농가가 연계된 조사료 생산 확대가 필요
 - 하지만 국내 조사료 생산은 재배가능 농경지 부족, 낮은 수익성, 축산·경종농가간 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벚짚의 비중이 높은 실정
 - 경축순환연계를 통한 조사료 생산은 가축에게는 영양적으로, 농가에게는 경제적으로, 국가에게는 공익적 기능을 제공
 - 경종농가 입장에서는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 도모 가능
 -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사료작물 이용확대를 통해 경영안정화 도모는 물론 축산분뇨 자원화로 환경오염(분뇨)문제 해결 가능

2 목표 및 기본 방향

1 목표 : 국산 사료작물 생산·이용으로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2 기본 방향

- ① 국내산 사료작물 생산·이용 확대로 양분과잉 해소, 농가 생산비 절감
- ② 경종농가-축산농가간 협력 강화 및 인식 개선
- ③ 생산·유통기반 확충, 체계적인 품질관리 도모
- ④ 사료작물 생산·이용 관련 법령·제도 개선, 정부·지자체 지원책 확충

3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1 사료작물 재배 확대

- ① 경종농가 사료작물 생산기반 강화
 - 경종농가 대상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전문생산단지 확대를 통한 지역내 축산분뇨 사용 연계 활성화
- ②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기반 강화
 - 겨울철 휴경농지, 인근 농지 임대 알선 등 축산농가 조사료 자가 생산 유도
 - 농축협 조사료 사업단 구성·지원으로 소규모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 유도
- ③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경종-축산농가, 지자체, 농축협, 업체 등 참여주체간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강화
 - 지역자원순환형 경축순환 농업지구 선정, 규모화 도모와 함께 시범사업 실시
 - 조사료 품질 강화를 위한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 민간차원(축종별 단체) 계약생산·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2 사료작물 이용 확대

- ①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연계
 - 경종농가 및 소비자 대상 경축순환 연계 생산물(농산물, 축산물)의 우수성을 교육·홍보

② 조사료 유통기반 확충

- 조사료유통센터 정책 개선
- 소규모 농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료 소포장 활성화

③ 체계적인 품질 관리방안 마련

- ‘(가칭)조사료 플랫폼’ 구축·활용 시범사업 추진
- 조사료 수분함량·무게 등과 관련한 표준 조건표를 작성, 보급·활용

■ 3 관련 법령 개선

① 농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농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동계이모작 농지임대 자경 인정

②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등 개정

- 초지 활용해 조사료 생산시 가축분뇨 수거 및 저장시설 보관 예외 추진

■ 4 관련 제도 개선

① 조사료 자급률 산정기준 변경(건물→TDN)

- 자급률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 연구 추진 필요

② 조사료 관련 각종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화

- 권역별 조사료 통계 정확성 향상 위해 정부·대학 등 공동 건본포 조성·운영

③ 품질등급제 강화

- 조사료 생산자와 이용자간 신뢰 도모, 품질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④ 정부부처간, 관련부서간 협조체제 운영

-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정부부처간·관련부서간 협조체제 운영
 - 축산환경정책 :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 농식품부내 업무 분장
 - 축산분야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축산환경자원과)
 - 경종분야 :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식량정책과), 논활용직불제(공익직불정책과), 경관보전직불제(지역개발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농기자재정책팀), 간척지농업과 등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 소득증가로 축산물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 축산물 수요에 따른 축산물 공급을 위해 가축사육 증가
 - * 1인당 국민총소득(\$): ('00) 12,179 → ('19) 32,115 / 육류소비량(kg): ('00) 31.9 → ('19) 54.6
 - * 한육우 사육두수(천두): ('00) 1,590 → ('19) 3,237
 - * 돼지 사육두수(천두): ('00) 8,214 → ('19) 11,280
 - 가축사육 증가에 따른 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지속 증대
 - * 장내발효에 의한 온실가스(백만톤/CO₂eq.): ('00) 3.4 → ('18) 4.5
 - * 가축분뇨처리에 의한 온실가스(백만톤/CO₂eq.): ('00) 3.6 → ('18) 4.9
- 농업과 축산,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으로 전환 요구 증대
 - 21세기 농축산업이 국민과 함께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환경과의 공존이 필수적
 - 정부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정으로의 전환을 추진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과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주요 추진과제로 ①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도입, ②토양양분관리제 단계적 도입, ③가축분뇨 자원 생산-유통-이용 활성화, ④경종농업 생산작물 축산업 활용을 통한 상생방안을 제시
 - 4번째 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국내산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농가 수익확보' 목적으로 추진
 -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양분을 경종농가가 활용하고 축산농가는 경종농가가 생산한 국내산 사료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마련

2 필요성

- 경축순환연계를 통한 조사료 생산은 가축에게는 영양적으로, 농가에게는 경제적으로, 국가에게는 공익적 기능을 제공
 - 조사료는 생장·증체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원으로써 송아지 골격형성, 번식우 산차 증가, 번식률 제고 등에 필수
 - 국내산 조사료는 영양적 가치 대비 수입산에 비해 저렴하고 곡물사료 대체원으로써 사료비 등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가능
 - *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19.) : 한우 송아지 45.5%, 한우 번식우 45.6, 한우 비육우 35.8, 젖소 54.1, 비육돈 52.0, 산란계 57.4, 육계 55.4
 - 가축분뇨 처리와 연계해 환경오염 방지, 화학비료 사용 감축, 토지개량, 국토 이용성 증대, 경관개선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발휘
- 하지만 국내 조사료 생산은 재배가능 농경지 부족, 낮은 수익성, 축산·경종농가간 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벼짚의 비중이 높은 실정
 - 조사료 생산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경지면적 중 조사료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현재 17.9%에 불과
 - * 전체 경지면적 중 조사료 재배면적 비중 : ('00) 6.6% → ('10) 14.2 → ('19) 17.9
 - 국내산 조사료 생산증가로 영영가가 낮은 벼짚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2019년 현재 44.3%로 여전히 높은 수준
 - * 국내산 조사료 중 벼짚 비중 : ('00) 64.5% → ('10) 54.7 → ('19) 44.3
-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경지의 효율적 활용, 가축분뇨 사료포 환원을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축산-경종농가가 연계된 조사료 생산 확대가 필요
 - 경종농가 입장에서는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 도모 가능
 -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사료작물 이용확대를 통해 경영안정화 도모는 물론 축산분뇨 자원화로 분뇨문제 해결 가능

II.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별 생산 및 공급) 국내 조사료 생산이 호남지역에 편중되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
- 2019년 한육우와 젖소 등 대가축 사육 비중은 경북이 20.6%로 가장 크고, 전남(15.7%), 충남(13.8%), 전북(11.7%)의 순
 - 반면, 사료작물 재배면적 비중은 전남이 42.2%로 가장 크고, 전북(16.4%), 경남(9.4%)의 순
 - 지역별 사육두수와 재배면적의 불일치로 인해 전남과 전북, 제주는 조사료 공급에 여유가 있는 반면 경남과 경기, 충남 등 그 외 지역에서는 공급이 부족

〈 시도별 대가축 사육두수 및 사료작물 재배면적(2019)〉

(단위 : 두,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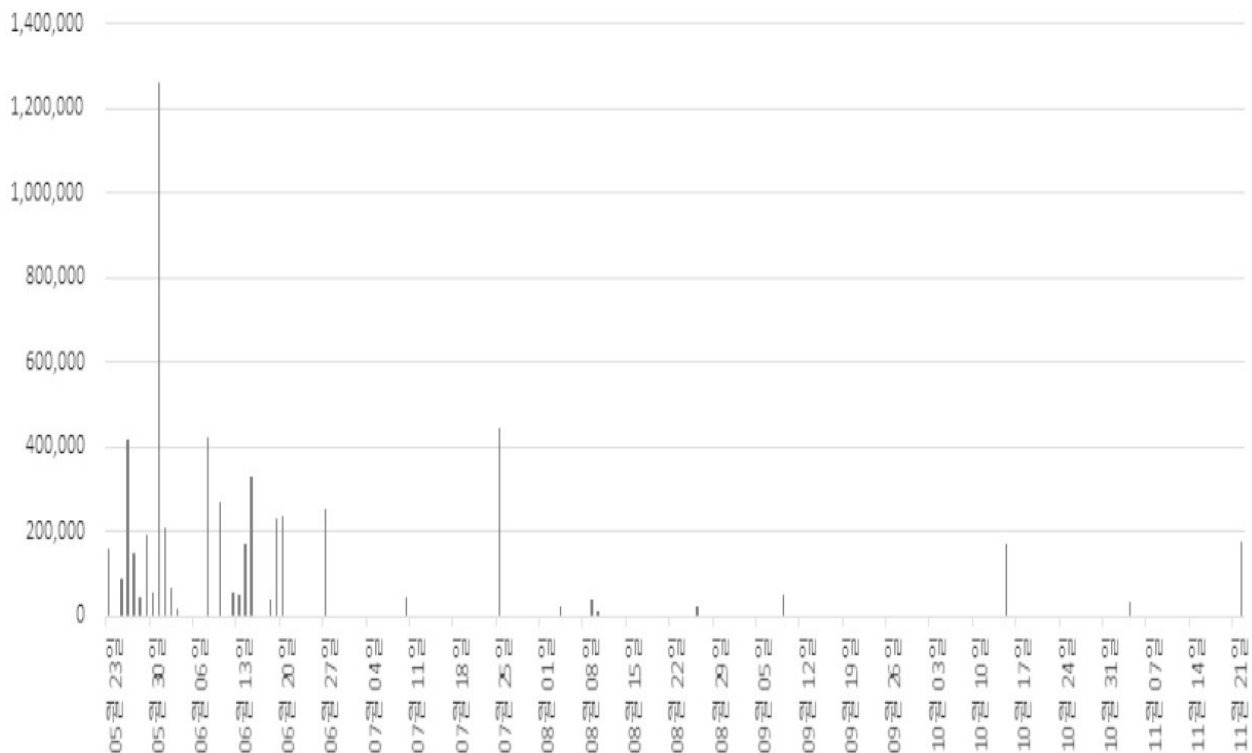
시도별	대가축			사료작물 재배면적	전국대비 비중			
	한육우	젖소	합계		한육우	젖소	대가축	사료작물 재배면적
전국	3,237,055	408,135	3,645,190	100,670	100	100	100	100
서울	98	15	113	0	0.0	0.0	0.0	0.0
부산	1,575	385	1,960	0	0.0	0.1	0.1	0.0
대구	13,538	772	14,310	21	0.4	0.2	0.4	0.0
인천	21,061	3,093	24,154	179	0.7	0.8	0.7	0.2
광주	4,566	646	5,212	191	0.1	0.2	0.1	0.2
대전	4,750	0	4,750	32	0.1	0.0	0.1	0.0
울산	34,321	869	35,190	1,436	1.1	0.2	1.0	1.4
세종	26,347	4,464	30,811	291	0.8	1.1	0.8	0.3
경기	305,160	163,837	468,997	5,211	9.4	40.1	12.9	5.2
강원	231,612	18,977	250,589	3,889	7.2	4.6	6.9	3.9
충북	222,012	20,191	242,203	3,205	6.9	4.9	6.6	3.2
충남	400,150	68,468	468,618	7,363	12.4	16.8	12.9	7.3
전북	394,925	33,157	428,082	16,553	12.2	8.1	11.7	16.4
전남	537,968	30,545	568,513	42,245	16.6	7.5	15.6	42.0
경북	702,696	33,680	736,376	7,407	21.7	8.3	20.2	7.4
경남	300,263	25,051	325,314	8,077	9.3	6.1	8.9	8.0
제주	36,013	3,985	39,998	4,569	1.1	1.0	1.1	4.5

자료 : 통계청

□ (조사료 거래 시기)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는 동계작물 위주로 생산

- 수분 등의 문제로 인해 장기 보관시 발효불량, 설치류·조류 등에 의한 감도가 불가피해 생산시기에 집중 거래
 - 동계 작물인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IRG)와 호밀은 5~7월, 하계작물인 수단그라스와 옥수수는 8~12월 사이에 거래
- 축협 등 조사료 유통센터는 대형 보관시설 부족, 보관비용, 감모, 직접비 등 부담으로 1개월내 판매를 종료하는 실정
 - 대량구매로 인한 자금부담과 보관 장소 부족 등의 어려움 존재
- 대형 곤포 사일리지(약 500kg) 위주로 유통되어 소규모 축산농가 이용에 애로
 - 자금부담은 물론 보관에 애로를 겪음으로써 오히려 수입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요인으로 작용

〈고창부안축협의 연중 국내산 조사료 유통 사례〉



자료: 한국축산경제연구원('17.)

□ (사료작물 생산 및 공급) 국내 조사료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공급은 아직 미흡

○ 국내산 조사료는 아직까지 벣짚이 큰 비중을 차지

- 벣짚 비중 : ('00) 64.5% → ('19) 44.3

○ 최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IRG와 호밀 등 동계 작물의 비중이 높음

- 조사료 공급량 중 IRG와 호밀 비중(벣짚 제외): ('10) 43.7% → ('19) 54.5

- 사료작물에서 차지하는 IRG와 호밀 비중 : ('10) 51.2% → ('19) 59.6

- 조사료 품종별 유통물량 중 IRG 비중 : 78%(한국축산경제연구원, '17년 실태조사)

〈조사료 주요 작목 생산량 및 소요량 추이〉

(단위 : 천톤)

구 분		'00	'05	'10	'15	'16	'17	'18	'19
총소요량(A)		3,392	4,131	5,033	5,526	5,428	5,765	5,896	6,050
합계(B)		2,793	3,432	4,127	4,476	4,303	4,346	4,707	4,872
국내산 (G)	초지 (톨페스큐, 오파드그라스 등)	364	308	273	246	241	238	234	299
	벣짚(C)	1,801	2,134	2,257	2,231	1,744	2,086	2,152	2,157
	사료작물(D)	628	990	1,597	1,999	2,318	2,022	2,321	2,485
	동계작물(D)	-	-	1,001	1,443	1,723	1,388	1,529	1,665
	청보리	-	-	183	105	88	47	196	184
	IRG, 호밀 등 (F)	-	-	818	1,338	1,635	1,341	1,333	1,481
	하계작물	-	-	596	556	595	634	792	821
	옥수수 (총체벼, '18~)	-	-	174	154	124	193	228	275
	수단그라스 · 귀리 등	-	-	422	402	471	441	564	546
	벣짚 비율(C/B)	64.5	62.2	54.7	49.8	40.5	48.0	45.7	44.3
	조사료 공급에서 IRG · 호밀 비율(벣짚 제외) (F/(B-C))	-	-	43.7	59.6	63.9	59.3	52.2	54.5
	사료작물에서 IRG · 호밀 비 중(F/D)	-	-	51.2	66.9	70.5	66.3	57.4	59.6
수입산		599	699	906	1,050	1,125	1,419	1,189	1,178
자급률(G/A)		82.3	83.1	82.0	81.0	79.3	75.4	79.8	80.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조사료 품질)** 국내산 조사료는 생산 후 상당량이 사일리지 형태로 가공·유통

○ 사일리지의 수분함량이 너무 높거나 부패 및 이물질 함유 등의 문제로 축산농가 신뢰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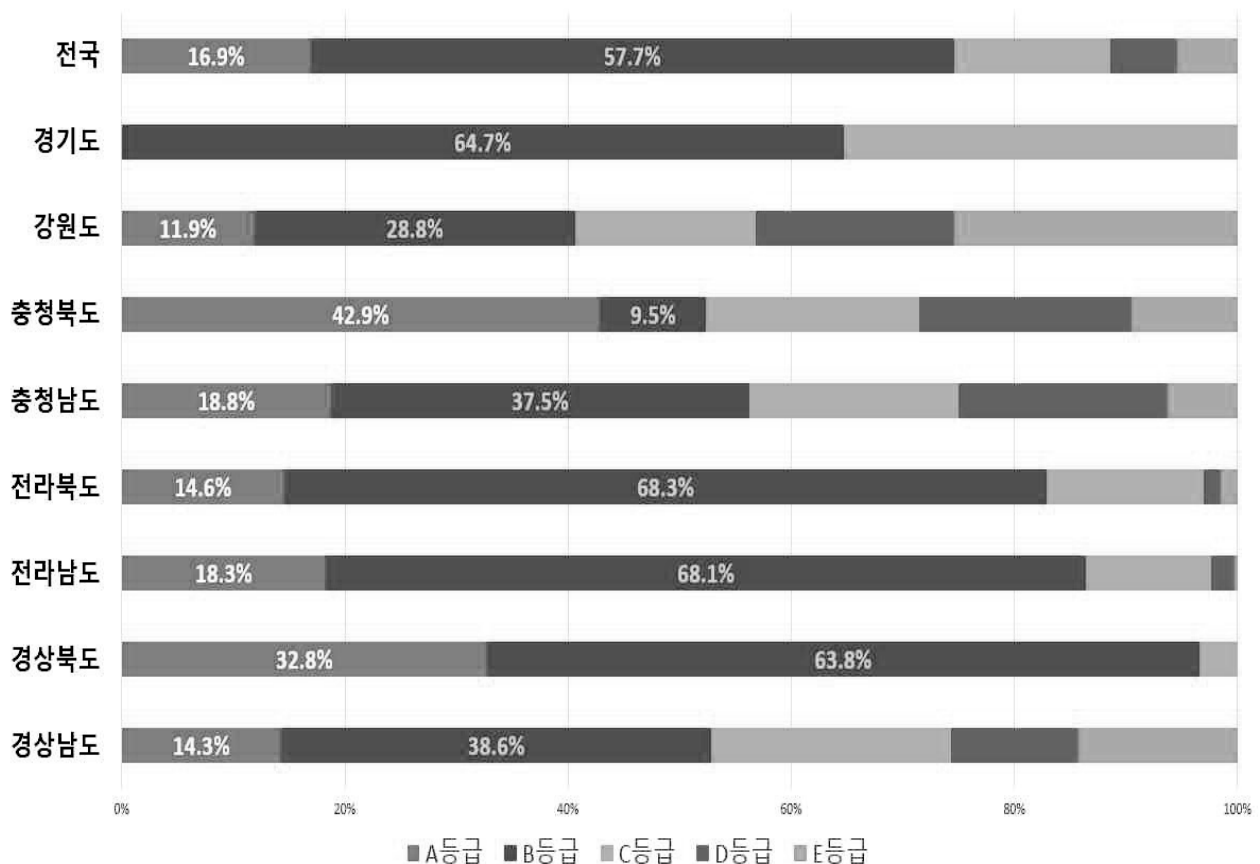
○ 동계작물 품질등급제 실시 이후 수분함량이 낮아졌으나, 축산농가, 조사료 유통센터, TMR제조업체들은 일부 제품의 품질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 동계작물 수분함량 비중 : ('14) 55.9% → ('19) 34.3

○ 지역간 생산환경 및 여건에 따라 품질 및 수분함량 차이 발생

- 초종별 수분 비중('19) : IRG 32.0%, 호밀 44.8%, 청보리 37.4%

〈지역별 동계 사료작물 등급분포(2019)〉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 (조사료 수입)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 균일성 미흡, 양질의 조사료 부족, 연중공급 능력 부족 등으로 젖소농가나 TMR 제조업체 등에서는 수입 조사료를 선호
- 수입조사료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연중 품질이 균일한 일정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초종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축산경제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2017)에 따르면 주요 TMR 제조업체의 국내산 조사료 이용량은 젖소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우 : 25~70% vs 젖소 : 5~47%

〈수입조사료 도입 추이〉

(단위 : 톤)

구분	알팔파	건초	농산부산물	소계	섬유질 배합사료	합계
2010	151,268	690,891	46,152	888,311	16,359	904,670
2011	165,453	745,501	49,214	960,168	42,461	1,002,629
2012	159,599	862,963	60,248	1,082,810	77,069	1,159,879
2013	181,792	861,007	45,878	1,088,677	106,831	1,195,508
2014	187,840	783,037	35,729	1,006,606	125,055	1,131,661
2015	185,956	787,376	24,633	997,965	202,152	1,200,117
2016	202,136	829,314	26,693	1,058,143	316,696	1,374,839
2017	211,988	1,118,751	18,824	1,349,563	218,377	1,567,940
2018	220,293	836,985	17,392	1,074,670	391,405	1,466,075
2019	217,145	816,816	3,740	1,037,701	425,488	1,463,189
2020	210,104	762,061	12,386	984,551	530,652	1,515,203

* 출처 : 관세청, 수입신고기관(농협경제지주,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 HS코드 : 알팔파(1214.90.9011), 건초(1214.90.9090), 농산부산물(2308.00.9000)

*** 알팔파, 건초는 관세청 기준, 농산부산물은 수입신고기관(사료용만 분리) 기준

**** 섬유질 배합사료(2309.90.1040, 사료용 조제품 축우용) : 미국, 호주산

Ⅲ. 기본방향

목 표

국산 사료작물 생산·이용으로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기본방향

- ❖ 국내산 사료작물 생산·이용 확대로 양분과잉 해소, 농가 생산비 절감
- ❖ 경종농가-축산농가간 협력 강화 및 인식 개선
- ❖ 생산·유통기반 확충, 체계적인 품질관리 도모
- ❖ 사료작물 생산·이용 관련 법령·제도 개선, 정부·지자체 지원책 확충

주요 추진 과제

정책 방향

추진 과제

1. 사료작물 재배 확대

⇒

- 경종농가 사료작물 생산기반 강화
-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기반 강화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 사료작물 이용 확대

⇒

- 국내산 조사료에 대한 농가·국민 인식 개선
- 조사료 유통기반 확충
- 국내산 조사료 품질관리 체계화

3. 관련 법령 개선

⇒

- 농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가축분뇨법 개정

4. 관련 제도 개선

⇒

- 조사료 자급률 산정기준 변경(건물→TDN)
- 조사료 관련 각종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화
- 생산실명제 도입, 품질등급제 강화 등
- 정부부처간, 관련부서간 협조체제 운영

IV.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1 사료작물 재배 확대

1.1 경종농가 사료작물 생산기반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 경종농가 사료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절실
 - 동·하계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정부보조금(직불금 포함) 제도의 정비·확충 등이 요구
 - 그러나 현행 정부 정책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정책은 여건 변화로 인해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
 - 논에 타작물 재배시 지급하는 보조금(직불금) 현황('20년 기준)
 - 논 활용(논이모작) 직불금: 50만원/ha(예산 462억원. '17년 이후 고정)
 - 경관보전직불금: 100만원/ha(IRG, 호밀 등 준경관작물. 예산 20억원)
 -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430만원/ha(조사료 재배시. 예산 344억원)
 - * '21년 농업예산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예산 미반영(전액 삭감)

나. 추진계획

-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유희농지, 휴경지, 조사료포 임대 등을 통해 가축분 퇴·액비 살포 부지를 확보하여,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는 농가나 경종-축산 연계 조사료 재배단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
 - * 산지가 많은 경북, 강원지역도 전문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21)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작목 선정, 전문생산단지 확대를 통한 지역 내 축산분뇨
사용 연계 활성화

○ 지원 대상

- 조사료 생산기계 대수 보유, 경영규모가 크거나 대리경작이 가능한
조사료경영체(영농조합법인 등)가 적합

○ 지원 방법

- 소규모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기계 임대, 조사료경영체 조직화·규모화로
대응

- 우량 조사료경영체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국내산 조사료 우수 생산자·생산단체·경영체 전화번호부 제작 및 보급('20)

다. 기대효과

- 자급 조사료는 과잉생산시 타 농산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시장교란이 거의 없어,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에 기여 가능
- 논·밭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유사시 식용쌀 생산용으로 즉시 전환
가능하여 식량주권(안보)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
- 사료작물 연중 공급능력 확대 및 곡물자급률 제고 기대

1.2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기반 강화

가. 현황과 문제점

- 축산농가의 사료작물 자가 생산·활용을 활성화할 필요성 제기
 - 대규모 농가들은 사료작물·조사료 자가 생산·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농지은행(농어촌공사) 등을 활용, 임차 가능한 농지 정보(휴경지, 유휴지 포함) 파악 및 알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요청
 - 반면,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자가 조사료 생산·활용에 어려운 실정
 - 농지(자가·임차) 부족, 농기계(조사료 수확·사일리지화, TMR·TMF 제조·활용 등) 구비·활용 문제 등을 호소

나. 추진계획

- 축산농가 조사료 자가 생산 확대 유도
 - 겨울철 휴경농지를 이용하여 조사료 소요량 중 일부를 생산시, 가축분뇨 처리와 연계하여 조사료 자급 가능
 - 전업 축산농가: 인근 농지 임대 알선, 농지은행(농어촌공사) 활용 정보 제공, 휴경지·유휴지 및 염해농지·간척지 등 활용을 유도
 - 축산농가 대상 사일리지 제조비,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관련 정책 교육·홍보 강화
- 소규모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 유도
 - 경사진 토지, 재배면적 협소시에도 조사료 생산을 위해, 소규모 조사료 생산 지원 확대
 - 소규모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지역농축협 조사료 사업단 구성·운영

다. 기대효과

- 축산농가의 사료작물 자가 생산·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축산환경문제 대응·개선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 효과 등을 기대

1.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료작물·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참여 주체간 협력 체제 강화 필요
 - 경종-축산농가, 지자체, 농협 등이 참여하는 중간협의체에서 정보교류, 의견 조율을 시행중인 일본 사례 참조 필요
 - 조사료 가격·품질·공급량 등 조건 조율로 이해충돌 및 갈등 예방
- 지역내 조사료 생산물의 관외 판매에 대한 지자체의 문제제기, 조사료 생산 농가의 판로 고민 해결을 위해 조사료 유통구조 개선 필요
 - 조사료 주산지(충남, 전북, 전남 등) 지자체, 지방비(도비, 시·군비) 지원으로 생산된 조사료 중 상당량이 관외 지역(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에 판매·활용
 - 반면, 조사료 주산지 농가들은 잉여 조사료 판매 문제로 고민 → 합리적인 해소 방안 마련 요구

나. 추진계획

- 참여주체간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력 체제 구축·강화
 - 경종-축산농가를 포함한 참여주체간 명확한 역할 분담 정보교류, 협의 체제를 구축
 - 지자체, 농·축협, 업체 등도 결합하는 “중간협의체”를 통한 의견 조율 (가격, 품질 등), 갈등 예방
- 지역자원순환형 경축순환 농업지구 선정, 규모화 도모와 함께 시범사업 실시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대, 농·축협, 영농법인 등이 퇴·액비 살포 대행업무가 가능토록 개선
 - 경종농가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 및 교육 강화
 - 지역 내 생산되는 곡물사료, 조사료 등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 마련

□ 조사료 품질 강화를 위한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

-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소 사육두수가 조사료 생산량보다 많은 도(경북, 강원 등)에서 국내산 조사료 이용확대를 위해 조사료 주산지(전남 등)의 조사료 품질 강화 방안 마련
- 지역 기후 및 토질에 맞는 조사료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보급

□ 민간 차원(축종별 단체) 계약생산·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조사료 재배가능 신규 농지 발굴 및 확대를 위한 경종-축산간 협력 체계방안 마련

다. 기대효과

- 참여 주체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가능
- 중앙정부와 지자체 조사료 지원 정책 개선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이용률 제고 기대

2 사료작물 이용 확대

2.1 지역단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연계

가. 현황과 문제점

- 경축순환 방식으로 생산된 국산 농축산물, 사료·조사료 인식 개선 및 활용 촉진 필요
 - 축산농가 대상
 - 국산 사료·조사료 활용·급여시 축산물 품질 향상, 사료비 절감 등 경제성 개선 효과를 부각시킴으로써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 경종농가 대상
 - 관행농법(화학·유박비료, 합성농약 사용) 대비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가축분뇨 퇴·액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용 활성화 요구

나. 추진계획

- 경종농가 및 소비자 대상 경축순환 연계 생산물(농산물, 축산물)의 우수성을 교육·홍보
 - 농축산물 품평회·전시회 등을 활용,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 연계 생산품을 전시·홍보
 - 초·중·고교 및 일반인 대상 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경축순환 연계 국산 농축산물 교육·홍보
- 축산농가 대상 경축순환 연계 국산 사료·조사료 인식 개선·차별화
 -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영대회(농식품부 주관), 축종별 단체 품평회·전시회 등을 적극 활용

다. 기대효과

-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방식으로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에 대한 축산농가(이용농가) 및 소비자의 인식 개선, 이용률 제고

2.2 조사료 유통기반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 조사료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 개선이 절실
 - 자금·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조사료유통센터를 동·하계 수확시기(1개월 정도)만 운영, 실질적 유통기능(물적, 상적기능) 수행에 한계
 - 조사료유통센터 운영자금 지원 한도가 작아, 원활한 운영에 걸림돌
 -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연간 13억원~최대 250억원
 - 조사료유통센터 운영자금: 개소당 8억원 이내

나. 추진계획

- 조사료유통센터 정책 개선
 - 정부 조사료유통센터 등 지원 정책 개선
 - 조사료유통센터, TMR·TMF 운영자 등이 자율적으로 축종별·지역별 현장 실정에 맞는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조사료유통센터 운영자금 지원 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
- 소규모 농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료 소포장 활성화
 - 수분함량 20% 미만인 건초를 소포장(15~20kg 단위)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실증연구 실시
 - * 조사료 소포장시 재포장 비용 발생으로 원가가 상승하므로 수요가 제한적이라 현재는 강진완도축협에서 20kg 소포장 사일리지 판매 중

다. 기대효과

- 축종별, 지역별 실정에 맞는 조사료 유통·수급 체계 구축·운영으로 유통기능(물적, 상적 기능)을 원활히 발휘 가능
- 소규모 농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체계 운영 가능

2.3 체계적인 품질 관리방안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조사료 이용농가(축산농가)를 포함한 거래 주체들에게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한 품질 관리가 필요
-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인 국내산 조사료 거래를 가능토록 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절실

나. 추진계획

- ‘(가칭)조사료 플랫폼’ 구축·활용 시범사업 추진
 - 동·하계 조사료 이용농가(축산농가)들의 5점척도 평가 및 사용후기 등을 게시·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
 - 조사료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생산·유통주체들을 실증연구에 참여시켜 조사료 플랫폼 도입 방안을 검증
 - * 현재 농식품부에서 조사료 온라인 플랫폼 구축 타당성 용역 추진중
- 조사료 수분함량·무게 등과 관련한 표준 조건표를 작성, 보급·활용
 - 국산 조사료 유통시 관행적으로 600~700kg 단위 곤포 롤 단위로 가격 산정·거래하는 관행이 정착
 - 수분함량이 낮은 헤일리지, 건초로 가공시 감도가 불가피하나 판매가격에는 미반영되는 실정
 - 건초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건물량과 수분량, 중량을 감안한 표준 조건표를 작성,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기대효과

- 검증된 품질에 걸맞는 합리적 가격·조건으로 국내산 조사료를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기대

3 관련 법령 개선

3.1 농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동계 이모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규모 농지의 단기임대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 '15년 농지법 개정(제28조8호)으로, 사료작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에 자경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은 미인정
 - 이 때문에 단기임대 허용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조사료 재배를 위한 이모작을 위한 농지 임대를 농업인들이 기피하는 상황

나. 추진계획

- 농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동계이모작 농지임대 자경 인정
 -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조사료 생산시 단기임대 농지에 대해 자경인정이 될 수 있도록,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
 - 동계 조사료 재배를 위해 농지를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농식품부 농지과와 사업관련 지속 협의 추진

다. 기대효과

- 겨울철 유휴 농지(논, 밭) 임대 활성화(축산농가, 경종농가)를 통한 동계 조사료 재배·이용 확대 가능

3.2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등 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은 초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농식품부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추진중
 - 동 사업에 참여하는 상당수 축산농가들은, 초지를 활용해 방목과 함께 조사료를 생산중
 - 그러나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별표 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에 따르면, 방목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어, 초지 방목을 통한 가축사육을 하는 현실 여건과 맞지 않음(아래 조항 참조)
- * 11.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는 발생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나. 추진계획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조항 개정
 - 초지를 활용해 조사료 생산과 방목을 함께하는 경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조치를 예외로 하게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별표 6]의 11.) 및 관련 법조항을 개정
 - 환경부 담당부서와 사업관련 지속 협의 추진

다. 기대효과

- 초지의 특성에 맞게끔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개선·적용함으로써, 정부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가능

4 관련 제도 개선

4.1 조사료 자급률 산정기준 변경(건물→TDN)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조사료 자급률 산정 기준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조사료 관련 자료 및 통계는 모두 건물 기준으로 작성
- 반면 일본·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TDN 기준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산정
 - '19년 일본 사료 자급률 계산 방식(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자료)
 - * 순수 일본산 사료 생산량(829만 TDN톤)/사료 수요량(2,486만TDN톤) = 25%
- 외국과 같은 방식으로 TDN 기준으로 자급률을 산정할 경우, '20년 기준 82% 내외인 조사료 자급률이 45~50%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전문가 추산 결과)

나. 추진계획

□ 조사료 자급률 산정기준 변경(건물 기준→TDN 기준)

- 자급률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 연구추진 필요
 - 중장기적으로 TDN 기준으로 조사료 자급률 산정기준을 변경
 - 단, 정부 통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건물 기준과 TDN 기준을 병기
- 사료 업무 담당 공무원(중앙정부, 지자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면책 등 조치 필요

다. 기대효과

- 국산 조사료 자급률을 보다 명확하게 산출·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자급률 목표치 관리를 포함한 조사료 정책 수립·집행이 가능

4.2 조사료 관련 각종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조사료 관련 정부 통계의 체계적인 정비가 절실

- 현행 농식품부 조사료 수급 현황 기초자료는 종자보급량에 기초한 추정치를 근거로 하고 있어 실제 수급 상황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 여건을 감안한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
- 현재 농식품부 조사료 수급통계와 농축협 등 조사료 집계 자료 등이 불일치하여 통일된 집계 자료 구축 필요
 - 농식품부에서 추진 완료(21년 3월)된 조사료 수급통계기준으로 통일 필요
- 지역간 조사료 소요량, 동·하계 사료작물 생산량, 지역간 조사료 이동물량, 사료용 벼짚 이용량 등 조사료 관련 기초통계 부족

나. 추진계획

□ 조사료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 권역별 조사료 통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한국초지조사료학회, 권역별 연구자(대학),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이 공동으로 견본포 등을 조성·운영하여, 통계 예측시스템 정확성 향상 도모
 - * 현재 농식품부에서 통계관측 조사 실시('14~), '21년도 통계관측 사업자 공모(4월)
 - 이를 토대로 기초적인 조사료 수급, 재배면적 등의 통계 도출
- 품목별 국내외 가격 자료, 국내외 조사료 생산 및 유통동향, 장단기 조사료 수급·관측 전망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정확도 제고

다. 기대효과

- 정부 조사료 정책 수립·집행은 물론, 이용농가(축산농가) 및 유통 주체들에게 정확한 수급·전망 정보 제공이 가능

4.3 품질등급제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산 조사료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한 이용농가 신뢰 제고 필요
 - 동·하계 조사료 품질등급제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에 대한 이용농가 인식 개선 및 품질 제고 효과를 일정 부분 달성
 - 국내산 조사료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목표치 설정과 및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 과거 생산자 중심의 생산 장려에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조사료 재배와 유통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 필요

나. 추진계획

- 품질등급제 강화
 - 조사료 생산자와 이용자간 신뢰 도모, 품질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 등급별 규격에 맞는 조사료를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운영

다. 기대효과

- 국내산 사료작물 및 조사료에 대한 축산농가의 신뢰도 제고 가능

4.4 정부부처간, 관련부서간 협조체제 운영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부처간, 농식품부 내 조사료 생산·이용과 관련한 각종 지원정책들이 분산·시행중이며, 체계적으로 조정·발전시켜 나갈 필요성 제기
 - 축산환경정책: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 농식품부 내 업무분장
 - 축산분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축산환경자원과)
 - 경종분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식량정책과), 논활용직불제(공익직불정책과), 경관보전직불제(지역개발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농기자재정책팀), 간척지농업과 등

나. 추진계획

-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정부부처간·관련부서간 협조체제 운영
 - 정부부처간, 농식품부 내 협조체제 강화로 보다 긴밀한 의사소통과 업무협조체제 구축·운영 필요

다. 기대효과

-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방식을 통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정부부처간, 담당부서간 업무 협조 및 연계성 강화

제8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2021. 4.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제8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1 개요

- ☐ 일시·방식: 2021.2.22.(월) ~ 2.24(수) / 서면회의
- ☐ 참석 인원: 28명
 - (위원장)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
 - (당연직 위원) 5명 중 4명 참석
 - (위촉직 위원) 23명 중 23명 참석
- ☐ 안건(안): 심의 4건, 보고 3건
 - (심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 (심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안)
 - (심의) 국가 식량 계획(안)
 - (심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제도개선(안)
 - (보고)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 (보고) 친환경 양식업을 위한 배출수 관리 및 인증제도 개선방안(안)
 - (보고) 농특위 1기 운영 성과 및 2021년 계획(안)

2 주요 의견 및 심의 결과

【안건심의】

① (심의안건)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 원안 의결 (可 27명, 쟁 0명, 기권 1명)

실경작자 중심 농지소유·이용체계 구축, 농지관리체계 강화 및 민간참여 확대, 농지정보 관리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확대 등의 추진과제를 심의·의결

- 농지구제 강화의 필요성 등 제도개선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제안 내용의 구체적 이행방식과 시기는 적실성 등을 고려하여 확정 필요(김현수 위원)
 - ☞ 본 안건에서 제안된 내용이 국회에 '21.3.31. 농지법 등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폭 포함된 바, 법률 개정안 처리 상황 및 구체적 이행방식과 시기는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추진 계획임.
- 구체적 이행방안의 수립,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농지를 매개로 한 정책사업의 연계 필요(김영재 위원)
 - ☞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이행계획 수립 시 반영 계획임.
- 비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우 농지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농지 매매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도록 기준 마련, 농지 부정 취득에 대한 중과세 강화 방안 마련(김홍길 위원)
 - ☞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이행계획 수립 시 반영 계획임.
- 농지관리기구 신설은 불필요,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강화정비 하여 농지 취득자격 판정 등의 기능을 수행(김홍길 위원)
 - ☞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이행계획 수립 시 반영 계획임.

- 농지특사경제도의 도입 환영, 부처 간 합의하에 우선 추진 필요(김옥임 위원)
 - ☞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이행계획 수립 시 반영 계획임.
- 농지임대제도 보완 시 임차인의 권한 보장 강화, 보호제도 마련 필요(강선아 위원)
 - ☞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이행계획 수립 시 반영 계획임.
- 농지제도는 現 비현실적인 소유규제 방식에서 이용규제방식으로의 획기적 전환 필요(오현석 위원)
 - 강력한 농업구조정책을 전제로 농업인의 농지이용권(임차권)을 강화
 - 농지은행의 선매권 부여와 임차인의 토지이용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토지이용순위를 청년 및 적정규모화가 필요한 경영체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농업구조혁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
 - 공익형 직불제도 농업구조 개선을 고려한 설계 필요
 - ☞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의 선매권 제도에 대해 안전 상정과정에서 논의되었으며, '선진국의 농업인 중심의 이용체계 유도'를 제안함. 또한 토지이용 우선순위와 공익형 직불제도를 고려한 설계 등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이행계획 수립 시 반영 계획임.
- 농지 소유와 이용제도 개선방향이 총론적이어서 의안의결 이후 부처 등과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황수철 위원)
 - ☞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이행계획 수립 시 반영 계획임.
- 농지의 이용과 소유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하며,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유연한 적용 필요(이시재 위원)
 - ☞ 농지 소유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제도 보완을 통해 강화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상속농지 및 이농자의 농지)에 대해 농업 경영의무를 명확화 하고, 일정 기간 이후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처분하도록 제안함. 관련한 세부내용은 이행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계획임.

- 농지문제(소유 및 이용) 중 ‘소유’부분은 정리가 잘 됐지만, ‘이용’과 관련 농지의 ‘농업용도’ 사용 여부와 ‘형상’ 유지 여부를 다루지 못함(김윤식 위원)
 - 현장에서 이를 판단할 주체가 필요하고, 강제 처분 또는 강제 위탁 등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음. 이에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과의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함
 - ☞ 현행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업용도 사용 여부’와 ‘형상 유지 여부’를 다루지 못하는 바 ‘불법행위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 상향’과 ‘농지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한 이용관리 강화 제안함. 또한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 농지정보의 질적개선을 위한 방향 제안함. 관련한 세부내용은 이행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임.
- 농지소유 공개화, 실시간 정보공유제도 도입을 제안(양준일 위원)
 - 농지소유 정보공개 법령시스템은 읍·면, 리 단위별 소유주 확인, 전 시도별 종합 및 소유주 통합관리 필요, 농지관리기구의 신설은 불필요
 - ☞ 토지대장 이외 등기부등본을 통한 농지소유자 정보 확인 필요성 공감하고, 조속한 법령개정 추진 제안함. 또한 농지행정자료 통합관리 및 연계 관리 검토 제안
- 농업 후계자녀에게 농지 이전을 촉진하고, 농지 상속시 나타나는 농지 파편화현상을 줄이기 위한 농지 상속세에 대한 전략적인 개선 필요 (임정빈 위원)
 - 농업 후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낮게 부과, 또는 농업 후계자가 비농업인 자녀보다 더 많은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낮춰주는 제도 도입
 - ☞ 농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차등 혜택 부여는 법에서 규정하는 형평성의 문제제기와 농업인의 혜택 감소 등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관련한 세부내용은 이행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임.

-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소유 및 이행체계 구축의 이행, 실행력 있는 추진체계와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 필요, 중장기 차원에서 농업인과 청년이 주인인 농지 확대 전략 필요(강점심 위원)

☞ 농지 소유권과 이용권 등을 권리이동 정보과약 및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농지관리기구 조직 신설을 제안함. 또한 농업인과 청년 중심 농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의 양도시 '미래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도할 때 추가 혜택 부여 제안*

* 우량농지를 전업농, 2040창업농, 상시 농업종사자 혹은 한국농어촌공사 등 명확한 농업용 목적 이용 대상에 농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차등화 세제혜택 적용 제안

- 귀농 청년의 용이한 농지확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차단 및 농지원부 등록 의무화 등 농지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김영란 위원)

☞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상 정보와 현장정보의 불일치 확인함. 전국단위 농지 소유 및 이용 전수실태조사 추진을 제시하고, 농지관리기구 도입 및 농지정보 관리시스템 질적개선을 제시했음.

- 농지정보 관리 시스템 강화 및 농지정보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필요(오형은 위원)

- 농식품부 데이터와 공간정보 데이터와 연계한 농지정보관리, 농지정보의 접근자 유형별 데이터 공개기준 마련 및 정보공개의 단계별 확장

- GIS를 기반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시 농지보전지역 및 농지경관우수지역 등을 설정, 환경데이터(용수질, 토양도, 생태등급, 생물서식처 등)와 연계하고 환경보전활동을 데이터화하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익적직불 등에 활용

☞ 농지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제안하였고, 구체적 이행방식은 관계부처의 사업·계획·예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이행계획 수립 추진 계획임.

② (심의안건)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안): 원안 의결 (可 25명, 쯤 1명, 기권 2명)

축산기업의 사회적책임 강화, 건전한 사육주체 육성, 적정사육두수 관리 방안 마련, 축산농가 경영안정 방안 등 심의·의결

- 사안이 민감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부처 간 지속 협의 필요 (홍남기 위원)

☞ 이행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

- 정책방향에는 공감하나 충분한 검토·협의를 필요한 만큼 생산자단체,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 진행(김현수 위원)

- 축산기업 진출규제, 공익형직불, 수입보장보험, 가격안정제 등의 도입은 관계부처 및 생산자단체와의 사전협의를 부족했음

- * 일부 생산자단체도 축산기업 진출규제 및 적정사육두수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책수립 시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됨

☞ 축산기업의 진출규제, 공익형직불, 수입보장보험, 가격안정제 등의 도입은 정책방향에 따른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본 의안은 세부 내용보다 정책방향 제시에 초점을 둔 의안.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참석 및 자료 요청을 하였음에도 관계부처가 적극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8차)는 최대한 수행함.

- ‘기후위기에 대응한 축산업의 미래’ 내용의 구체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만큼 국민 공감대 마련 방안을 논의(김영재 위원)

☞ 의안의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도 논의 하겠음.

- 적정사육두수 유지와 축종별 경영안정프로그램은 병행 추진, 기업의 축산 사육업 진출금지 필요(김홍길 위원)

- 축산기업 기준·범위에 ‘(한우)기업자본 주도 위탁사육’ 포함(김홍길 위원)

- 축산 소분과 의결안이었던 ‘축산환경 문제와 관련한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요구(김홍길 위원)

-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보상방안에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비육우 경영안정제, 비육돈경영안정제 도입’을 명시, 정당한 보상 마련(김홍길 위원)
 - ☞ 본 의안은 큰 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기에 이행계획 마련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음.
-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분야 공익 직불제** 우선 도입(김옥임 위원)
 - ☞ 축산분야 공익형직불제는 농식품부, 한우자조금 등에서 추진 중인 연구 결과 후 논의할 예정임.
- 경축순환농업으로 **친환경축산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법적 보호 및 육성조항 마련 필요(강선아 위원)
 - ☞ 본 의안과 친환경축산업 농가 육성은 결국 연결되어 있는 부분임.
- **축산분야 중소농가의 개념 정립*** 필요, 개별농장의 사육밀도 뿐 아니라 읍·면·리 특정공간 단위에서의 사육밀도 제한도 중요(오현석 위원)
 - * EU가 2010년 경부터 도입한 농가유형구분 참고, 경제적 규모를 매출액에 따라 12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대, 중, 소로 개념화
 - ☞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 예정임.
- 축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논의에 앞서 **불법 축사, 환경에 대한 책임, 외국인노동자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자구노력** 필요(오현석 위원)
 - ☞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 검토 예정임.
- 개선과 검토의 여지가 많아 보이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황수철 위원)
 - (과제1)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은 축산기업의 정의가 필요한데 그와 관련한 연구를 하자는 제안에 불과
 - (과제2-1) 축산농가의 사회적 책임 부여 수단이 교육, 홍보 강화로 충분한가
 - (과제2-2) 정부의 청년농 육성정책과 별개로 청년 축산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충분히 논의됐는지, 설득력 있는 논리 필요
 - (과제2-3) 농·축협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와 수단에 관한 설득력있는 논리 전개 필요

- (과제3-1) 구체적인 방안 없이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 사회적협의기구 등 기구 설치만 강조,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가 불분명
- (과제4-1) 축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논거 제시 필요
 - ☞ 향후 이행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인 방안 마련 계획임.
- 전반적으로 좋은 방안이며, 경축순환농업이 친환경적 농업의 중요한 고리가 될 것임(이시재 위원)
- 축산기업의 정의 필요, 일반기업자본의 진출 제제(필요충분 조건), 한우산업 농가 간 이해관계 상충문제 해결, 위탁사육과 생축사업의 형태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정구용 위원)
 - 위탁사업은 초기 자본이 부족 한 신규 젊은 창업농에게 자가 전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여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측면도 있음
 - ☞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 할 계획이며, 위탁사육과 생축사업 형태 관련해서는 관련단체 등과 지속 협의하겠음.
- 적정 사육두수 관리체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 기준은 '국내 육류 소비량' 또는 '경축순환이 가능한 수준' 등에 따라 사육 가능한 두수에 차이가 나는데 이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음(김윤식 위원)
 - ☞ 구체적인 기준과 고려 사항은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임.
- 농축협과 사육농가 사이의 표준계약서 등 도입, 다양한 분쟁 발생(가축 폐사, 일정 품질 이하 생산, 체중 미달 등)시 사육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김윤식 위원)
 - ☞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임.
- 축산분야 공익직불제의 지급 이유만 제기되고, 무엇(사육두수 혹은 초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도입할 것인지 내용이 없음(김윤식 위원)
 - ☞ 현재 해당 부처 및 자조금 등에서 연구 중으로 향후 이행계획수립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임.

- 축산농가의 규모화를 위한 ‘기업의 축산참여’ 공론화 및 검토 필요(양준일 위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해 한우 사육두수를 늘려 경쟁력을 가져야 하며, 축산농가도 규모화로 분뇨를 이용한 초지와 전략생산이 가능한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의 기반 조성 필요
 - ☞ 주신 의견은, 적정 사육두수 관리에 중점을 둔 본 의안과 반대 의견으로, 환경문제 유발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장애가 우려됨.
- 경축순환농가에 국한해 직불금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 **경축 순환형 축산농가의 의무준수 규정·절차**를 명확히 해 시행(임정빈 위원)
 - 일반 축산 농가라도 자발적인 가축분뇨나 악취, 수질 등 환경개선의 노력이 있을 경우 기술지원, 비용분담 등 정책지원책 강구 필요
 - ☞ 해당 부처 등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겠음.
- 축산농가의 사회적 책임 부여를 위한 **의무교육 프로그램 강화**는 매우 적절한 조치이며,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 포함 필요**(강경심 위원)
 - 후계인력 육성방안은 고등교육·대학교육기관 등을 주체로 청년지원정책 제1차 기본계획과 연계한 정책 발굴, 고등학생까지 대상 확대 검토
 - ☞ 현재 교육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행계획 수립 시 부처협의를 통해 관련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지역자원기반의 경우 **지역자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 경축 순환이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분명치 않음**(김영란 위원)
 - 가축사육두수 제한의 경우 생산자단체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 필요, 사회적 합의 기구 내에 축종별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필요
 - ☞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활성화 방안(2019년 의결)과 본 의안에 반영함.
- 농촌공간정비계획과 연계한 ‘축산지구의 집적화와 인프라 마련’ 검토 (오형은 위원)
 - ☞ 관련내용은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처와 협의, 검토하겠음.

③ (심의안건) 국가 식량 계획(안): 원안 의결 (可 25명, 쟁 2명, 기권 1명)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 자급기반 확대,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 기반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 심의·의결

- ①농수산물의 안전성관리와 연계한 품질관리, ②향후 노동력 변화에 따른 식품공급망 영향, ③비대면 수산물 소비확산 방안' 3가지 부분 추가 검토 필요(임준택 위원)
 - ☞ 'Ⅲ-② 먹거리 안전 관리체계 개선'에 안전성 및 품질관리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력 변화에 따른 영향과 비대면 소비 확대 방안은 세부 추진 사항에 추가 예정임.
- 범부처와 민관 협치를 통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추진체계 방안 모색(김영재 위원)
 - ☞ 부처 간 협업과 민관거버넌스 확대는 4대 추진전략이며 세부 추진사항은 '21년 분과 주요의제 및 정책연구 용역으로 추진 예정임.
- 대체육(식물성단백질) 관련 내용은 전면 삭제 요구(김홍길 위원)
 - 대체육과 세포배양육 생산·가공 관련 에너지 고투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낮으며, 고비용으로 경제성도 낮고, 생명윤리성 등 논란 있음
 - ☞ 수용하여 삭제하고자 함.
- 농식품 탄소발자국 감소 지원체계 마련 필요(강선아 위원)
 - 지역 로컬푸드 매장 및 지역사회 소비촉진 방안, 지역 내 다품종 소량생산 농가 육성
 - ☞ 'Ⅱ-① 탄소중립·생태 농어업으로 전환' 과제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을 위한 수립을 포함하였으며, 농특위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와 연계하여 추진 예정임.
- 법적 근거 마련 및 일관된 정책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마련(김옥임 위원, 박금순 위원)
 - ☞ 중점과제 '추진체계 구축'에 법적근거 마련이 포함되어 있으면 행정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은 '21년도 사업으로 추진 예정임.

- 지역 내 생산자 중심의 소규모 가공식품 육성차원에서 소규모 농가공 시 HACCP 예외조항 필요(김옥임 위원)
 - ☞ 관계부처 협의체 및 소규모 농어가 식품 시설 완화 특례조항*을 활용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나 HACCP 예외는 국민들의 인식 문제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함.
 - *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조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별도 마련
- 국가 식량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시장실패나 정부실패 영역을 중심으로 계획 내용을 정하고 실현가능한 추진체계 등 고민(오현석 위원)
 - ☞ 시장실패로 인한 먹거리 미보장과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먹거리 보장 확대 방안 마련을 21년도 분과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 추진 예정임.
- 통합된 실행계획·실천전략으로 각 부처의 관련계획·사업의 통폐합 및 조정, 민-관, 중앙-지방정부, 관계부처 간 정책 추진체계, 추진방식, 역할분담 등을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황수철 위원)
 - ☞ 범부처 통합계획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분과 의제로 선정하여 추진 예정임
- 세부 계획안은 잘 정리됐으며, 조속 제도화 시급(양준일 위원)
 - ☞ 조속한 시행과 제도로써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 중임
- 국가 식량 계획의 식량안보를 문제로 설정했다면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되며,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나눠 세부 목표를 설정한 후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김윤식 위원)
 - 식량의 접근성보다는 지속가능성, 안전한 먹거리 등으로 이슈를 분산시켜 국가 식량계획으로써 담아야 할 내용이 많이 제외됨
 - '식량안보'와 '친환경 및 탄소 감축'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지에 따라 다른 하나는 밀릴 수 있는데 본 계획에서는 동일하게 다뤄지고 있음
 - ☞ 식량안보, 먹거리 보장, 지속적인 생산체계 구축이라는 3대 기본방향으로 선정함으로써 계획이 광범위하게 수립되었으나, 세부적인 사업과 구체화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련할 계획임.

- 식량 자급을 제고 정책과 저탄소 농업정책 간의 상충성을 감안한 세밀한 대책 마련 필요(임정빈 위원)
 - ☞ 농특위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 및 ‘식량주권특별위원회’,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식량자급을 제고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예정임.
- 수산종자 품질표시제 도입 및 관측정보 관련 사업은 미래식량자원사업 보다 ‘**③수산물**’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강점심 위원)
 - ☞ 수산물 종자의 안정적인 보존은 수산물의 자급 기반 확대 뿐 아니라 미래 식량 자원 확보에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현행 유지 필요함.
- 농어민의 가공 육성계획을 국가 식량 계획 방향에 맞춰 보다 구체화, 차별화할 필요(강점심 위원)
 - ☞ 관계부처 협의체 및 소규모 농어가 식품 시설 완화 특례조항을 활용하여 지속 추진할 예정임.
- 교육의 질을 위해 지도사 또는 지도자 양성의 체계적 접근, 교재·교구 개발, 현장 지도와 점검, 기관별 운영되는 식생활교육의 표준 매뉴얼 개발 및 통합 운영방안 필요(강점심 위원)
 - ☞ 식생활교육 표준 교재 개발, 식생활교육 정보 플랫폼 활용 및 전문 지도사 양성 교육 시스템 도입 제시함.
- 포장 쓰레기 저감, 친환경 포장재 유통방안도 병행 검토(강점심 위원, 오형은 위원)
 - ☞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국민들에게 생태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소통하는 방안 마련(오형은 위원)
 - ☞ 식생활교육, 먹거리 지원사업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농어업의 가치, 생태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 하겠음.

- 국가 식량 계획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다음의 내용 제안(김영란 위원)
 - 소제목은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비전은 현재(식량안보 강화와 국민 먹거리 보장 실현)보다 상징적인 것으로 제시 필요
 - 먹거리 기본권 내에 취약계층 지원, 생애주기(아동·노인·여성 등) 먹거리 보장을 포함하고 일반가정·사회복지시설·공동체(마을) 등으로 구분
 -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중앙-지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세부 대상별 혹은 단체별(학교, 복지기관, 공동체 등)로 지원부서 설치
- ☞ 먹거리 보장 단계 세분화와 영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 및 '21년도 분과 주요의제로 선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임.

④ (심의안건)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제도개선(안): 원안 의결 (可 25명, 쟁 1명, 기권 2명)

'중앙회·경제지주, 조합, 조합원' 측면에서 제시된 농협의 조직·구조 제도 개선 과제를 심의·의결

- 제도개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는 공감, 다만 중앙회·경제지주의 임원 및 이사 선출 방식, 조합 설립 인가기준 완화 등은 추가 검토 필요(김현수 위원)
 - 특히 조합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감사위원회의 이해관계자 배제요건 강화 등은 적극 추진 필요
- ☞ 농식품부와 농협 간 협의 후 이행계획 마련 과정에서 반영 추진하겠음.
- 농협중앙회는 '품목별연합회' 체제로 전면 개편, 농민 조합원이 원하는 조직·구조의 전면전환(농협법 개정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필요(김홍길 위원)
 - 조합원의 선택권(구매, 판매사업 등)을 확대, 농협의 독과점적 기득권 해체, 농민 권익보호 등
- ☞ '20년 말에 수립된 『농협 농축산물 유통혁신 방안』 과 『'21년 이후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의 정착 및 성과를 충분히 지켜본 후에 후속 제도개선과제*를 검토하겠음.

* 지주회사체제 종합점검 및 평가, 연합회 방안 연구

- 농특위가 민간조직인 농협에 대한 의결안건을 다루는 게 합당한지 의문, 농업구조 변화에 따른 종합농협체제 혁신방안 필요(오현석 위원)
 - 단위조합의 신경분리를 전제로 연합회 체제 고민,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주식회사와 어떻게 경쟁할 것이며, 그 성과로 조합원에게 무엇을 제공할지를 중심으로 조직·구조 제도개선 방안 도출 필요
 - * 프랑스나 네덜란드, 독일 등 농업계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행을 통해 농식품시장과 금융자본시장의 경쟁관계 변화에 대응해온 과정의 검토 필요
 - ☞ 농식품부와 농협 간 협의 후 이행방법과 계획 등을 결정하도록 유도, 『농협 농축산물 유통혁신 방안('20년)』과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의 정착 및 성과를 지켜본 후에 후속 제도개선과제로써 검토하겠음.
- 안건의 목표에 부합된 방식으로 개선과제가 도출됨(황수철 위원)
- 농협 경제사업은 '협동조합 체제 유지'와 '경제사업 활성화'의 두 가지 목표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둘지 결정해야 할 것임(김윤식 위원)
 - 중앙회와 지주사 등은 협동조합 체제를 유지하되,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산하조직은 일반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만들어 시장상황에 빠르게 대응
 - ☞ 체제 유지와 경제사업 활성화는 동시에 접근할 문제라고 사료 됨.
 - *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협 정체성 강화
- 농협개선방향은 제도적 체제 보다는 중앙회의 자율적 경영을 모색하도록 경영방향의 보완 필요(양준일 위원)
 - ☞ 농식품부와 농협 간 협의 후 이행방법과 계획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음.
 - 경제지주와 조합과의 경쟁 재정리, 교육지원기능 역량 미흡 대책, 교육지원대상확대 중앙회 일원화, 경제지주 인재활용방안, 품목 이사의 비율, 좋은농협위원회 후속 조직(필요 시 소위원회 구성) 검토 등
 - ☞ 제안 검토의견과 위원회 추진 방향과 일치. 좋은농협위원회 후속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시 농특위의 권한 및 역할, 위상 등을 고려하여 충분하게 논의 후 결정하겠음.

- 여성의 조합원 가입 및 임원 진출 제한의 개선 필요(김옥임 위원, 김영란 위원)
 - ☞ 후속 제도개선 과제로써 조합원 제도 및 조합 발전 방안 연구가 제안되었고, 관계부처 및 정치권의 지속적인 논의가 예상됨.
- 로드맵 수립, 사회서비스와 관련 된 조합원의 복지도 중요(김영란 위원)
 - ☞ 조합사업과 경합 등 조합원 실익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연구와 논의 필요함.
- 사회적경제 분야의 경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조합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영역까지 확장(오형은 위원)
 - ☞ 조합사업과 경합 등 조합원 실익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연구와 논의 필요함.

【안전보고】

① (보고안전)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신규 가격안정 제도 시행,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추진, 민·관 협력 수급조절 체계 구축, 수입농수산물 대응 강화 등 보고·논의

- 쟁점사항별 정리된 내용 제시 및 부처와 추가 논의 필요, 정책사업 연계 필요(김영재 위원)
 -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소분과, 분과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쟁점별 입장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부의
 - ☞ 제시 의견을 참고삼아 올해 농가 경영안정 과제 추진 하겠음.
- ‘가격위험완충제도 시행’에 대한 분명한 표현 필요,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가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으로 가능할지 불분명함 (황수철 위원)
 -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 문제는 매우 첨예한 쟁점으로 현재 안전 수준에서 그 설립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 ☞ ‘가격위험완충제도’ 시행을 위한 검토를 농식품부에 제안한 것임.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은 농식품부의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21년 상반기)’ 추이를 살필 예정임.

- 개선대책으로 ①생산유통부터 산지계약재배 확대로 계약재배의 풍토를 제도화, ②경매법인 제도를 지속 축소화하는 제도를 제안(양준일 위원)
 - ①가격 급등·폭락을 최소화, 생산자 안정과 소비자 보호, 미국 등 선진국은 계약재배로 등락이 최소화된 농산물 가격안정 추구, 산지폐기 문제점 예방 가능
 - ②경매법인(농산물 과잉·부족 여부에 관계없이 수수료 챙김, 지역조합에서도 수수료를 받아 농민과 소비자 이익에 불리)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기록경매(기록상장)는 위법일 수 있으나 이제는 투명하게 가야 함
- ☞ 제시 의견을 참고로 하여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음.
- 국가 식량 계획(안)과 연계한 전략을 수립, 실행한다면 성과가 확대 될 것으로 봄(강경심 위원)
 - ☞ 올해 농가 경영안정 과제 추진(예정)시 참고하겠음.

② (보고안전) 친환경 양식업을 위한 배출수 관리 및 인증제도 개선방안(안)

양식장 배출수 관리 법제도 개선, 양식수산물 통합인증제도 마련, 친환경 양식생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 보고

- 해수부 담당 부서(어촌양식정책관실)와 추가 검토·협의 필요(문성혁 위원)
 - ☞ 본 의안은 농특위 보고안전으로서, 향후 구체적인 정부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경우, 부처 및 어업인 단체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겠음
- 의안 보고서의 제목과 일부 용어의 수정 필요(임준택 위원)
 - ☞ 서면검토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내부 협의를 통해 의안 제목 및 용어 수정을 진행하겠음
- 인증제도의 경우, 수산물 품질, 친환경, 이력제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단순 통합이 아닌, 양식 어종별로 친환경, 품질, 이력제 등을 종합하는 세부 인증기준 마련 필요(임준택 위원)
 - ☞ 의안 내용에 양식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품질·친환경·이력제 등을 통합한 공통인증기준과 양식 품목별 세부인증기준을 분리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았음

○ 인증 어업인에 대한 지원방안 보강 필요(임준택 위원)

☞ 양식어업인 인증 취득 확대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어업인 지원 방안을 '인증 전', '인증 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③ (보고안전) 농특위 1기 운영 성과 및 2021년 계획(안)

농특위 출범 후 1기 운영 성과, 2021년 위원회 기본방향 및 3개 분야 주요 추진과제, 대국민 소통·성과 확산 등 운영계획안 보고

○ 1기 운영 성과로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아직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큰 틀의 정책 전환이나 공감할 만한 성과는 미흡함(임정빈 위원)

☞ 2기에서는 더 노력하여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운영위에서 종합 논의 후 농특위 입장에서 부처에 전달하는 체계임. 2기에서는 내용 공유와 활발한 논의필요(곽금순 위원)

☞ 2기에서는 분과별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준비하겠음.

○ 농특위 역할을 결정하고 집중할 필요, 1기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체계 정비(오형은 위원)

- (역할)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의 전환된 정책을 제시

- (방법) 농어민 단체만이 아니라 국민과의 논의 협의를 통해

- (위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 (운영체계)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사무국의 역할 정비, 개별 분과위원회간 논의와 협력을 통한 농특위의 역할 이행, 의결안전의 시행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실질적 성과 관리 필요

☞ 주신 의견을 2기 운영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 수산분야의 연구용역과제는 3월 수산TF에서 논의 후 확정할 예정임 (이춘우 위원)

- 청년세대 취·창업활성화 및 청년농 지원육성을 위한 중앙단위 청년농 육성 전담기구 및 제도 마련은 중요함(강선아 위원)
 - ☞ 의결안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행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임. 향후 진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농어업분야 청년세대 취창업 활성화 방안과 농산어촌 발전의 신주체로서 청년층 지원 및 육성 방안 의제는 제1차 청년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실행계획수립 필요(강경심 위원)
 - ☞ 의결안건의 이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제1차 청년지원정책과 연계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음.
- 농어촌의 양성평등 및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 필요(강경심 위원)
 - ☞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에서 논의되도록 제안하겠음.
- ‘범 농어업계 및 대국민 소통 추진’시 라디오 등 미디어 활용과 서포터즈 활동 등을 농특위 온라인망과 연계해 홍보(강경심 위원)
 - ☞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 섭외를 통한 위원장 등의 출연을 적극 추진하고, 서포터즈 포상제도 등을 제공해 농특위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음.

【추가 사항】

- ☐ 쟁점사항이 많은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음 본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겠음
- 원안 의결 (可 26명, 쟁 1명, 기권 1명)

3 향후 계획

- ☐ 심의 안건(4건)은 표결에 따라 원안 의결하되, 제기 의견은 조치계획 검토 및 향후 세부 이행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검토
- ☐ 보고 안건(3건)은 서면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추진

MEMO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a handwriting practice worksheet. It consists of approximately 20 horizontal dott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plain white, and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present.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lined paper, likely from a notebook or memo pad. At the top, there is a dark gray horizontal bar with the word "MEMO" written in white, bold, sans-serif capital letters. Below this header, the page is filled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providing space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